



이교덕 · 임순희 · 조정아 · 이기동 · 이영훈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www.kinu.or.kr



이교덕 · 임순희 · 조정아 · 이기동 · 이영훈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인 쇄 2007년 12월 29일

발 행 2007년 12월 29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2275-532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2285-0936)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 이교덕·임순희·조정아·
이기동·이영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연구총서 ; 07-06)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17-7 93340 : ₩10,000

309.111-KDC4
951.93-DDC21

CIP200700404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I. 서론	1
II. 통치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의 변화	7
1. 통치이데올로기의 변화	9
2. 권력구조의 변화	19
3. 세대교체와 후계구도	28
III. 경제제도와 조직의 변화	39
1. 신제도주의 이론과 북한경제의 변화	41
2. 북한의 경제위기와 제도변화	46
3. 7·1조치 이후의 제도변화	58
IV. 북한주민 생활과 의식 변화	75
1. 북한주민의 생활변화	77
2.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93

V. 교육정책과 교육현실 변화	137
1. 공교육 약화와 교육의 사적 영역 확대	139
2. 발전교육론의 부상과 ‘수재교육’	154
3. 교육의 ‘현대화’와 비리의 확대	176
VI. 결론	189
참고문헌	201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7

표 목 차

<표 Ⅲ-1> 탈북자가구별 소득 원천	60
<표 Ⅲ-2>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70
<표 Ⅲ-3> 탈북전 직장 근무현황	73

그림목차

<그림 Ⅲ-1> 제도변화의 과정	44
<그림 Ⅲ-2> 북한 경제위기와 제도변화의 경로	57

I

서론



I
II
III
IV
V
VI

영국의 보수주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버크(Edmund Burke)는 변화의 수단이 없다는 것은 보존의 수단이 없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¹ 바꾸어 말하면 보존하려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공언하고 있으나 버크의 지적대로라면 ‘우리식 사회주의’의 유지를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며, 그래서인지 북한 당국이나 북한 사회는 의도적인 것이든 아니든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뚜렷이 달라진 점의 하나는 엄격한 사회통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주로 경제사정 악화와 관리들의 부패 탓인데 경제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오가고 북한 각지를 떠돌아 다니는 한편, 관리들도 생계나 축재를 위해 불법행위를 묵인해 줌으로써 이전처럼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국민 개개인의 활동과 생각을 완벽히 통제하려는 정권은 많았지만 그 어떤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정권이 하나둘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이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고 ‘과학’이자 ‘생명’이라고 자기최면을 걸어 왔으나² 아마도 사회주의체제의 획기적 변화나 실질적 포기라는 인류역사의 대세를 북한만이 혼자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북한이 과연 변화하고 있느냐는 문제는 논쟁 속에 휩싸여 있다. 이는 무엇이 변화이고 무엇이 과거와 달라져야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¹- Edmund Burke,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1790).
²-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1월 14일),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994년 11월 1일), 『김정일선집 13』.

있는지 하는 변화의 개념과 영역, 정도에 관한 이해와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각기 관점이 다르므로 논쟁의 해소도 쉽지 않다.

논쟁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 나아가 북한연구가 ‘설명’과 ‘예측’이 가능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로 발전하고 연구주제를 소화하며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입수와 적절한 연구방법의 구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자가 북한에 직접 가서 연구주제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며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란 아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1차 자료도 절대량이 부족하고 북한의 출판물, 대중매체 등의 1차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북한 정권이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점차 늘려 나가면서 이러한 장애요소가 개선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자료부족과 자료의 입수상 제약, 자료의 신빙성 문제 등은 북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가로막는 일차적 난제이다.

하지만 이처럼 북한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자료상의 난점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정된 자료의 최대한 활용은 그 도전의 출발점일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사회에서 살다 온 탈북자(새터민)의 증언은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새터민의 증언은 연구자가 북한사회의 성격이나 변동의 특성을 경험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입수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용에 조심성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많은 유용성과 중요한 의의를 가진 연구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대내외적으로 발표하는 제도의 변경은 공식 문헌이나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파악이 가



능하지만 불법적인 형태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즉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문화 등의 비공식적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추적은 현재로서는 새터민의 증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통일연구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매년 새터민을 초청하여 북한사회의 실상에 관한 증언을 청취해 왔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새터민들은 자신의 생활환경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북한 실상에 관해 말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수집된 새터민의 증언을 중심으로 북한이 과연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다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가장 뚜렷한 변화가 무엇인지 그 변화실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 가지 문제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그것은 변화의 시점을 확정하는 문제이다. 즉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북한사회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를 획정할 수 있는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통상 사용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체제가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된 1998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6·15 공동선언’이 있던 2000년, 7·1조치가 단행된 2002년 등이다. 시점을 예컨대 1년 또는 2년, 가급적 짧은 시간단위로 구분하면 미세한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단위로 구분하여 북한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매년 방대한 양의 증언채집이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할 뿐 아니라 새터민의 증언내용이나 북한사회가 짧은 시간단위로 큰 차이를 보일만큼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일반적으로 북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7·1조치이다. 7·1조치가 북한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었든 거꾸로 그 이

I

II

III

IV

V

VI

전의 북한사회 변화가 반영되어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든 7·1조치 무렵의 북한 사회는 과거의 북한사회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더욱이 2007년은 7·1조치가 시행된지 5년째되는 해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2002년을 북한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점으로 삼고 그 이전의 북한사회와 그 이후의 북한사회가 분야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여기에 다루어진 분야 모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의미있는 시기적 구분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고 7·1조치의 영향은 분야별로 편차가 있다. 예컨대 교육분야의 변화를 추적함에 있어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이 더 큰 의미가 있다. 경제난은 학생의 학급출석을 저조나 교과서 보급 중단 등 공교육의 약화와 사교육의 등장이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따라서 7·1조치라는 시점은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경제분야와 사회분야에만 엄격히 적용된다. 정치와 교육 분야는 각기 199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중반이 시점인데 이는 7·1조치가 2002년에 시행되었지만 그 조치의 배경은 이전의 현상들에 있음을 상기할 때 4개 분야의 변화를 구분한 시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각종 문헌자료와 새터민의 증언을 교차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 가운데 새터민의 상세한 증언내용은 통일연구원이 2007년에 개발한 새터민 증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II

통치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의 변화



북한체제의 특성상 정치문제, 특히 권력구조에 관한 일반주민들의 접근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일반 새터민들의 증언으로는 정치변화를 추적하기 어렵고 권력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위층 탈북 새터민의 증언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위층 탈북사례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모든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정치체제의 변화가 가장 느리고 잘 발견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북한 정치분야의 변화는 새터민들의 증언을 참고로 했지만 다른 자료의 분석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1. 통치이데올로기의 변화

가. 선군사상의 김정일주의화

북한은 목표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을 고수하는 가운데 선군사상을 실천이데올로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³ 북한은 이미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더불어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정하고 선군사상의 일색화 운동을 전사회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철학적 원리로서 총대철학, 영도방법으로서 선군혁명영도, 그리고 혁명이론으로서 선군혁명이론이라는 사상적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선군사상의 사상적 체계는 주체사상의 그것과 내용은 다르지만 형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⁴

북한은 2004년부터 선군사상의 체계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김정일주의로의 발전에 대한 관심은 김정일주의와 선군정치를 최초로 연계한 1999년경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를 전후로 북한은 1997년

3- 이기동, “선군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이우영 외, 『화해·협력과 평화번영, 그리고 통일』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참조.

4- 선군사상의 사상적 골격에 대해서는 “선군사상에 관한 전국연구토론회,” 『조선중앙통신』, 2004년 12월 21일.

I
II
III
IV
V
VI

10월 김정일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고난의 행군과 유훈통치를 마감하고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체제를 재정비하였으며,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내세움으로써 선군정치의 효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수년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마감하고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난국돌파의 과정에서 북한은 선군정치를 선군사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김정일주의로 정착시키는 것에 대한 효용성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사상(idea)이 통치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은 그 사상이 국가나 체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수단으로서 효능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선군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화를 위해 근로인민대중이 아닌 군대를 선군혁명과 건설의 기둥이자 주력군으로 삼고 선군사상이 주체 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선군사상을 김정일주의로 발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여러 측면에서 발견되고 있다.

첫째, 2004년 말까지만 해도 김일성은 선군사상의 창시자이고 김정일은 이를 하나의 완성된 사상이론으로 정립·체계화한 선군사상의 구현자이자 선군정치의 창조자로 엄격히 구분해⁵ 오던 것에서 벗어나 2005년 초부터 선군사상과 선군정치 모두 김정일이 창시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하여 선군사상은 김정일의 사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선군정치 개시일을 1995년 1월 1일 김정일 위원장이 다박솔 초소를 직접 시찰한 날로 삼았다가 1960년 8월 25일 김정일 위원장이

5-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일관하게 구현해 오신 선군 사상과 로선을 계승하고 시대의 발전과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심화 발전시켜 하나의 완성된 사상이론으로 정립 체계화 하셨습니다” ‘선군사상에 관한 전국연구토론회’, 『조선중앙통신』, 2004년 12월 21일.

당시 김일성 주석을 수행하여 유경수 105탱크사단을 시찰한 날로 소급하였다.⁶ 이러한 소급을 통해서 김정일이 1964년 시작한 당사업보다 군사업을 먼저 시작했음을 부각시켜 선군후당의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선군전통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 선군사상과 주체사상의 일체화를 각인시키고 선군사상과 주체사상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려 사상적 혼동과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는 한편, 선군사상을 김일성의 군중시사상에 기초하여 김정일 위원장이 체계화한 사상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체화 노력과 시도들은 선군사상의 체현자만이 선군전통의 계승 자격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넷째, 나아가 주체사상보다 선군사상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02년 이후 북한이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선군사상 일색화 운동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새터민은 “2002년을 전후로 중앙당 총무부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바치는 문건이나 전문에서 주체사상 대신 선군사상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였고,⁷ 또 다른 새터민도 “과거에 주체사상이 차지했던 자리에 지금은 선군사상이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⁸ 그는 매주 토요일 정치학습 시간에 주체사상보다 주로 선군사상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비중이 훨씬 커졌다고 밝혔다.⁹

6- 『로동신문』, 2005년 8월 25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업적을 민족의 제일국보로 빛내어나가자”에서 최초로 소급했다.

7- 새터민 P00(37세, 안전원, 평안남도 출신, 남, 2006년 탈북)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2일.

8- 새터민 J00(38세, 외교관, 평양시 출신, 남, 2006년 탈북)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20일.

9-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정치학습은 집중강습과 정규학습으로 구분되는데, 집중강습은 별도의 사안이 발생할 때 실시한다. 위의 새터민 인터뷰.

그러나 선군정치·선군사상이 북한의 선전당국이 의도하는 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내면화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새터민들은 대체로 선군정치가 실시되면서 군·민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고, 북한주민들은 ‘선군’을 “군대가 하라는대로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선군이 군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예컨대 “어떤 행사가 개최될 경우, 착석하는 서열을 정할 때 직급상 군인이 낮더라도 선군을 내세워 당이나 정부의 간부들보다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이다.¹⁰

그리고 북한에서 정치학습 강사를 했던 새터민은 “거의 대부분의 북한주민은 정치학습과 그 내용에 대해 싫증을 내며 그 시간 동안 주로 다른 생각을 하고, 강사 역시 사명감과 책무보다는 평가권한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데 더 열심”이라고 증언하였다. 심지어 그는 김정일 위원장 스스로가 “말로 할 것은 다했으니 이제는 강력한 통제밖에 없다”고 지시했다면서 “사상교양을 통한 주민의식 통제가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다.¹¹

한편 선군은 군림뿐만 아니라 군대의 부패와 주민착취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군대와 주민들 간의 마찰과 충돌이 발생하고 군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한 새터민은 “예전에는 보위원이나 안전원은 주민들을 착취하고 괴롭히지만 군인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말이 있었으나 요즘 들어서는 군인 때문에 못살겠다는 말이 유행한다”고 증언하였다.¹²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선군정치를 쉽

¹⁰ - 새터민 L00(45세, 무역업권, 평안남도 출신, 남, 2005년 탈북)과의 인터뷰, 2007년 10월 2일.

¹¹ - 새터민 J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20일.

¹² - 새터민 P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2일.

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이미 국방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조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군사·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이 볼 때 군을 주체로 경제개혁을 하면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제위해요인들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선군과 실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정책노선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나. 실리주의

북한은 1994년 김정일 명의의 문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가 사실상 ‘실리사회주의’의 효시라고 시사하고 있다.¹³ ‘실리’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98년이다. 그리고 2001년 10월 3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김정일의 문건이 발표되면서 ‘실리사회주의’로 정식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2년 7월 이른바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후속조치들이 연이어 시행되었다.

7·1조치는 개인경작지 확대, 식량 및 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물가와 환율·급여의 인상과 현실화, 평균주의 배격 등 시장경제 요소들을 다분히 반영하였다. 이 조치는 인플레이 상승과 소득분배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 각종 부작용도 초래했지만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가,

¹³ “당시에는 실리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것을 <경제적효과성>이란 개념으로 논했지요. 그를 옹기 보장하기 위한 방도를 연구한 논문도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액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환원되는 리익을 선차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사상이 오늘까지 내려 오면서 실리란 개념으로 정식화되었다고 봅니다” 허재영, “<실리사회주의> 리론의 맹아,” 『조선신보』, 2001년 9월 25일.

산업시설 확충, 식량증산 등 경제와 주민생활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최근에도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기업관리에서의 실리주의원칙을 확실히 견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북한의 실리주의에 입각한 정책의 변화는 비경제적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북한은 2002년 7월 북·일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이 납치자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일본인 납치사실을 인정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김정일 위원장의 고백외교는 일본으로부터 약 1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대일청구권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또한 북한은 경제재건에 절실히 요구되는 국제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테러지원국 해제 등 미국이 취하고 있는 각종 대북 제재의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핵폐기를 대가로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은 실리적 관점에서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 및 전통적 적대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라는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자칫 체제에 위협적인 요소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이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원칙까지 포기하면서 실리를 도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 즉 “사회주의원칙 하의 실리보장”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표방하도록 하는 이유이다.

북한은 실리사회주의를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⁴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실질적으로 인민이 덕을 보는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¹⁵ 종합하면, 실리사회주의란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인민들의 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실리를 얻도록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실리사회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사회주의원칙’, ‘인민들의 혜택’, 그리고 ‘최대한의 실리’이다.¹⁶

여기서 ‘사회주의원칙’과 ‘최대한의 실리’의 병행 문제, 즉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확보하는 문제가 양립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은 사회주의원칙의 핵심을 집단주의에서 찾고 있다. 사회주의적 실리는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실리와 다르게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⁷

하지만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이 지난 60여 년 간의 실험으로 이미 입증한 바이다. 그리고 실리사회주의는 과거로부터 포기할 수 없는 성격으로서의 사회주의와 미래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성격으로서의 실리주의라는 이중성격이 중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성격은 실리주의가 사회주의 체제와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장식물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이 당면한 여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주의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실리주의적 성격이다.

14- 김정길,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 『경제연구』, 2003년 1호(2002), p. 13. 논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데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종자는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15- 럽병호, “집단의 힘으로 일떠세운다,” 『조선신보』, 2002년 11월 22일.

16- 실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대해 한 새터민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비용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 새터민 P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2일. 여기서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7- 『조선신보』, 2002년 11월 22일.

I
II
III
IV
V
VI

따라서 실리주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원칙이 지켜지기는 매우 어렵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은 실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만두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한번 계획된 것은 기필코 밀고 나가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비효율적 기업에 대한 청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¹⁸ 이와 같은 계획의 중도 폐기와 기업 청산 등의 요소들은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며, 개혁사회주의나 시장사회주의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들이다.

결국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원칙을 형식적으로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실리를 우선시하는 이중전략을 추구할 것이다.¹⁹ 북한은 이미 ‘자력갱생’의 개념 변화를 통해 경제운용방침으로서의 실리주의를 수용하였다. 전통적 의미의 자력갱생은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 지금은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자력갱생의 의미 변화는 과거의 자력갱생으로서는 당연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선진기술의 도입은 더 많은 실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자력갱생의 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민들

¹⁸ -한정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위원장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원칙적 문제,” 『경제연구』, 2002년 4호 (2002), p. 2~3.

¹⁹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서울: 선인, 2004), p. 20.

²⁰ -정영철, 위의 책, p. 172. “자력갱생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것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력갱생한다는 것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이미 발명하였고 발전시킨 기술은 우리가 새로이 연구하는 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에게 설득하기 위해 자력갱생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변용한 것이다.²¹ 이는 앞으로 북한이 남한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로부터 선진 과학기술을 과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자력갱생의 원칙은 “자기의 힘으로”라는 기존의 원칙을 변용한 것으로 향후 북한이 사회주의 원칙과 실리주의 원칙 간의 모순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²² 북한당국은 핵심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주변 원칙의 변용을 통해 정책과 노선의 변화를 정당화할 것이다.

‘실리사회주의’는 북한체제의 개혁을 정당화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주도적인 ‘개혁’²³과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 왔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2003년 3월에는 전국적으로 종합시장을 개설하였고 5월에는 인민생활공채를 판매하였으며 2004년에는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협동농장에서의 ‘포전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건설을 위한 ‘자본주의와의 동거’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21- 김정길은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틀어 쥐고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하여 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널리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정길,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 p. 14.

22-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 오늘의 자력갱생이다,” 『근로자』, 2002년 10월호.

23- 북한은 2003년 6월부터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스스로 그동안 기피해 왔던 ‘개혁’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하였다. “종합시장 창설이 보여주듯이 대담하고 유연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조선의 ‘경제개혁’의 특징,” 『조선신보』, 2003년 6월 16일.

I
II
III
IV
V
VI

이 때문에 결국 북한이 자본주의 법칙을 따르라고 요구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²⁴

앞으로 북한당국은 선군이데올로기와 실리주의를 결합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군’과 ‘실리’ 모두 북한당국으로서는 여전히 체제유지에 효과적이고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군대에서의 실리주의 창출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군대의 사업이 실리주의원칙을 가장 충실히 따르고 그 결과 군대의 사업실적이 제일 우수하므로 사회가 군대의 실리주의 모범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할 것이다. 선전선동 방법으로 거시적으로는 선군실리주의를 내세우고 그 안에 앞의 내용을 담는 방법이 있고, 미시적으로는 혁명적 군인정신의 3대 요소인 혁명의 수뇌부결사용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과 더불어 실리추구정신을 포함시킨 다음 지금까지처럼 사회가 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사상교양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향후 북한은 이른바 선군정치와 실리사회주의를 결합한 ‘선군실리사회주의’와 유사한 담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군사를 선행하는 것이 실리를 보장한다는 주장이다. 제국주의 자들과 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기에 선군에 의해서만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그에 기초한 ‘실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둘째, 선군만이 실리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리주의를 추구하다보면 집단주의에 입각한 실리주의를 잘못 이해하여 ‘개별주의’에 따른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

²⁴-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p. 180.

기 때문에 ‘혁명적 선군문화’의 보급·확산을 통해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셋째, 선군이 실리를 전체 사회에 전파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혁명적 군인정신에 입각한 ‘군대따라배우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군대가 창조해 놓은 실리에 기초한 실력(사업기풍)과 실적(사업성과)을 전체 사회가 따라 배우도록 독려할 것이다. 넷째, 군대를 생산과 건설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더 큰 실리를 보장하는 사업성과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위한 주력군으로 활용할 것이다.

2. 권력구조의 변화

가. 수령제의 지속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총비서, 최고사령관, 영도자, 위대한 장군님과 같은 호칭으로 불리우지만, 그를 수령으로 호칭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김일성 사망 직후 유훈통치기간 동안 김일성을 선대수령, 김정일 위원장을 후대수령으로 묘사하는 정도였다. 북한의 후계자론에 따르면,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전부 승계한다.

그런데 김정일은 아버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지도자에서 영도자로 승격하였다. 물론 일찍이 후계자로 책봉되어 장기간 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물려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굳이 수령이라는 호칭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령이라는 호칭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의미, 즉 어버이로서의 수령과 자식으로서의 대중 간 혈연관계를 고려하면, 후계자가 수령의 호칭을 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수령의 호칭을 계승하지 않고 영도자라

I
II
III
IV
V
VI

는 호칭을 새로 사용하였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책봉된 후 20여년 간 김일성과 공동정권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제도적 권력을 계승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김일성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계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김정일은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영도자로서 수령의 유훈을 받드는 이른바 ‘유훈통치’로 당면한 대내외적 위기와 리더십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일은 ‘장군님’이라는 상징조작을 통해 영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보완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일성 사후, 벌어진 ‘단군 이래 최대의 국난’을 ‘붉은기사상’을 통해 일시적으로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던 김정일은 이러한 상징조작으로 군대와와의 일체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는 군대를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운 선군정치만이 위기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비록 김정일 스스로 수령의 호칭을 포기하였으나 수령제의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수령제를 사상·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혁명적 수령관과 이에 기초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다. 이 두 가지 사상이론의 공통점은 북한체제는 수령·당·대중의 통일체이며 이 중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의 중심이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를 혁명과 건설의 주체로 여기면서 혁명과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영도를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혁명의 수뇌부·당·군대·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수령의 자리를 혁명의 수뇌부가 대신하고 군이 새롭게 혁명과 건설의 주체로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북한 『로동신문』 정론은 “천만군민의 심장-혁명의 수뇌부는 김정일 동지이시다”라고 하여 영도자인 김정일이 곧 혁명의 수뇌부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북한은 기존의

‘수령 결사옹위’ 대신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라는 구호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계승하지 못한 수령의 호칭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머리를 의미하는 혁명의 수뇌부라는 호칭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혁명의 수뇌부·당·군대·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혁명과 건설의 주체로 삼아 수령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령제가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내면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새터민들은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원인을 김정일의 잘못된 국가운영에 돌리고 있다. 새터민이라는 특성상, 김정일 개인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일이 ‘배불뚝이’, ‘그 놈’, ‘그 치’, ‘그 친구’라고 불리는 등 김정일의 권위가 눈에 띄게 실추되고 있다고 한다.²⁵ 뿐만 아니라, 한 새터민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중대한 국사만을 논하고 지시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여성의 복장이나 간섭하는 속좁은 지도자로 비아냥대는 풍속을 아래와 같이 꼬집었다.

하루는 김정일 위원장이 걸계바지를 입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한 여성이 걸계바지를 입은 다른 여성에게 그 이께서 입지마라고 한 것을 왜 입냐구 하면서 서로 깔깔대고 웃었다.²⁶

“김정일 위원장 동지는 곧 김일성 동지”라고 하여 김정일과 김일성의 일체화를 시도해 온 북한당국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김정일과 김일성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²⁷ 난국봉착의 책임이 정책의 잘못 때문이라면 정

²⁵- 새터민 C00(48세, 외교관, 평양시 출신, 남, 2006년 탈북)와의 인터뷰, 2007년 9월 21일.

²⁶- 새터민 L00와의 인터뷰, 2007년 10월 2일.

책의 변경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고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문제라면 개혁·개방노선의 도입을 통해 보완할 수 있지만, 이처럼 지도자의 문제일 경우, 지도자를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북한체제의 특성상 이를 시도한다는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므로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은 좌절하고 다수의 주민들은 무관심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²⁸ 새터민들은 이것이 총체적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령제가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나. 당 기능·권위의 하락과 선군의 제도화

선군이 북한사회의 지배적 담론으로 등장하면서 당과 군의 위상과 상호관계의 변화에 관한 관심들이 증대하였다. 그 관심의 초점은 전통적 당우위 체계의 변화 여부이다. 『로동신문』을 포함한 북한의 매체들과 문헌들은 이른바 ‘당에 의한 선군’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당적 지도 원칙이 고수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당이 위상, 기능 그리고 권위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심장이며 당조직은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라는 당의 위상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북한에서는 군인이 군복을 벗고 당중앙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신분상승으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 군장성 출신의 인사들이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에 임명되고 있다. 그리고 황병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시 빈번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군대 내의 당조직에

²⁷- 새터민 L00와의 인터뷰, 2007년 10월 2일.

²⁸- 새터민 C00와의 인터뷰, 2007년 9월 21일.



해당되며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지시를 받는 총정치국의 현철해 등이 김정일의 최측근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은 훈장을 줄 때 당원들에게 “유급당일꾼 직무를 맡은 것만으로도 만족해라. 훈장 같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행정일꾼들에게 주라”고 하여 당일꾼과 행정일꾼의 신분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²⁹ 이런 현상은 여전히 당이 우위에 서서 군대를 지도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선군시대에 ‘선군’은 군이 당보다 앞선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에 선행한다는 ‘선군후로’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즉 군대가 노동계급을 대신하여 혁명의 주력군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당간부 출신의 한 새터민은 “원래 행정조직인 군과 정치조직인 당은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군대의 위상은 내각이나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행정조직과 비교되어야 하며, 아무리 선군정치를 해도 혁명에서의 당의 절대적 위상과 결정적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은 뇌수의 명령을 팔과 다리에 전달하는 인전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당은 제대로 기능하지만 지방당을 포함한 하급당으로 내려올수록 기능이 엉망이다. 물론 하급당의 경우에도 평양과 지방 간에 차이가 크다. 평양시 당은 잘 기능하지만 청진시 당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당과 하급당,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고난의 행군 이후 망가진 하급당과 지방당의 조직이 아직까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당 간부들과 당원들

²⁹- 새터민 Y00(53세, 보위부원, 함경북도 출신, 남, 2003년 탈북)와의 인터뷰, 2007년 8월 23일.



은 북한주민들을 버리고 생존을 위한 지구책을 찾기 위해 직장 및 주거지를 이탈해야 했고, 심지어 당원자격의 매매도 이루어졌다고 한다.³⁰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당조직의 재건이나 기능의 회복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다음은 당조직의 부패로 인해 중앙당의 지시와 명령이 말단 세포단위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중도에 흐지부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새터민은 “중앙당 차원의 정치학습 계획이 서더라도 지방당이나 하급당 간부들이 뇌물을 받치는 사람들을 정치학습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이에 대해 중앙당이 지시 미이행으로 강력한 처벌 조치를 내렸지만 이런 현상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당의 권위가 많이 추락하였다. 북한의 문헌들은 당일꾼들의 대민사업 태도에 여전히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당원들이 어머니와 같은 태도를 견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당원자격의 획득을 출세의 지름길로 삼던 생각이 지금은 오히려 거추장스런 계급장으로 취급”되고 있을 정도이다. “돈을 잘 버는 남자와 당간부 둘 중 사윗감으로 돈을 잘 버는 남자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새터민들의 증언은³¹ 당의 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처럼 새터민들은 당의 역할과 기능보다 당의 권위에서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당 권위의 약화는 고난의 행군기에 당일꾼들이 보여준 부패한 모습과 인민생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기인한다. 당에 대한 신뢰가 줄어든 가운데 많은 당일꾼들이 부패혐의로

³⁰- 새터민 Y00과의 인터뷰, 2007년 8월 23일.

³¹- 새터민 JH00(38세, 대남사업, 평양시 출신, 남, 2004년 탈북)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9일.



체포되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부패행위에 가담하였다. 부패행위가 적발되면 책임비서부터 말단 세포비서까지 대폭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증거이다. 또한 선군정치가 강조되면서 군의 위세가 당당해진 것도 상대적으로 당의 권위 실추에 기여하였다. 일부 새터민은 1999년부터 도당보다 보위사령부의 지위가 더 높아졌다고 언급하였다.³²

결론적으로 당의 권위 실추는 당에 대한 인민들의 불신이 증가한 데서 비롯되었고 당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군을 앞세워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회생을 시도하려 하였다. 이것이 선군정치 제도화의 계기이다. 결국 북한에서 당-군관계의 변화는 당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권위가 약화되면서 생긴 공백을 군이 메꾸면서 군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군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현상은 3가지 측면에 원인이 있다. 첫째, 김정일 위원장은 당-국가체계를 제대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국가자원이 결핍된 상황에서 군대에 의존하는 것이 정권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저작이나 발언을 통해 군대가 체제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북핵문제 등 주어진 대외환경이 군대의 시대적 사명과 정권차원의 수요를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셋째, 군대는 경제건설을 위해 조직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부족한 내부예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에서 당 조직이 부분적으로 복원되고 선군이 제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당의 경우, 정치국은 여전히 기능을 못하고

³²- 새터민 JA00(65세, 작가, 함경북도 출신, 남, 1997년 탈북)와의 인터뷰, 2004년 7월 12일.

I
II
III
IV
V
VI

있지만 비서국과 산하 부서들은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당 조직 전문가인 장성택이 복귀하고 공석 중이던 통일전선부 부장에 김양건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중앙당을 제외하고 지방당과 하급당의 경우는 평양과 그 이외의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터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과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 엇갈리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역적 차이에서 기인하였다.³³

북한당국은 최근 사회주의 도덕 기풍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어³⁴ 평양 이외 지역의 지방당과 하급당의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비사회주의적 일탈행위들이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음을 『로동신문』 사설로 알 수 있는데, 특히 북한의 노동행정을 비판하는 사설은³⁵ 북한 노동력이 지나치게 유연하여 노동행정에서 큰 차질을 빚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당의 역할을 질책하고 있다. 이 사설은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강화·개선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상반기 노력생산과 노동자의 근무태도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업과제를 제시하면서도 자기직업에 대한 애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 노동자들이 직업에 대해 애착을 많이 가지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애착이 감소된 이유는 자구책의 필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당 조직들은 근

33- 평양시 당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언이 많다.

34- 최근의 문헌으로는 “우리인민의 고상한 도덕풍모를 활짝 꽃피우자,” 『로동신문』 사설, 2006년 7월 10일. 이 사설에서는 “례의도덕문제는 단순히 매 사람의 인격, 인품과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단합과 화목, 혁명대오의 통일단결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든가 “례의도덕을 떠나서는 참다운 동지적관계, 혁명적 동지애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여 사회주의도덕교양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해이현상의 만연이 집단주의와 단결을 저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5- “노동행정사업을 개선, 강화하자,” 『로동신문』 사설, 2006년 8월 2일.

로지들의 노동생활조건을 책임져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조건, 다시 말해서 물질적 인센티브가 도덕적 인센티브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선군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선군이데올로기의 시한부 여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선군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화 작업과 더불어 국방위원회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헌법개정을 시작으로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점차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런데 최근 국방위원회가 하부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선 인민군내 실세 중의 실세인 김영춘 총참모장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정일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던 인민군 작전국장 이명수를 국방위원회 행정국장에 임명하였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새로운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이 국방위원회 과장이다. 또한 통전부장에 임명된 김양건이 국방위원회 참사였다. 국방위원회 내에 이러한 다양한 직책들이 신설된 것은 국방위원회의 조직이 확대되고 이를 관장하기 위한 직책들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명수가 맡고 있는 행정국장직은 이명수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신뢰를 고려할 때 국방위원회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국방위원회가 조정하는 모든 국가업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방위원회는 우리의 청와대 정책실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와 같이 중대한 국가대사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기구로 확대·개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
II
III
IV
V
VI

3. 세대교체와 후계구도

가. 세대교체

시간의 흐름은 어떤 권력이나 제도로도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런 변화의 추동력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북한체제나 권력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세대(generation)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대는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또래집단으로 정의된다. 즉, 주요 인생경험이나 집단적인(collective) 사회정치적 태도를 공유하는 집단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세대의 정치적 의미는 특정 시기 동안(대개 17~25년)³⁶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나타난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집단적으로 함께 경험한 또래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³⁷

그러나 만하임(Karl Manheim)은 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인종, 종교, 성, 교육수준, 그리고 심지어 거주지역의 차이에 따라 세계를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세대단위’(generation units)로 개념화하였다. 그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세대간 차이(inter-generation)만이 아니라 세대내 차이(intra-generation)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만하임의 주장은 중국의 정치세대 연구에 큰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중국에서 정치세대의 개념은 “長征세대”처럼 엘리트들의 정치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학자들은 정치엘리트세대라고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정치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사건들은 모든 세대단위나 사회집단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³⁸

³⁶ 대표적으로는 Michael Yahuda, “Political Generation in China,” *China Quarterly* 80 (December 1979).

³⁷ Karl Manheim, “Consciousness of Class and Consciousness of Generation,” in Karl Manheim, ed., *Essays on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KP, 1952).

정치적·사회경제적 경험에 기초하여 북한의 세대를 구분하면, 혁명 1세대는 항일빨치산 세대, 2세대는 전쟁 및 전후복구세대(천리마세대), 3세대는 3대혁명 세대, 4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설한풍이 휩쓰는 백두밀림, 항일전의 충성이 울리는 속에서 미래를 사랑 하라고 웨치며 마안산모포에 안아키운 아동들이 새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에서 기둥이 되어 싸웠고 전쟁의 불길속에서 키워낸 새 세대들이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1970년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인 시기에 자라난 세대들이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주력군으로 되었다. …어제 날 혁명의 1세대들은 백두의 흰눈우에 붉은 피를 뿌리며 항일대전을 벌려 조국을 해방하였고 혁명의 2세대들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 전승을 안아 오고 잣데미우에 부강조국의 기둥을 세움으로써 자기 세대의 영예로운 과제를 빛나게 수행하였다.³⁹

위에서 북한이 혁명 2세대를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3세대는 최소한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나고 자라나서 1970년대 3대혁명운동의 주축이 된 세대로 볼 수 있다. 4세대는 적어도 1960년대 이후에 성장하여 1980년대의 세계청년학생 축전의 주축을 이룬 세대일 것이다. 북한당국은 3세대와 4세대 모두 전쟁과 제국주의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므로 반제혁명역사의식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⁴⁰

그런데 현재 북한의 엘리트층을 구성하고 있는 3세대와 4세대 간에

³⁸-Cheng Li, *China's Leaders: The New Generation* (Lanham, Md.: Ro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³⁹-“혁명 3, 4세대,” 『로동신문』 정론, 2006년 2월 28일.

⁴⁰-“영화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쓰자,” 『로동신문』 사설, 2006년 7월 21일. 이 사설에서는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준엄한 전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혁명의 3세, 4세들이 우리 사회의 주력…당조직들은 새 세대 청년들속에서 영화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잘 해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3세대들은 3대혁명의 주축세력이고 유일사상체계의 기초축성시기(70년대 초반)에 기여했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으므로 체제에 남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4세대는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하고 세계청년학생 축전을 개최하는 등 개방적 경향을 띠고 경제·외교적으로 점차 쇠락해 가던 시기의 주역이었으므로 체제에 대한 정체성이 3세대에 비해 다소 약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 새터민은 혁명 3세대와 4세대의 인식과 사업방식에서 큰 차이를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3세대와 4세대는 지금 북한에서 사업을 비준하는 실무진영에 포진되어 있는데 아래로부터 정치문제와 경제문제가 충돌하는 제의서가 올라올 경우 3세대 비준권자는 정치문제에 비중을 두는 반면, 4세대 비준권자는 경제문제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3세대는 “개혁·개방을 잘못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4세대는 “잘만하면 기득권을 지키면서도 국가발전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세대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세대는 ‘꽃제비 세대’이다. 이들은 고난의 행군기에 부모를 여의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했던 세대이다. 이들은 현재 북한 사회 내에서 각종 비사회주의적이고 비도덕적인 일탈행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이들에 대한 사상교양, 특히 혁명 전통교양과 사회주의적 도덕주의교양을 강화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꽃제비 세대들의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때문에 이들이 주도세력으로 등장할 경우, 북한체제의 존립과 향방을 장담할 수 없다. 일부 새터민들은 “앞으로 북한당국이 이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가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

고 증언하고 있는데⁴¹ 이는 장기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다.

만하임의 지적대로, 같은 정치·경제·사회적 경험이 세대단위들 사이에서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혁명 3세대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다. 이들 세대들은 이전의 세대들과 달리 체험을 통해 획득한 혁명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정치엘리트세대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욱 투철한 혁명성을 보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정치엘리트로서의 특권은 소수 혁명가계의 구성원들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되며, 이러한 특권의식은 체제수호 의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혁명 3세대 엘리트들은 이전 세대들과 다른 사회경제적 경험을 갖고 있지만, 투철한 혁명성은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은 국가로부터의 시혜, 정교한 사회주의 교육제도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혁명성을 더 높게 발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4세대 지도부의 테크노크라트들이 같은 또래집단의 비엘리트그룹보다 이전 세대의 테크노크라트들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⁴² 대남부서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한 새터민은 북한 내 50대 권력엘리트들 중 일부는 “앞으로 10년은 우리의 정권이다. 선배들은 자리를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사회주의를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라면서 선배들의 일선후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⁴³

⁴¹ - 새터민 JE00(49세, 외교관, 평안남도 출신, 남, 2005년 탈북)와의 인터뷰, 2007년 10월 10일.

⁴² - Cheng Li, *China's Leaders: The New Generation*, p. 7 참조.

⁴³ - 새터민 JE00와의 인터뷰, 2007년 10월 10일.

2007년 4월 단행된 요직 인사는⁴⁴ 세대교체를 정치·경제·사회적 경험을 공유한 또래집단의 개념으로 보면 세대교체로 보기 어렵다. 우선 전임자와의 연령 차이를 보면 김양건 부장(1942년생)의 경우, 전임자인 임동옥 부장(1936년생)과는 6살 차이이다. 김격식 총참모장(1944년생)은 전임자인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1935년생)과는 9살 차이이다. 그리고 김영일 총리(1944년생)는 박봉주 전임 총리(1939년생)와 5살 차이이다. 이처럼 적게는 5살에서 많게는 9살 차이가 난다. 연령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세대교체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정치·경제·사회적 경험을 공유한 또래집단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 전쟁 및 전후 복구세대, 즉 2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최근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 임명된 김정각(1946년생)의 경우도 2세대에 해당되므로 세대교체로 보기 어렵다.

다만, 대남사업부문에서는 혁명 2세대에서 3세대로의 교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대남사업을 담당해 온 원로들이 퇴진(안병수, 김영성 등)하거나 사망(김용순, 임동옥, 송호경, 전금진 등)하면서 3세대인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1956년생), 권호웅 내각 참사(1959년생), 전중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1963년생) 등의 약진이 뚜

⁴⁴-2006년 8월 림동옥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김양건 국방위원회 참사가 임명되었다. 김양건 신임부장은 1997년 4월부터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일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경우 배석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인민군 총참모장에 김격식 인민군 대장이 임명되었다. 김격식 대장은 김정일 위원장 현지도도 수행 대상 3인방 - 현철해·박재경·이명수 - 과는 달리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러나 김격식 대장은 현재 노동당 중앙위원이고 일찍이 1994년부터 2군단장을 지낸 군부내 실세로 알려진 사람이다. 특히 김격식은 지난 1997년 4월 건군 65주년 열병부대 총지휘관을 맡기도 하였다. 그리고 헌법상 북한의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내각총리에 김영일 육해운상이 임명되었다. 김영일 신임총리는 김격식과 더불어 파격적인 인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1997년 9월 김정일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하는 교동위원회 당대표회에 참가한 이력을 갖고 있다.

렸하다. 이 밖에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을 준비하는 인물 중에 40~50대가 주로 포진해 있다.

나. 후계구도

지난해 북한의 『로동신문』의 사설과 정론에는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의 암시로 볼만한 표현들이 등장하였다. 먼저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10대 당시의 영웅담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김일성은 14살이던 1928년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여 항일투쟁을 선두에서 지휘하였고, 김정일은 14살이던 1956년에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조직하여 행군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뿐 아니라 혁명전통계승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⁴⁵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혁명을 하는 데서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10대 청년의 혁명적 영웅담에 대한 강조는 3대 부자세습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혁명의 수뇌부’ 용법에서 미세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원래 북한은 “천만군민의 심장 = 혁명의 수뇌부는 김정일 동지이다”라고 하여⁴⁶ 혁명의 수뇌부는 곧 김정일이라는 단수호칭이었다. 그리고 혁명의 수뇌부가 등장하는 맥락은 반드시 혁명의 수뇌부·당·군대·인민의 일심단결을 강조하면서 단결의 중심체를 언급할 때였다. 그러나 2006년에 와서는 ‘대를 이어’라는 혁명의 계승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혁명의 수뇌부가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혁명의 수뇌부는 후계구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⁴⁵- 대표적으로는 “위대한 기수,” 『로동신문』 정론, 2006년 2월 13일.

⁴⁶- “단결을 승리, 승리는 단결,” 『로동신문』 정론, 2004년 1월 22일.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의 공식매체나 문헌에서 후계구도와 관련한 별다른 표현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고영희 사망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문제에 관해 일체 언급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는 설도 있고, 김정일 위원장 자신이 90살까지 일선에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쳤다는 설도 있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한 때 김정남의 재기설 등 후계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도 하였다. 이것들은 확인할 수 없는 설에 불과하지만 북한당국이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와 관련하여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할 단계에 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내 북한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새터민들은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시 세습 방식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 그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세습이 자신의 사후 후계체제의 안정성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한 새터민은 “세습만이 단결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고 세습을 통해 권력 엘리트들간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⁴⁷ 또 다른 새터민은 “세습이 아닌 다른 형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통치이데올로기, 권력구조 등 지난 60년간 북한의 정치질서를 유지해 온 근간이 변화될 것이고, 김정일 위원장이 누구보다 이 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⁴⁸

그리고 권력승계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 새터민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은 삼촌인 김영주, 계모

47- 새터민 K00(40세, 외교관, 평양시 출신, 남, 2004년 탈북)와의 인터뷰, 2007년 10월 12일.

48- 새터민 CH00(59세, 군인, 평안남도 출신, 남, 1996년 탈북)와의 인터뷰, 2005년 7월 2일.

인 김성애와의 권력투쟁이 필요했던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과 달리 김정일 위원장의 낙점에 의해 정해질 것이므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후계자 선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다른 새터민은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에 볼 때, 권력승계를 앞당길수록 자신의 권력이 줄어들 것이므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북한당국 스스로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달리 북한사회주의체제가 건재했던 것은 후계문제를 미리 해결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미 고령인 데다 건강상의 문제, 그것도 급사할 가능성이 있는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후계자를 정한 다음 새로운 권력엘리트를 등용하고 방해세력을 제거하는 등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김정일 위원장으로 하여금 후계자는 미리 정하되 공표시점은 상황에 맞춰 조율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한 새터민은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보다는 후계체제가 불안정한 것을 더 우려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후계체제와 관련하여 향후 북한이 수령제를 대신하여 집단지도체제를 확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북한에 갑작스런 정변이 발생할 경우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높다. 일인지배권력이 갑자기 작동을 멈출 경우 당·정·군의 핵심 권력엘리트들은 공멸방지에 공감하여 일인이 권력을 장악하는 위험한 선택보다는 공동관리정권을 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에 의한 정상적인 정권 교체의 경우 소련이나 중국식의 집단지도체제는 선택하기 어려운 권력구조로 보인다. 무엇보다 집단지도체제는 일인지배체제를 정당화해 온 북한의 통치이데올로

I
II
III
IV
V
VI

기의 전반적 수정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지도체제는 안정적으로 작동되면 효율적이지만 자칫 정책이나 노선의 차이가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집단지도체제는 지난 60년 이상 일인지배체제에 익숙해진 북한의 정치문화를 고려할 때 북한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지도체제의 폐단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위험한 제도를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집단지도체제와 일인지배체제의 절충형태인 ‘입헌수령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입헌수령제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당규약과 헌법에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대신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권한은 당·정·군의 핵심 엘리트로 구성된 집체적 지도부에 부여하는 권력구조형태이다. 이러한 권력구조 형태는 일반적인 집단지도체제의 도입시 예상되는 위험, 즉 주민들의 정체성 혼란, 권력투쟁의 가능성, 통치이데올로기의 대폭 수정 등에 덜 노출된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입헌수령제는 부자세습에 대한 핵심 엘리트들의 불만을 적절하게 희석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3대 세습과정에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백두산 혈통’의 카리스마, 인격적 리더십(personal leadership)을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지위적 리더십(positional leadership)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⁴⁹

마지막으로 김정일 위원장은 후계구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후계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습에 중국식 권력승계 방법의 일부를 가미한 새로운 승계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나라의 최고직책’인 국방위원장직과 최고사령관직을 계속

49- 김정일 위원장의 인격적 리더십과 지위적 리더십에 관해서는 최준택, 『김정일의 리더십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7년 참조.

맡으면서 군을 장악한 가운데 후계자에게 당총비서직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 경우에 따라서 주석직을 부활시켜 그 직을 맡기는 방식이다. 1980년 이후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실상 공동정권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주장에서의 권력운동방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김일성의 생존 당시 김정일은 형식적으로나마 당과 군과 정의 최고직책을 맡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후계자의 지위적 리더십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확립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지위적 리더십을 인격적 리더십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I

II

III

IV

V

VI

III

경제제도와 조직의 변화



1. 신제도주의 이론⁵⁰과 북한경제의 변화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에서 신제도주의 분석틀은 매우 유용하다. 신제도주의의 분석틀은 신고전학파의 분석모형과는 달리 제도, 조직, 의식 등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신고전학파 모형은 주어진 제약하에서 부를 극대화하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시장행동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교환의 이익과 시장의 효율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시장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들의 변화과정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제도들의 역사적 진화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반면 신제도주의는 시장을 하나의 제도라 인식하고 경제를 구성하는 조직과 제도의 관계, 제도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에 주목한다. 따라서 신제도주의는 다른 경제, 문화, 역사, 정치적 조건에서 자원 배분 메커니즘을 포함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체제 전환 문제에 대해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제도이론을 발전시켜 경제사 분석에 적용하는 노스(North)는 제도가 부여하는 유인 체계 속에서 발전한 조직과 제도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토대로 효율적·비효율적 제도 변화의 경로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노스에 의하면 제도(institutions)는 인간이 고안한 모든 형태의 제약을 포함한다. 여기서 제약이란 공식적 제약과 비공식적 제약을 모두 포함한다. 제도는 일상생활에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생산 및 교환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 특징이다. 혁명, 전쟁, 정복과 같은 원인으로 공식적 제도가 불연속적으로 변화더라도 완벽하게 불연속적일 수는 없다. 이것은 사회 내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제도들이 완만

⁵⁰- 노스, 이병기 역, 『제도, 제도변화, 경제적 성과』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96).

I
II
III
IV
V
VI

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공식적 제도를 ‘정책’이라고 한다면 비공식적 제도들은 폭넓게 ‘문화’라 규정지을 수 있다.

비공식적 제도들은 단지 공식적 규칙의 부가물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 비공식적 제약, 즉 문화는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보의 문화적 처리는 경로의존적인 제도변화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파생된 비공식적 제약은 공식적 규칙이 불연속적으로 변화한다고 해도 곧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동일한 공식적 규칙을 다른 사회에 적용시키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비공식적 제약의 지배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구 체제를 해체하고 ‘시장’이라는 제도를 심기만 하면 일거에 경제의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었던 급진적 체제전환전략의 실패는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변화는 언제나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왜 비효율적인 제도가 존재하는가? 왜 경쟁압력은 비효율적인 제도의 제거를 유도하지 않는가? 그것은 제도와 조직간의 차이와 제도변화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양자간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제도는 한 사회내의 모든 기회를 결정한다. 그리고 조직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도록 만들어 지는데, 이 조직은 생성, 발전하면서 제도를 고친다.

따라서 제도 변화의 경로는 (1) 제도가 제공한 인센티브 구조의 결과로 생성되고 발전한 조직이 다시 제도를 잠금(lock-in)하는 과정과 (2) 기회 집합의 변화에 인간이 반응하는 피드백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특정한 조직은 제도가 마련한 인센티브 때문에 생겨났고 일단 형성된 제도는 학습효과와 네트워크 외부성⁵¹을 가지면서 경로의존적이고 수

⁵¹ -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특정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상품을 쓰는 사람들이 일종의 네트워크를



확체증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이 틀 내에서 조직은 제도에 의존하면서 제도를 감금시키는 것이다.⁵² 현존하는 제도적 틀을 수정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경제주체들의 지각을 통해 제도는 한계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지각은 정보를 수취하고 처리하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도와 조직의 상호작용, 공식적 규칙과 비공식적 제약간의 긴장 관계에 근거한 제도의 변화 과정은 여러 가지 경제 형태의 발전, 쇠퇴의 과정을 폭넓게 설명할 수 있다. 노스는 이러한 분석틀에 기반하여 성공적인 경로 혹은 지속적 실패의 경로를 가지는 제도변화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성공적인 경로는 19세기 미국경제의 성장을 예로 들 수 있다. 19세기 초 이래로 발전한 기본 제도의 틀(미국헌법, 힘든 일을 보상하는 행동 규범 등)이 개괄적으로 경제적·정치적 조직의 발전을 유발하고, 이러한 조직의 극대화 활동은 교육투자의 수요를 유발하여 직·간접적으로 생산성의 증대와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경제조직이 발전함에 따라 조직들은 보다 효율적이 될 뿐만 아니라 재산권 구조 등의 제도적 틀을 수정하였다. 물론 관세 창설, 노예 착취, 트러스트 형성 등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선택들이 조직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9세기 미국의 경제사는 경제성장으로 특징지어졌고 이것은 기본제도들이 일관적으로 조직들에 대해 생산성을 증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실패의 사례로는 많은 제3세계의 상황을 예로 들고 있다. 정치적·경

형성해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퀴티(Qwerty)자판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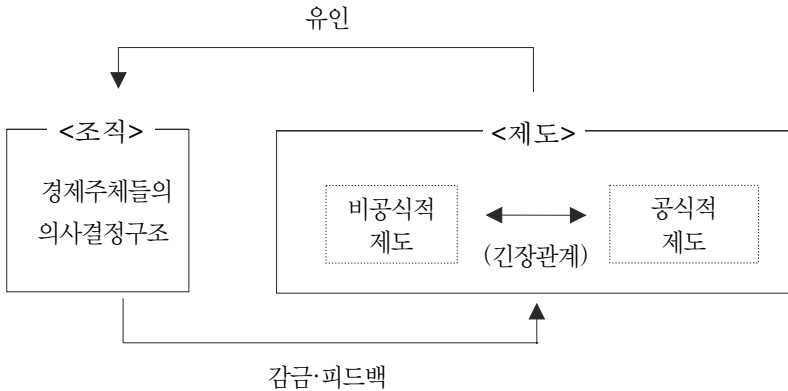
⁵²- 노스, 『제도, 제도변화, 경제적 성과』, pp. 20~21.

I
II
III
IV
V
VI

제적 기업가(조직)들이 갖는 기회는 생산 활동보다는 재분배를 촉진하고, 경쟁상태보다는 독점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압도적이다.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거의 유발하지 않는 제도의 틀 안에서 발전한 조직은 비생산적인 사회를 유발하는 제도적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경로는 지속되며 경제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각각의 사례는 상이한 시기, 상이한 물적 토대,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경제 형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인간 사이 상호작용의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제도의 존재 의미, 제도는 조직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그로부터 형성된 조직의 선택에 제약받는다. 이는 제도-조직의 관계, 비공식적 제약의 점진적인 변화가 제도의 경로의 존성을 이끌어냄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그림 III-1> 제도변화의 과정



최근 북한경제의 제도변화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골자로 하는 공식적 측면의 변화와 새터민 증언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암시장

확산, 개인의 기업 소유, 개인 사업자들의 노동자 고용 등 비공식적 측면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북한의 제도변화는 사회주의 건설 이후 50년간의 제도변화 경로로부터 획기적으로 전환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제도변화의 배경에는 전쟁 과도 같은 충격이었던 1990년대의 식량난이 자리하고 있다. 식량난은 공식 공급체계의 마비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계획이라는 기존의 제도가 제도 내의 조직, 경제 주체들에게 부여할 물질적 유인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조직과 경제주체들은 생계를 유지할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변화했으며 새로운 문화, 비공식적 제약들이 형성되었다. 선택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구조는 하루 아침에 전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계획경제가 허물어짐에 따라 그리고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연속적으로 무너지면서 계획경제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양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획기적으로 보이는 제도변화의 뒤에는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의식의 변화 과정, 비공식적인 제약의 변화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경제 정책의 변화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북한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과 제도 변화, 이들의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 개념을 구체화해보면 제도는 정치적, 경제적 규칙과 사적인 계약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지만 이 글에서는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한다.

공식적 제도는 북한 당국이 대내외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정책, 배급제, 노동정책, 소유권에 관련된 법 규정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간문헌과 7·1조치 발표 후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 결과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비법·불법적인 형태이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과 경제활동,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비공식적 제도의 형성은 새터민의 증언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다. 주로 경제난 이후의 의식 변화, 경제활동의 변화, 7·1조치의 효과 등이 그 대상이다.

조직의 개념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공통의 목적에 따라 결합된 개인의 집합이다. 조직은 기업소 단위를 상정한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조직은 목적이 동일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결합이 아니라 국가의 동원과 명령에 의해 결합된 체제이다. 여기에서는 계획이라는 제도가 유인을 부여하는 대상, 그리고 계획 달성이라는 공통의 목적과 생활비를 포함하는 임금의 물질적 유인에 반응하는 개인들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기업을 조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2. 북한의 경제위기와 제도변화

가. 경제위기 이전 제도-조직의 관계

경제위기 이전 북한의 경제 관리 방식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기의 '유일관리체제'와 1960년대 이후 '대안의 사업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유일관리체제는 계획의 강한 중앙 집권화와 노동력의 강제 동원, 기업소의 관리 권한이 지배인 1인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당시 경제 관리는 계획의 전달과 자재·소비재의 공급을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노동에 대한 유인도 물질적 자극보다는 정치도덕적 자극이 최대한 활용되었다. 물론 북한은 1947년 5월부터 경제 각 부문에서 도급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사회주의 경제건설 시기는 특히 정치도덕적 자극이 '천리마 운동'과 같은 형태로 강조되었던 기간이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유일관리체제의 중

양집권적 경제관리 방식은 점차 비효율적인 측면을 드러내게 된다. 이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기업 규모가 대형화, 산업 규모가 복잡해짐에 따라 1인 지배인에 의한 기업소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새로운 경제 관리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1961년 채택된 대안의 관리방식은 중앙권력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계획 개념을 탈피하여 계획 수립과정에 기업소의 참여를 허용하고 생산현장의 능력과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기업소의 책임이 지배인 단독책임제에서 공장 당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집단지도체제로 변경되었다. 임금 분배도 노동의 난이도에 따라 8등급으로 단순 구분하였던 방식을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기본임금, 기술수준, 월간 노동시간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노동자간 임금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작업반 우대제’와 ‘분조도급제’를 도입하는 등 물질적 자극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⁵³ 하재룡에 따르면 시기별 임금 차등 정도는 1953년 기준 1.65배에서 1961년 3.9배, 1980년대 말 5배로 증가하고 있어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형태로 임금 체계⁵⁴가 정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⁵

53- 하재룡, “북한의 산업화와 노동정책,” 『노동문제논집』 14권 (1997), p. 13.

54- 북한의 임금(생활비) 체계는 노동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야에는 ‘도급지불제’를 적용하며 상대적으로 노동 결과에 대한 물질적 자극이 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액지불제’를 적용하는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공업 생산에는 도급 임금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상급과 장려금도 생산계획, 제품의 질, 설비 및 자재의 효율적 이용에 연계시켜 지불되도록 하고 있다. 즉, 공식적으로 임금, 즉 생활비는 그가 어떠한 노동을 하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되고 물질적 유인이 임금체계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5- 북한은 노동보수를 자본주의적 임금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1978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노동법에서 생활비 또는 노동보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노동보수란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총생산물의 일부를 그들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그러나 이와 같은 공식적 임금 체계가 실제로 노동에 대한 강한 물질적 유인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건화는 이를 노동정량에 대한 기술적 평가의 어려움, 노동자들이 지닌 평등주의적 경향, 노동보수에 차이를 크게 두지 않으려는 북한당국의 사회주의적 가치관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적 가치관은 배급제가 일종의 간접 임금으로 실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의 분배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다. 즉, 기본식량, 주택, 교육, 보건, 의료 등의 현물보조가 배급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임금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최신림·이석기는 전체 노동자 평균 소득의 50%가 배급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⁵⁶

또한 새터민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충성도나 출신성분 등의 정치도덕적 자극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Q: 노동자들의 노동실적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 노동정량 초과 달성시 출신성분에 따라 차등보상한다. 성분이 나쁜 노동자들은 노동정량의 50% 초과분까지만 보상을 받는 반면, 출신성분이 높은 노동자들은 100% 보상받는다.⁵⁷

배급제의 존재로 인해 임금이 물질적 유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도덕적 자극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제도의 특성상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 경제위기 이전 북한경제

몫의 화폐적 표현”이라고 한다.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89; 정건화, “북한의 노동체제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 『동향과 전망』 62호 (2005).

⁵⁶- 최신림·이석기, 『북한의 산업관리체제와 기업관리제도』 (서울: 산업연구원, 1998).

⁵⁷- 새터민 Y00(기능공, 남)와의 인터뷰, 1996년 6월 26일.

의 제도-조직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원자재의 불규칙한 공급으로 노동성과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고 공급할 소비재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인플레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생활비'로 지불되는 화폐임금의 격차는 물질적 자극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제도-조직의 상호의존관계가 지속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유인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소득의 50%를 차지하는 배급제의 존재는 기업소 조직 내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의 물질적 요인은 되지 못했지만 노동자들을 계획의 틀에 묶어두는 강력한 물질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의 계획이탈은 식량난으로 인한 배급제 마비의 충격으로부터 발생했다고 본다. 배급 중단이라는 공식적 제도의 단절은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채택하게 만들었다. 계획에 소속되어 의무를 다함으로써 임금과 배급표를 받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되자 각 경제주체들은 계획을 이탈할 유인을 가지게 되었다. 단,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한 순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새터민의 증언을 토대로 경제 주체들의 의식변화 과정과 비공식적 제도들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해 보도록 하자.

나. 경제위기와 비공식적 제도의 형성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사회주의 교역국들의 감소라는 위기 상황에 부딪힌다. 특히 편중된 중화학공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원자재를 소련 등에 의존하고 있던 북한의 산업은 1990년대의 대외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이 컸다. 1990년대 초반 물질적 자극의 도입이 보다 강조되었지만 원자재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 달성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I
II
III
IV
V
VI

안좋아지기 이전에는 노임 받는 것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죠. 그 노임으로 국정가격으로 줄 때는 그 노임에 신경을 쓰는데 가격이 올라간 뒤에는 임금 받아야 별로 사지도 못하는데 임금에 신경을 별로 안쓰죠. 돌격 노동을 하는 돌격대가 따로 있고 선전을 하지만 별로 효과는 없어요.⁵⁸

위 증언은 탄광 노동자 출신의 새터민의 인터뷰 내용이다. 도급제를 토대로 하는 물질적 유인의 비중이 큰 직종이었지만 소비재 부족으로 배급사정이 악화되고 인플레이가 심각해지자 임금의 구매력이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하고 계획달성에 대한 물질적, 정치도덕적 유인이 함께 저하되기 시작했다. 또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해지지 못하면서 계획달성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계획의 일원화 체계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한다.

Q: 계획의 일원화가 현실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A: 90년대 초반부터 계획한 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 그 때부터 경제가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 눈에 보였다. 그 때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는 비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위에 서도 자재나 전기, 배급을 전혀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⁵⁹

그러나 경제위기가 바로 계획으로부터의 이탈을 불러온 것은 아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경제의 생산능력에 전반적으로 저하되었고 계획 달성이 힘들어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북한경제 내에서는 이를 사회적으로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지배적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업소 단위의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소비재 등을 계획외 생산하는 것이다. 새터민들

⁵⁸- 새터민 H00(기능공, 남)와의 인터뷰, 2004년 2월 21일.

⁵⁹- 새터민 K00(남, 2000년 탈북)와의 인터뷰, 2007년 8월 31일.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운동이 활발해진 것은 80년대 말인데, 국영상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소비품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1988년 8·3인민소비품 판매유통 규모가 전체 소매상품유통액의 9.5%를 차지하게 된다.⁶⁰ 배급제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던 시점에는 전반적인 부족 현상을 국가 차원의 생산운동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등 경제위기가 곧바로 계획이탈을 불러오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50년동안 유지되었던 경제 조직의 결속이 깨어진 것은 식량난으로 인한 배급제의 중단, 아사자가 급속히 발생하면서부터이다. 북한의 식량생산은 집단농장 체제의 문제점, 농자재 부족 등으로 1980년대 말부터 5%이상씩 감소하기 시작했다.

Q: 농업 부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A: 비료와 농약의 절대부족과 집체생활에서 오는 의욕상실, 능률저하 때문이다. 농민들은 스스로의 처지를 천하게 여기며 “우리가 먹을 것만 농사한다”는 의식이 강하다.⁶¹

전체 곡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88년 1ha당 396.9kg으로 1983년 수준으로 하락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400kg이하를 기록했다. 그러나 식량 부족으로 사람이 굶어죽을 수도 있는 위기는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이 발생한 1995년부터이다. 특히 1996년 홍수, 1997년 가뭄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중단, 식량 수입에 필요한 외화 부족까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남성욱은 1995~1998년간 식량 수요량과 공급량을 토

⁶⁰-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pp. 207~208.

⁶¹- 새터민 P00(당간부 출신)와의 인터뷰, 1997년 4월 24일.

I
II
III
IV
V
VI

대로 인구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식량난이 심각했던 시기 사망자는 3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아사자가 95%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⁶² 북한 인구의 최대 8%가 기근으로 사망할 만큼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의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다.

전쟁에 비할 만큼의 경제적 충격, 배급체계의 마비로 인해 노동자들을 공식적 제도에 묶어둘 물질적 유인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공식적 제도가 갑작스럽게 단절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식 전반이 급진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조정 양식은 한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계획으로부터 자원을 배분받지 못하자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 의존하게 된다. 북한 경제 내 ‘시장’은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예외적인 계획의 공간으로 허용되어 왔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합법적 농민시장은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들을 교환하는 ‘암시장’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장사는 원래 단속대상이었지만 배급제가 마비되면서 불법적인 거래도 암묵적으로 허용된다. 계획의 보조적인 공간으로서 허용되었던 ‘시장’의 성격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Q: 장마당은 어떻게 열리고 있습니까?

A: 국가배급상황에서 장마당은 5~10일 간격으로 열렸으나 배급이 원활치 않은 최근에는 거의 매일 장이 열린다.⁶³

Q: 농민시장과 암시장 이용 실태는?

A: 북한주민들은 생필품 구입시 80%정도를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에 의

⁶²- 남성욱, “북한의 식량난과 인구변화추이, 1961~1998,”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 (1999).

⁶³- 새터민 COO(기능공, 남)와의 인터뷰, 1997년 5월 9일.

존한다. 당국도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아현상’의 발생을 우려해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⁶⁴

그렇다면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가? 초기의 참여 형태는 가재도구나 집기를 교환하거나 이를 밀친 삼아 장사를 시작하는 정도였다. 오전에는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차츰 본격적으로 장사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식량공급이 완전히 끊기면서 뇌물을 주고 공장을 이탈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불법 시장거래에 대한 단속도 없어지게 되자 본격적으로 장사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소비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1990년대 이후 소규모 상업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공장·기업소의 생필품, 직장과 지방 산업공장들에서 유휴 자재, 폐기물 또는 지방 원료를 이용하여 경공업 제품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유휴 부양 여성 노동력을 이용한 가내 작업반이 증대되어 부양 여성들의 부업활동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다.⁶⁵ 식량난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가내작업반 활동이 개별적인 소규모 장사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1997~1998년경에는 가내 작업반이 없어지고 동(洞)의 허가 없이 개별적으로 장사를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⁶⁶

초기의 제조 품목은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서 장려하던 간단한 식품, 의류, 신발 등을 위주로 했지만 점차 서비스 부문에서도 파마, 이

⁶⁴- 새터민 COO(무역일꾼, 남)와의 인터뷰, 1996년 6월 22일.

⁶⁵- 최봉대·구갑우, “북한 도시 농민시장 형성과정의 이행론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6권 2호 (2003).

⁶⁶- 최완규, 『북한도시의 위기와 변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밭, 사진사, 가전제품 수리 등 다양한 업종 등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고기잡이, 운송업, 무역 등 규모가 비교적 큰 부문에서 ‘개인회사’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기업소가 가동하지 못하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임대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생산해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⁶⁷ 1990년대 말, 탈북한 김지환(가명)에 따르면 탈북하기 전 서해에서 조개잡이에 필요한 배를 임대하고 필요한 인부 180~200명을 모집하여 한달에 두 번 출항해서 3개월 정도 하면 임대료를 내고 세관에 10%를 바치고도 평균 20~30만원을 번다고 한다. 북한은 법적으로 이러한 개인 기업을 금지하지만 1990년대부터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난으로 인해 생산수단을 보수·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나 기름, 부속품 등을 국가가 해당 기관에 공급하지 못하므로 돈 가진 개인들이 이를 활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배인이나 작업반장의 권한으로 기업소 내에서 생산한 제품들로 작업반 전체의 생계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 새터민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과거에 ‘작업반 본위주의’라 비판했던 행동들이 암암리에 묵인됨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위로부터의 생산명령이 약화되면서 지배인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봄철이면 한참 곡괭이나 괄지라든가, 호미라든가 낫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철제품이잖아요. 이런 것은 불에 달궈서 두드려서 나와야만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봄철이라든가 작업반장이 마지막 작업 다섯시에 끝나면 한 30분 쯤 쯤 더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섯개면 다섯개, 열개면 열개 제품을 모아 놓는 거예요. 작업반에서 균일이 생길 때면 그거 농촌에 가서 팔아서 술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바꿔가지고 작업반

67- 임근숙, “북한의 자영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 『통일 경제』, 제80호 (2002. 3).

에서 풍족하게 먹게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모르나요?) 알죠. 행정에서 나와서 다 보거든요. 나와서 저건 뭐냐? 작업반장이 필요해서 찍습니다. 그리고 마는 거예요. 고약하게 밝히고 그런 건 없고.

(그것을 팔아서 쓰는 것은 작업반장의 권한입니까?) 혼자서 먹는 것은 절대로 못하고 작업반에도 당 조직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9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80년대에는 작업반 이기주의 이런 거 없었는데...⁶⁸

식량난 이후 경제상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사람들의 의식도 점차 변하기 시작한다. 북한 주민들이 50여 년간 익숙했던 ‘자력갱생’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계 문제 해결, 기업소 단위에서의 생활 보장 등으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즉 대외의존적 성격을 배제하며 자기 완결적인 경제 구조를 지향하는 북한 사회주의의 경제 발전 노선으로 사용되었던 ‘자력갱생’의 논리가 생계를 국가에 의존하는 의식을 버리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견디면 잘 산다는 말을 전에는 믿었다. 견디다 보면 한 해 두해 나아지겠지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서기는 틀렸구나.’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⁶⁹

이러한 의미부여는 계획 당국으로부터 유포되기도 했다. 원자재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획달성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공식적 제도는 조직에 부여할 물질적 유인이 없으며 이를 통제하

⁶⁸- 새터민 S00(기능공, 남, 1999년 2월 탈북)와의 인터뷰, 2004년 2월 4일.

⁶⁹- 새터민 S01(미용사, 여, 2003년 12월 탈북)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고 관리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커지게 되자 기업소 단위에 원자재 조달과 생산물의 처분 권한을 주고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소 단위의 자력갱생 논리를 확산시키게 된 것이다.⁷⁰

이러한 제도변화는 경제위기 기간에 계획운영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소 단위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배인, 작업반장의 권한이 커지게 된다. 언급했듯이 이러한 권한강화는 작업반 본위주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간부급들은 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재를 생산해 암시장에 판매하기도 한다. 변화된 제도 속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는데 뇌물, 국가 자산의 이용 및 탈취가 대표적이다.

공장이라는 게 석탄이라는 것이 맹천군 일신 탄광이라는 데서 들어오는 석탄인데 그것이 하루에 들어와서 소모되는 양은 60톤이라고 보니까 하루에 소모되는 양이 대략 네 차량 정도 됩니다. 석탄이 공장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한 차량은 개인이 가져갑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가져갑니다. 일반 노동자들도 집에 가서 죽이라도 끓여먹고 출근하려면 가마다 넣고 출근해야 하는데 불을 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을 때지 못하니까는 공장에 들어가서 석탄을 도둑질해 가져드요?⁷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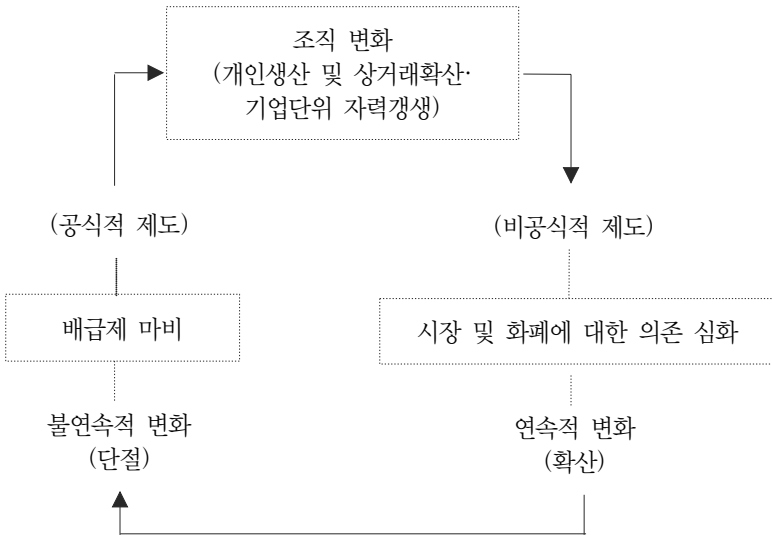
위의 증언은 경제 위기이후 위와 같은 국가재산의 사적 이용 및 탈취

⁷⁰- “1995년 경부터 기업소 노동자들의 생활은 기업소가 책임지라는 지시가 위로부터 분명하게 하달되었다. 이를 위해 기업소 생산물을 일정하게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성진제강소 여맹지도원 출신 탈북자); 이석기, “계획화 체계의 약화, 자발적 시장화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2호 (2005).

⁷¹- 새터민 K00(기능공, 남)와의 인터뷰, 2005년 8월 19일.

가 만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의식변화가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생산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말 계획을 재정비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도 이미 이와 같은 의식변화, 비공식적인 제도의 확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I-2> 북한 경제위기와 제도변화의 경로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배급제 마비라는 공식적 제도의 갑작스런 단절에 대해 경제 주체들은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적응해왔다. 그러나 의식의 변화나 비공식적 제도의 확산은 갑작스러운 적응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제도의 점진적 변형과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경제 활동의 공간으로 적응한 '시장'은 계획의 보조 공간으로서 허용되었던 공식적 제도 '농민시장'의 변

I
II
III
IV
V
VI

형으로서 점차 주요한 물자공급 제도로 그 비중이 커졌다. 공식적 제도의 단절이 비공식적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낳게 되고 이것이 경제위기 이후 공식적 제도의 변화를 압박하는 기제가 된다. 또한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원형으로 하는 가내수공업에서 소규모 상업의 확산과 제조상품의 점진적인 확대 과정, 소규모의 개인 장사로부터 규모가 큰 개인 회사로 다양화되는 과정 등은 경로의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계기가 없이는 이러한 추세를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7·1조치 이후의 제도변화

가. 1990년대 후반의 계획정상화 조치

경제위기는 계획 경제의 틀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경제활동 방식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배급제 마비라는 공식적 제도의 단절은 더 이상 계획에 소속되어 있을 물질적 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했다.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틀에서 시작된 소규모 상업 활동은 적극적인 형태로 확산되었고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 방식이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 제도가 조직에 부여하는 유인구조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계획이라는 제도가 조직에 부여해왔던 계획달성과 성과지급이라는 유인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계획의 입장에서도 조직을 통제, 관리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시장과 같은 형태의 비공식적 제도의 확산을 묵인하거나 기업소 단위의 자체 생산·배분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적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이미 명문화되어 있는 공식적 제도와의 괴리는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공식적 제도를 이용하는 데 구성원들이 치루는 비용이 커지게 되었다. 예컨대 불법

적이라 규정되어 있는 암시장 활동은 단속과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계획의 입장에서 불법적 활동을 규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1990년대 후반 이루어졌던 계획 정상화 시도는 북한 당국이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줄이기 위해 그 동안 확산되어 왔던 비공식적 제도를 일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농민시장과 장사 활동에 대한 제재조치와 노동자 공장복귀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이는 외부지원으로 배급이라는 물질적 유인을 제공할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획 정상화 시도는 실패했다. 일부 정상 가동이 가능한 공장들은 노동자 복귀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공장들은 노동자들이 출근해도 원자재가 부족하거나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노동자 복귀에 대한 물질적 유인을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미 시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어 이를 단속하고 규제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해 있었다. 다음의 설문조사의 결과는⁷² 이미 1990년대 후반에 시장이 주민들의 주된 경제활동의 공간이 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⁷²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6) (http://www.bok.or.kr/contents_admin/info_admin/main/home/bokdb/northkorea/research/info/north02.hwp).

I
II
III
IV
V
VI

<표 III-1> 탈북자가구별 소득 원천 (%)

(%)

	임금소득	장사소득	기타*
1997-1999년 탈북자	7.5	91.1	1.4
2004-2006년 탈북자	5.0	88.1	6.9

* 친척의 도움, 가족사육 등

자료: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6)

이처럼 1990년대 후반의 비공식적 제도를 철폐시켜 공식적 제도와의 괴리를 좁히려는 시도는 물질적 유인의 부족과 규제 비용의 증가로 실패하게 된다. 대신 비공식적 제도를 공식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이다.

나. 7·1조치 이후의 제도변화

7·1조치는 고난의 행군을 전후한 위기의 십년동안 불가피하게 묵인 해왔던 변화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⁷³ 경제위기 기간에 사람들이 학습하고 체득해 간 경제활동 방식은 이미 의식전반을 바꾸어 놓았으며 이렇게 형성된 비공식적 제도의 변화를 단속하고 되돌리기에 북한 당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그간의 변화를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7·1조치의 단행은 50여년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을 통해 형성된 공식적 제도와 10여년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형성

⁷³-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재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17권 2호 (2005)를 참조.

된 비공식적 제도의 갈등 속(正-反-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북한당국은 경제강국을 목표로 변화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경제관리 방식의 혁명적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⁷⁴ 사회주의원칙을 전제로 한 ‘실리’에 근거하여⁷⁵ 시장의 적극장려, 화폐상품경제의 이용, 물질적 인센티브의 강조, 아랫단위의 자율성 확대 등을 선택하고 시행하여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이미 확산된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을 가격제정 방식의 변화라는 방식으로 수용했고 기업소의 자율적인 운영을 독립채산제의 강화라는 형식으로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유인체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7·1조치에 깔려 있다. 이는 구제도가 조직에 부여하는 유인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는 반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북한당국이 7·1조치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분배의 평균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배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활비(임금)를 통한 물질적 자극을 높임으로써 노동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급제라는 분배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가운데 공식적 제도의 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조직에 새로운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는 ‘실리’를 추구하되 계획경제의 근간은 유지하는 것, 이것이 7·1조치를 중심으로 한 2000년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74- “당면한 경제적 난관을 뚫고 짧은 역사적 기간에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변화된 환경과 현실적 조건,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며 완성해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286.

75-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자는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책, p. 288.

<가격현실화>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허용해 온 각종 가격 기준을 전부 없애고 모든 상품가격을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시켰다. 앞으로는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는 데 따라 상품 유통과 화폐 유통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고정시키지 않고 능동적으로 계속 조절하도록 한다.”⁷⁶

가격개혁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시장 중심의 자원배분 방식을 수용하여 계획의 가격제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허용해 온 가격 기준을 전부 없애는” 것인 만큼 공식적 제도의 변화만을 염두에 둔다면 매우 급진적인 조치이나 지난 십여 년간 북한 경제는 사실상 암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자원배분의 기준이 되어 왔다. 이를 규제하여 계획을 정상화시키는 데 수반되는 비용을 북한당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간의 변화를 수용하여 공식화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가격결정 기준의 변화와 함께 가격현실화 조치도 이루어졌다. “전 품목의 가격을 종전보다 평균 25배 정도 끌어 올리기로” 한 것은 시장이라는 현상을 수용하면서 계획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보다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단 “농민을 우대하는 원칙에서” 수매가격을 1kg당 45전에서 20원으로 인상시켰는데 농민들에게 부여하는 물질적 유인을 증가시키는 한편 국정가격을 함께 증가시킴으로써 국가가 그 부담을 떠안지는 않았다. 북한은 가격현실화의 이유를 “현재 국정가격이 농민시장 가격보다도 낮아서 장사행위가 성행하고 국가에는 상품이 부족한데 민간은 상품에 둘러싸여 있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하면서 국정가격과

⁷⁶-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KDI 북한경제리뷰』 (2003)에서 재인용.

시장가격의 차이를 축소시켜 계획으로부터 시장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함이다. 시장을 규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국가의 재정수입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유인체계의 변화>

유인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생산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생활비 개정과 기업소에 변수입 지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 조치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북한은 이러한 개선 이유를 과거 공식적 제도가 조직에 부여했던 유인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지난 시기 경제적 실패의 요인은 기존의 유인체계가 분배의 ‘평균주의’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선 분배에서 평균주의가 많았다. 노동자와 사무원에게 생활비를 줄 때, 일을 많이 한 사람인가 적게 한 사람인가, 기본 노력인가 보조 부문 노력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소가 계획보다 더 수행했다고 하여 모두 똑같이 계산해주었다”

사회주의 분배원칙은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순서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이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7·1조치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되었던 혜택들, “보상금, 간식비 등”을 없애서 생활비만이 물질적 유인의 대상이 되도록 정비했다. 생활비를 중심으로 유인체계를 개편한 것은 가격개정 조치와도 연관이 있다. 과거의 배분체계에서는 생활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생산 활동에서 “열성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미루어, 식량을 중심으로 생계비가 생활비(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임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⁷⁷

I
II
III
IV
V
VI

기업소에 변수입(판매수입에서 임금과 이윤이 차지하는 몫으로서 부가가치에 해당) 지표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에는 공장, 기업소들의 성과는 하달된 현물지표별 계획수행률에 의해 평가되었다. 그러나 변화된 평가방식은 실리를 기준으로 변수입을 얼마나 창조하였는가에 있다. 과거에는 계획을 수행하는데 목표를 뚫으로써 투입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계획량만 달성하면 되었지만 변수입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비용절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품의 판매에도 신경을 써야 하므로 제품의 질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수영에 의하면⁷⁸ 7·1조치 이전에는 생활비는 원가개념으로 기업 실적과 무관한 것이었으나 이제 기업은 국가수납분을 제외한 몫에서 생활비를 자체 배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때 변수입 계획수행률을 적용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비와 변수입 증감이 연관된다. 생활비를 통한 물질적 유인을 늘리고 이를 보장하는 책임은 기업소 단위에 위임함으로써 국가는 계획운영의 비용을 줄이고 재정부담도 함께 축소하겠다는 의도이다.

<독립채산제의 강화 및 물자교류시장의 효과적 활용>

북한당국은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국가적·전략적 의의를 갖는 지표와 경제전반의 발전에 필요한 지표를 제외하고 기업소가

77- “우리가 지금까지 적용해 온 낮은 가격에 의한 식량 공급제는 1946년부터 실시해 온 것이다. 지난 시기, 노동자, 사무원의 실질 생활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3.5%밖에 안되었다”는 것을 생산활동에 열성을 내지 않는 이유라 지적하고 “앞으로는 국가가 협동농장에서 수매한 식량값에 일정한 부가금을 청구해 지금의 식량공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실질 생계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가 된다”고 한다. 위의 글.

78- 최수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생산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격제정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전략적 의의가 있는 주요물자들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정해준 가격제정 원칙과 방법에 준하여 생산단위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력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여유노력을 적극 동원하여 국가계획외에 수요가 있는 제품을 찾아 생산판매할 것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기업소 차원에서 노동력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독립채산제의 강화를 위해 변수입지표를 효과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변수입은 국가기업이득금, 임금, 기업소자체충당금으로 나뉘는데, 특히 기업소자체충당금(밑자금)의 효과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밑자금은 농사에서 종자와 같은 개념으로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 자체로 쓸 수 있는 자금이다. 과거에는 기업소의 밑자금리는 용어조차 언급되지 않았으나 최근 국가투자를 통해 물자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밑자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⁷⁹ 그리고 밑자금으로 생산된 제품은 수출할 수도 있고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사실상 공급제약이 심각해지면서 “공장기업소에서 생산정상화 몫을 조성하여 자체로 이용하는 것은 생산을 활성화하고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는 원리로 보아도 가장 ‘현실적인’ 방도”인 것이다.⁸⁰

79-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정상화몫의 이용권을 철저히 행사하여야 한다. 그 누가 뭐라 하든지 생산정상화몫만은 무조건 꼭 떼놓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다른 데 쓰지 못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이용은 철저히 해당 공장, 기업소만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p. 103.

80-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 기업소들은 계획의 수행보다는 자체 생존을 위해 생산정상화 몫의 물자를 우선 생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생산정상화몫을 계획 생산량의 일정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단, 생산정상화 정도가 낮은 기업소는 생산정



이와 함께 원활한 자재공급을 위해 물자교류시장을 활용한 자재공급이 강조되고 있다. 공급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재의 계획적 공급방법만으로는 물자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물자교류시장의 효과적 이용이 강조되는 것이다.⁸¹ 물자교류시장은 시, 군별로 조직하여 시, 군 물자교류소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물자교류시장에서 교류할 수 있는 물자대상으로는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경영활동에 시급히 요구되는 물자로서 생산정상화몫, 계획초과분, 판로가 없는 수출품, 원료 및 자재를 차제로 해결하여 생산한 제품, 계획지표밖에 더 생산한 제품(8·3인민소비품 제외), 필요이상 예비로 가지고 있는 자재 등이다.

<종합시장 도입>

2003년 3월 김정일의 지시로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종합시장의 도입은 이미 확산된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장이라는 제도를 계획과 연계시키려는 7·1조치이후 북한당국의 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새터민 김00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장을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하는 지침(2003. 5)을 내렸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시장의 규모는 주민수가 3만~4만명 되는 시, 군에서 600석, 4만~5만명 되는 시, 군에서 900석, 5만~7만명되는 시, 군에서 1,200석, 주민수가 그 이상되는 시, 군에서 2,000석 정도의 규모로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게 꾸리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각지에 개설된 종합시장은 하나

상화몫을 높게 생산정상화 정도가 높은 기업소는 그 몫을 낮게 주고 있다. 위의 책, p. 102.

⁸¹- 조선노동당출판사.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p. 104

의 단위조직으로 국영기업소로 체계화되어 운영되는데 “기업소인 것만큼 시장은 상품을 파는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개별적 주민들로부터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 또한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단위는 이것과 별도로 자기 소득에 따른 국가납부금을 제때에 바쳐야 한다”⁸² 즉, 시장을 공식화함으로써 규제 비용을 줄이고 시장사용료와 소득의 일부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하겠다는 조치이다. 시장에 대한 규제로부터 시장에 대한 관리로 북한 경제정책이 변화하는 것이 규제비용보다 관리비용이 적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식적 제도를 개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배급제의 유지>

배급제도는 사회주의 분배제도의 근간으로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식량난 이후로 배급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식량이 부족할 때마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것은 북한 주민들을 계획이라는 틀로 장악할 수 있는 통로인 동시에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배급제를 공식적으로 유지하되 수매가격을 높여 농업 생산자들에게 생산성 증대의 물적 유인을 제공하고 국정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주민들이 배급에 의존하는 비중을 낮추어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식적 제도를 조정했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배급제를 공장, 기업소 단위로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즉 배급제도가 자력갱생의 논리에 지배되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공장, 기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제대로 배급을 받게 되지만 성과가 저조한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⁸² - 『조선신보』, 2004년 9월 7일.

I
II
III
IV
V
VI

배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배급제를 유지하되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축소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배급제의 축소는 식량난이후 배급제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개혁이었다. 이미 배급제 축소가 현상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공식적 제도의 변화가 아래로부터의 저항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다. 조직에 대한 공식적 제도의 변화 영향

최근 대외적으로 공표된 북한의 경제정책은 일단 변화된 경제현실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그렇다면 새터민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변화는 어떠한지, 그리고 공식적 제도의 변화가 다시 조직에 새로운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수록 하자.

북한 주민들은 7·1조치가 이전 시기 이루어졌던 경제정책의 변화와는 차별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⁸³ 7·1조치 직후에는 임금 인상을 환영하였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이 힘들어졌으며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들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으나 7·1조치 이전에 비해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가 더욱 수월해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7·1 경제개선조치 당시 북한 주민들은 임금 인상에 대해 환영하였다. 하지만 외부물자가 유입되지 않고 인플레이션 등의 갈등적 요소가 발생

⁸³- 7·1조치는 과거의 실험적 시도(땃밭, 장마당 양성화, 라진선봉 경제특구)와는 다른 강성대국을 표방한 부국강병책으로서의 경제개혁 조치이다. 새터민 K00과의 인터뷰, 2003년 7월 1일.

하였다.

물건값이 오르면서 7·1조치 바로 이후에는 살기 힘들었다. 직장에서 ‘장사하겠으면 하라’하고 일정 돈을 직장에 내고 나가 장사를 하였다. 돈 내면 출근으로 처리되고 그러면 배급을 준다. 7·1조치 이전엔 살기 어려웠는데 후엔 장사를 통해 생활이 좀 나아졌다. 시장에 물건도 많아졌다.

시장나가서 물건 사고 팔 수 있게 되어서 생활이 조금 좋아졌다. 앞으로는 빈부의 차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돈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장사하지만 쌀값 올라가면 돈 없는 사람은 더 굶어죽게 생겼다.

그러나 생산성에 따른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공장·기업소 단위의 변화에 대해서는 “생산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개인들의 노동의욕이 높아지고 기관별 책임감이 강화되었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대체로 원자재 조달이 여전히 원활하지 못하여 생산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협동농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다. 7·1조치이후 농업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생산계획량의 몇 %를 지급하는 것이 성과급제이지만 계획량에 미치지 못하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제라는 것은 허울뿐이다. 농장에서조차 화전롤이 급증하고 있다”⁸⁴, “쌀값이 올랐어도 농민들은 먹을 쌀이 없다. 농장에서 간부들이 쌀을 다 뽑아내서 농민들은 쌀보다는 가축으로 생계를 연명한다”⁸⁵는 증언을 찾을 수 있다. 공장·기업소는 생산물 지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국가수납분을 금액으로 제출하고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협동농장의 경우는 여전히 농업 생산량이 계획달성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료 및 농업 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과급

⁸⁴- 새터민 K00(국가안전보위부원, 남)와의 인터뷰, 2004년 6월 22일.

⁸⁵- 새터민 C00(의사, 여)와의 인터뷰, 2004년 6월 23일.

I
II
III
IV
V
VI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더라도 7·1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표 III-2>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제 성장률	1.3	3.7	1.2	1.8	2.2	3.8	-1.1

출처: 한국은행

또한 7·1조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이전의 경제관리 방식인 ‘대안의 사업체제’로부터의 탈피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세에 맞게 경제를 고쳐야 한다”는 발언을 대안의 사업체제라는 낡은 방법의 폐기라고 생각한다는 증언이 많았으며 실제로 1990년 중반 이후에는 대안의 사업체제에 대한 선전이 사라졌다고 한다.

사실 대안의 사업체제는 국가에서 공장·기업소에 예산과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나 국가재정이 고갈된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기업소 단위의 자력갱생을 제도화하고 기업소 단위에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북한 경제를 지금에 와서 변했나 안변했나 이 문제를 볼 때 겉과 속을 분리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겉 체제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도 이 체제는 7·1조치 이후로 조금 변했을 뿐이다. 대안의 사업체제가 기본경제관리 체계로서 존재할 때, 61년도부터 2002년 7월 1일 이전까지 대안의 사업체제이고 이후에는 소련식으로 지배인 유일관리와 유사하게 지배인이 독단적으로 행정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었다. 61년 김일성이 대안전기공

장 현지도하면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받기해가지고 모든 활동을 당이
틀어쥐게 되었는데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나오면서 이전 지배인 유일
관리제와 비슷하게 자율성을 인정해주었다.⁸⁶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제도 변화이후 기업소들은 ‘8·3 노
동자’라고 불리는 장사꾼들을 더욱 늘리고 있으며 기업소의 계획 달성
지표가 생산물 기준에서 금액 기준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후) 기업소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니까 기업소
에서 지표별 생산은 못하지만 일반 사람들을 채용해서 한 달에 3천
원~4천원씩(임금이 25% 인상되었기 때문에) 매달 넣을 수 있느냐.
이전에는 북한돈 2,000원 내지 1,500원 정도를 기업소에 바치면 일주일에
한번만 출근하고 전부 나가 장사만 하라. 그런 인원들이 몇 명에
국한되어 있었다가 7·1경제관리조치가 나오면서 액상계획이라도 해서
기업소가 국가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졌다는 이미지를 주고 기업소 안
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비도 풀게 하기 위해 이런 장사꾼들을 많이
늘린 것이다.

위의 증언을 참고하면 국가에 수납하는 몫을 제외한 수입을 자체 배
분하도록 제도화 한 7·1조치 이후 흔히 ‘8·3 노동자’라고 불리는 장사꾼
들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⁸⁷ 즉 기업소가 국가에 수입의 일부를
제출한 후 원자재의 조달, 생산, 기업소의 운영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기업소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일정 수입을 기업소에 제출하고
다른 일로 생계비를 조달하는 현상이 확산된 것이다. ‘8·3 노동자’들이

⁸⁶ - 새터민 J00(대학교원)와의 인터뷰, 2004년 8월 30일.

⁸⁷ - ‘8·3 노동자’를 ‘인수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 새터민의 증언에 의하면 인수원은
8·3 소비품 운동이 발전된 형태로 공식적으로 1명의 인수원이 있지만 실제로는 11
명 정도의 인수원이 있으며 인수원의 활동은 2002년경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이
라 한다. 새터민 H00(기능공, 남)와의 인터뷰, 2003년 7월 4일.



기업소에 내는 수입금은 각 기업들이 원자재를 조달하는 등에 쓰이고 이들은 형식적으로 기업소 소속의 노동자이므로 생활비와 배급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기업소의 계획 달성 목표가 ‘액상계획’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기업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소속된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액상계획’에 집착하는 것이다. 증언을 토대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확실히 기업소 단위의 자력갱생 유인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단위가 자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은 증가했는지 모르지만 전체 경제가 구체적인 생산물 지표 계획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계획생산 체제에서 각 기업들이 ‘지표별 계획’과 상관없이 국가수납분과 생활비 보장을 위한 ‘별이’에만 전념한다면 북한 경제의 전체적인 생산정상화를 이루기는 어려워질 것이다.⁸⁸

설문조사에 따르면⁸⁹ 7·1조치 이후 정상출근의 비율은 저조한 상태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8·3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⁸⁸ - “기업소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기업소들이 생산보다 장사에 치중한다. 김정일 명의의 직속공장은 잘 돌아간다”고 대답했다. 새터민 H00(기농공, 남)와의 인터뷰, 2003년 7월 4일.

⁸⁹ -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표 III-3> 탈북전 직장 근무현황

(명, %)

	정상출근	조퇴 후 다른 일	8.3자금지급 후 다른 일	적만 두고 출 근하지않음	합계
1997-1999년 탈북자	23	5	3	7	38
	(60.5)	(13.2)	(7.9)	(18.4)	(100.0)
2004-2006년 탈북자	21	4	11	4	40
	(52.5)	(10.0)	(27.5)	(10.0)	(100.0)

출처: 한국은행

최근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05년 12월과 200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자들의 개인 노동 현상을 없애고, 집체적으로 공장, 기업소, 단위 등에 출근하도록 하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가 내려졌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8·3노동자가 소속 직장에 바쳐야 하는 수입금만 한 달 3,000원에서 최소 8,000~10,000원 가량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8·3 노동자가 된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 기업소’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이러한 노동자가 10%이상 된다고 한다.⁹⁰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이 투자하고 운영하고 기업소가 비공식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국영 기업이외의 개인 투자 기업이 허용되지 않지만 경제난 이후 개인 수공업과 자영업으로 자본을 마련한 개인들이 가동 중단된 국영기업소나 식당, 상점 등에 투자하여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지급하는 방식의 ‘개인 기업소’가 확대되고 있다. 국영기업에서 노동자 임금이 2,000~3,000원이라면 개인기업소에서는 2만~5만 원까지 지급해주는 곳들이 많다고 한다.⁹¹

⁹⁰-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56호 (2007).



때문에 ‘개인노동’ 금지와 공장 복귀 명령 등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 또한 규제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7·1조치가 경제난 이후의 시장 변화를 수용했듯이 앞으로의 경제정책 변화의 흐름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북한당국은 7·1 경제조치이후 국영식당이나 편의봉사기관들을 각 기관, 단위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점을 이용해 개인들이 기관이나 단위 이름을 빌려 투자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주민들은 정책상 금지되었던 사적 소유와 개인기업 체계가 모양을 달리 해서 내부적으로 실시된 지 이미 오래라고 입을 모은다.⁹²

⁹¹-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47호 (2006).

⁹²-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70호 (2007).



IV

북한주민 생활과 의식 변화



1. 북한주민의 생활변화

새터민들에 따르면 2002년 당시 북한당국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⁹³를 언론과 강연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부분이 알고는 있었으나 이 조치로 인해 주민생활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 직후에는 “어려운 생활 형편이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감도 없지는 않았으나 식량난 이래 국가에 대한 실망이 큰 북한주민들은 7·1조치에 대해 별다른 희망이나 기대를 갖지 않았으며 당국이 주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7·1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때(발표 당시)는, …시장에서 쌀을 50원 이상 올리면 회수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선 ‘쌀값이 50원 이상 오르지 않겠구나’ 그런 기대도 있었어요. …그다지 기대는 안했어요. 사람들이 국가에서 하는 일에 너무 속다보니 그저 주면 좋고, 안주면 내가 저절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뜻이 맞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을 잘 살게 한다는 조치라기보다…. 사람들은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국가적인 회피라고, 이전에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먹여 살리던 것을 자기네 책임에서 벗어나려는….⁹⁴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가가 어쩔 수 없이 행한 경제조치” 정도로 이해한 7·1조치와 2003년 3월 시장의 공식화·합법화는 1980년대 말 이래 확산·심화되어 온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은 이미 알려진대로이다. 7·1조치와 시장의 공식화는 주민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

⁹³- 새터민들은 7·1조치를 ‘신경제’, ‘7월 테제’, ‘시장경제관리체제’ 등으로 말함.

⁹⁴- 새터민 L00(39세, 위생방역소 근무, 함북 청진시 출신)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의 대내외적 상황 인식 내지 의식에 있어서의 변화와 가치의식의 변화가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새터민들의 관련 구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7·1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친 영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자율성·능동성 확대 강화, 공식 허용에 따른 장사의 활성화, 생활고 심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등이 그것이다.

가. 자율성·능동성 확대, 강화

집단주의는 북한사회의 구성 원리이며 북한 주민생활의 기본 원리로서 북한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작용한다. 북한주민들은 소년기부터 일상적인 정치조직생활을 통해 “개인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집단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익히게 되며 이로써 자율적·능동적인 개성 있는 자아를 형성, 인식하기보다는 집단에 매몰된 타율적·수동적인 획일화·전형화된 자아를 형성,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겪으며 북한주민들의 자아인식은 점차 집단보다는 개인지향적인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생각과 행동에 있어 자율성·능동성이 더해져갔다. 배급제를 비롯한 사회복지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자율적 판단과 계획에 따라 가족의 생계유지를 모색하였으며 장사 등 개인 상행위로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능동적·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7·1조치는 이와 같은 북한주민들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보다 더 확대,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전의 자율성·능동성 구현은 당국의 단속과 통제를 의식해야 했으나 7·1조치 이후에는 개인 상행위가 허용되는 등 자율성이 공식 확대되었으며 이로써 일에 대한 의욕이 한층 더 적극화된 것이다. 한편 새터민들에 따르면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당국은 “국가 물자로는 배급이 안 되니까 자체로 살아가라는 지시”

를 내렸으며 7·1조치 이후 보다 더 강조되었다고 한다.⁹⁵ 이는 곧 공장·기업소에 대한 자율성 확대, 강화를 뜻한다. 북한은 중앙단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하부단위에 대해 책임 전가와 함께 자율성을 확대, 강화한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노동의욕 제고를 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새터민 여성은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7·1조치는 주민들로 하여금 노력한 만큼 벌어서 살아가는 정신을 갖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진행은 못되었지만 이전의 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방향성을 나타냈다고 한다.

사회주의라는 것이 본래 과도적인 사회이니까 일한 만큼 분배받아야 하는데, 이전의 경제관리체제(대안의 사업체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같은 시간에 그 시간만 채우면 월급이 똑같이 나왔으나, 7·1조치로 인해 무엇인가 하면 들어온다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⁹⁶

7·1조치 이후 현저하게 높아진 북한주민들의 노동의욕은 특히 인센티브제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급제 폐지와 물가 인상으로 인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으나 무엇보다도 생산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개인들의 노동의욕이 높아졌다는 것이다.⁹⁷ 이와 같은 지적은 관련 논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 연구결과에서는 임금에 있어 생산자 우대의 인센티브제도는 공장과 기업소의 노동자, 사무원 뿐 아니라 농민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있는 바, 생산성에 비례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여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사상적 보상제도에 익숙해 있던 노동윤리가 변화할

⁹⁵- 새터민 K039(40세, 대학교수, 함남 함흥시 출신, 남)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6일.

⁹⁶- 새터민 J014(대학교수, 여)와의 인터뷰, 2004년 9월 18일.

⁹⁷- 새터민 K024와의 인터뷰, 2003년 7월 1일.

I
II
III
IV
V
VI

것이라고 전망한다.⁹⁸ 새터민들은 7·1조치 이후 직장생활에서 ‘비법적(비공식) 자율성’도 강화되었다고 말한다. 공장·기업소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직장 이탈, 무단결근 등에 대한 통제가 이전보다 더 완화되었으며, 이로써 근로자들의 ‘비법적 자율성’도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태는 중앙으로부터의 단위공장·기업소에 대한 자율성 확대와 함께 단위기관·조직의 운영을 전적으로 떠맡은 책임자의 재량권이 보다 더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보면 소장이나 비서가 사람에게 시간주기 편하더라 말이에요. 일단 너희가 너희 기업을 먹여 살리라고 이랬으니까... ‘오늘은 너네 3명이 일주일정도 쉬면서 집에 먹을 것을 장만하라’ 이려고, 또 일주일 우리 논 다음에, 다음 주에는 다른 3명이 이려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니까... 물론 7·1조치가 없어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먹을 것은 없는데, ‘우리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 구하러 어디 좀 다녀오겠다’ 하면 보내야 하니깐요. 조직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어도 인간적으로는 해줘야 하니깐요. 출근한 걸로 이리 해주고 그러는데, 7·1조치하고는 아마 그런 데에서는 좀 나아졌죠.⁹⁹

나. 장사의 활성화

식량난 이래 북한주민들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텃밭·패기밭 경작, 가정에서 집짐승 기르기, 가내편의봉사업 등 다양한 일을 하였으나 가장 보편화된 사경제활동은 장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식량난 이래 북한주민들의 주요 생계유지 수단으로서 당국의 묵인 아래 비공식적으로 행해졌던 장사는 7·1조치 이후 개인들의 상행위가 점차 공식화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된다. 국영유통부문의 정상화를 의도한

⁹⁸-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 (서울: 높이깊이, 2005), p. 211.

⁹⁹-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7·1조치에 따라 단기간 장마당에서의 장사가 단속대상이 되었으나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국영상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마당에서의 쌀 판매와 공산품 판매가 허용되는가 하면 2003년 3월 종래의 농민시장이 상설형태인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되기에 이른 것이다.

새터민들에 따르면 7·1조치와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이 가장 좋아한 것은 마음 놓고 장사를 하게 된 것이다. 장사가 허용된 7·1조치 이후에는 시장에 나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어서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는 바, 평양시의 경우에는 인민반에서 장사를 안 하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¹⁰⁰ 직장에서도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전보다 보다 더 묵인 내지 허용하는 편이었는데, 일정 금액만 직장내면 출근으로 처리되므로 법적제재를 우려하지 않고 장사에 나설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에도 운영이 어려운 공장·기업소의 노동자들 중에는 직장에 출근하는 대신 한 달에 약 3,000원 정도를 내고 개인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¹⁰¹ 7·1조치 이후 당국이 판매 물품 단속을 하지 않게 되면서 북한주민들은 매대 값과 시장세를 내고 장마당에서 다양한 물품들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¹⁰² 그러나 일부 새터민들에 따르면 7·1조치 이후 장사가 공식 허용되어 자율성은 확대되었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속은 심했다고 한다. 마음 놓고 장사를 해서 능력껏 돈을 모으라고 장려하는 한편 판매물품 및 판매량, 판매지역 등을 제한하는 등 단속은 그치지 않았으며 단속에 걸리게 되면 뇌물로 무마시키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¹⁰⁰- 새터민 C010(의사, 평양시 출신, 여)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23일.

¹⁰¹-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서울: 정토출판, 2006) p. 86.

¹⁰²- 새터민 S012(미용사, 평양시 출신, 여)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7·1조치 이전에는 장사에서 제한성이 많았거든요. 장사를 마음 놓고 할 순 없었어요. 그런데 조치 이후에는 정부에서부터 ‘너네 능력껏 벌어들인 것 상환 안 하겠다.’ 그래놓고는 상환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증명서를 떼고 열차에 탔어도, ‘너는 왜 이 짐을 이렇게 많이 가져 가냐? 뭘 이렇게 가져 가냐?’ 다 단속하고, 거기서 또 압수하고…. 열차를 탄다거나 그 어떤 상품을 가지고 다른데 가서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 조치가, 압력이 또 ‘자기 지방에서만 딱 하라’ 이진데, …그러니까 저희도 보다시피 셋벌에서 청진이라든가 라진이라든가 그런데 가서 상품을, 이 공업품을 도매 해오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소매해 버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갈 때에는 돈 될 수 있는 그 돈만 딱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또 가지고 가서 팔고 그 돈 가지고 또 상품을 사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나가면 열차에서 단속하지, 그 다음에 역에 내리면 단속하지, …(장사를) 허용은 했는데, 그렇게 ‘제 바닥에서 하지, 왜 와서 하냐?’ 이거 가지고 많이 그랬죠. …장사하다가 문제 됐잖아요? 그러면 돈을 얼마간 주고 뇌물을 주고 그렇게….그러니까 말로는 허용했다고 하지만, 기관에서, 안전 기관에서 나와서 ‘금일 단속기간이다.’라 해놓고, 물건 하는 거 다 하지요. ‘오늘은 장 보지 말라’ 어쨌든 단속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단속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불만이 너무 많지요.¹⁰³

7·1조치 이후 장사가 허용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으로서 장사의 의의가 더해지고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이 장사를 했다고는 하나 장사를 한 모든 사람들의 생활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장사를 잘 해온 사람들은 장사가 공식 허용된 7·1조치 이후 많은 돈을 모아 생활 형편이 크게 나아진 편이나 이전부터 장사 요령 내지 수완이 없었던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서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¹⁰³ 새터민 H00(사회복지관리소 근무, 여)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7·1조치 이후 개인 상행위에 있어 통제 대상 품목은 돼지고기, 쌀, 식용유, 된장, 간장, 소금, 닭알(계란) 등이며 이러한 품목들은 개인 장사꾼이 팔 수 없고 직매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 직매점도 개인이 운영했다고 한다.; 새터민 CO12(군관, 평양시 출신, 남)와의 인터뷰, 2004년 9월 21일.

실태는 7·1조치에 따른 물가 급등과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 그리고 장사 허용에 따른 장사 인구의 급증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경제조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차라리 안했으면 좋았다 이거예요. 해놓으니까 오히려 물가가 폭등하고, 어쨌든 국가가 보상을 해 주기 전까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장사라는 것도 국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해야 하지, 물가가 더 세게 되면 안 되더라고요. 천문학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좋지만 절대 다수는 안 좋고... 공업품에서는 단속했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풀어주니까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장사를 하니까...¹⁰⁴

또한 새터민들에 따르면 7·1조치 이후 장사가 공식 허용되어 북한주민들 사이에 장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하나 그 정도는 지역적인 편차가 있었다고 한다.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는 달리 지방에서는 장마당이 이전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간부집안에서나 시장을 이용할 뿐 노동자들은 돈이 없어 시장에 갈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¹⁰⁵

한편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에도 개인 미(리)용실, 식당, 리어카 짐꾼일, 샅일이나 품팔이 임노동, 자영상업행위, 고리사채업 등이 등장하였으며, 당국의 묵인 아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개인들의 상행위는 7·1조치 이후 점차 공식화되며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7·1조치 이후 활성화된 개인 상행위와 관련해 특기할 만한 것은 식당, 맥주집, 목욕탕 등의 운영이다. 7·1조치 이후 북한당국은 종합시장에 개인판매대를 허용하는 한편, 자금력을 갖춘 주민들이 기관·기업소로부터 맥주집, 가라오케, 목욕탕, PC방 등을 임대 운영하거나 신규 개업이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서비스업을 허용하였다.¹⁰⁶ 새터민들에 따르면

¹⁰⁴ - 새터민 H012(중학교 교원, 여)와의 인터뷰, 2005년 11월 2일.

¹⁰⁵ - 중국체류 탈북여성 A00과의 인터뷰, 2007년 5월 12일.



이와 같은 사경제활동의 허용 및 장려는 북한주민들의 개인 상행위를 보다 더 적극화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다. 생활고 심화

새터민들에 따르면 7·1조치 이전에는 주민들의 생활이 나름대로 안정적이었다. 암시장 가격도 안정되었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 나름대로 생활 기반이 구축되어갔으며 배급은 폐지되었으나 각자 농사, 장사 등 다양한 일을 통해 벌이를 할 수 있었으므로 안정적이었다는 것이다.¹⁰⁷ 또한 7·1조치 이후 한동안은 장사 허용 및 시장의 공식화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생활형편도 나아지는 듯 했다. 그러나 7·1조치 이후에도 공장·기업소는 제대로 가동 되지 않고 물가만 크게 올라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서, “차라리 그냥 두었으면 살기는 좀 더 편했을 것”이라고 한다. 7·1조치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배급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나 돈이 많은 부유층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직후에는 많이 좋아졌지요. 개편 이후 좋아는졌는데, 좋은 사람은 좋지 않은, … 없는 사람은 더 하락됐지요. 왜요? 돈 단가는 올라가고 상품은 비싸고 하니까… 교원이라던가, 사무직에 있는 의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한 삼천오백 삼천사백, 사천 원까지는 다 받았대요. …그 다음에 의사들, 안전기관, 보위부 그런 데에 사람들은 배급을 그나마 주었어요. 그렇게 주었는데 일반 평백성들한테는 월급도 없고 식량공급도 없잖아요. 그러면 천오백원가지고 쌀 한 키로를 사고 나면, 그 값이 그거예요. …쌀 한 키로에 천 오 백 원씩하고 강냉이, 옥수수를 한 키로에 700원씩 한다면, 어떻게 그걸 사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한심 하죠.¹⁰⁸

¹⁰⁶ -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 p. 210.

¹⁰⁷ - 새터민 K030(국가안전보위부원, 남)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22일.

7·1조치 이후 북한주민들의 생활고가 보다 더 심화된 데에는 수요보다 공급 물량이 적은 데 따른 물가 폭등이 근원적으로 작용하였다. 7·1조치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으로 인한 통화량 급증과 공급물자 부족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데 이어 2002년 10월 북핵문제 발생 이래 수요보다 공급 물량이 매우 적어 일부 품목의 경우 3~4배 이상 가격이 폭등하는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¹⁰⁹

경제조치라는 것이 기본 목적은 자기 기업이 자기 기업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라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나와서 국가적으로는 월급을 10배씩 다 올려주고, ...작은 데가 10배고 많은 데는 17배까지 올려 받았는데, 또 그게 월급은 올려줘도 또 그에 맞게 물가가 같이 오르니까... 그 전에는, 국가에서 배급을 줄 때는, ...그러니까 배급을 그렇게 주면서 물가가 다 낮으니까 그 돈으로 살기 괜찮았던 말이에요. 괜찮은 게 아니라 살기 좋았죠. ...없어서 못살죠. 월급은 10배 올랐는데, 북한에서 실제 쌀이 있어서 내줘도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되죠. 100배, 1000배 물가가 뛰었으니까요.¹¹⁰

또한 물가폭등으로 인한 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고 심화는 차등임금제에 근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7·1조치 이후 ‘누진도급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월급인상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¹¹¹ 한 새터민도 7·1조치 이후 노임이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당이 정한 직급에

¹⁰⁸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¹⁰⁹ -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 p. 191.

¹¹⁰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¹¹¹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p. 32.

I
II
III
IV
V
VI

따라 규정하였으며 노임 인상보다 물가 상승이 더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¹¹² 7·1조치에 따른 교통비, 집세(주택사용료), 전기세, 땅세 등의 대폭 인상도 일반주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주요 요인이다. 실례로 1995년부터 폐기발을 경작해온 한 노동자는 2005년부터 한 평방에 100원씩 땅세를 납부하였는데, 사람들이 “조그만 밭에 너무 땅세가 비싸서, 이것은 살자는 것인지, 죽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할 정도”¹¹³였다고 한다. 그는 북한당국이 한 때 폐기발 경작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규제가 되지 않자 2005년부터 땅세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간이 매대 판매자들은 수입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전에는 국가에 80원을 바쳤으나 7·1조치 이후에는 더 많은 수입금을 내게 되었으며, 특히 매대의 위치에 따라 수입금이 차등화 되어 3,000원까지 올라간 매대도 생겨났다.¹¹⁴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주는 것은 없고 내라는 것이 늘어만 가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느냐”¹¹⁵는 불평의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한 새터민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시기에 많았던 꽃제비가 1999년 들어서면서 사라졌는데 2003년부터 다시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¹¹⁶ 이러한 현상은 7·1조치 이후 보다 더 악화된 주민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7·1조치 발표 후 몇 해가 지난 최근에도 일반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려운 살림에 장사마저도 여의치 않은 일반주민들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며 식량과 떨감 문제 해결을 유일한 삶의 목표로 하고 있다.

¹¹²- 새터민 K030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22일.

¹¹³- 중국체류 탈북여성 A00과의 인터뷰, 2007년 5월 12일.

¹¹⁴-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p. 46.

¹¹⁵-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54호 (2007).

¹¹⁶- 새터민 H010(연구원)과의 인터뷰, 2004년 9월 17일.

지금은 백성들은 더 살기 어렵다. 장사를 해도 돈주들이 한다. 단천에서 순천까지 가자면, 차비는 말할 것도 없고, 차표 떼기 위해 안내원에게 2,000원 고인다. …지금은 증명서 없으면 못 다닌다. 2002년 돈 단가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었다. …끓었다. 백성들은, 이러면 미국하고 전쟁을 하든가 한국하고 전쟁을 하든가, 그런 말을 한다.¹¹⁷

2004년에는 ‘지주마누라가 산에 가는 해’라고 했다면 2005년은 ‘백만 장사행방 다니는 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을 지주라고 하는데 그런 집도 산에 풀을 뜯으러 갈 정도로 곤궁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2005년에는 사정이 더 악화되어 북한 돈 백만 원을 가진 돈주라도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를 해야 될 정도로 힘들게 되었다.¹¹⁸

조선에서는 사는 목표가 오로지 먹을 걱정, 땀 걱정으로 시름이 놓이지 않았다. 먹는 것이 자유였다.¹¹⁹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으나 중앙은 아무 대책이 없다. 그저 민심이 변할까봐 고강압 탄압을 끊임없이 들이대고 있는 실정…¹²⁰

7·1조치 이후 더 어려워진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지역적인 편차가 있다.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보다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렵다. 특히 평양에 사는 주민들은 7·1조치 이후 장사가 허용되고 시장이 공식화되는 등 생활 여건이 나아져 살기가 편해졌으며, 생활수준도 높아졌다고 한다.¹²¹

¹¹⁷ - 중국체류 탈북남성 B00과의 인터뷰, 2007년 6월 5일.

¹¹⁸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p. 15.

¹¹⁹ - 중국체류 탈북여성 A00과의 인터뷰, 2007년 5월 12일.

¹²⁰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91호 (2007).

¹²¹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일반적으로 경제개혁은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 확대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하나 개혁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7·1조치 이후의 북한에서와 같이 생산성을 높여 인센티브제의 혜택을 받아 높은 임금을 받고 시장에서의 사경제활동(장사)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신흥부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의 혜택도 줄어들어 더욱 빈곤해진다는 것이다.¹²²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사이의 빈부의 차이가 날로 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¹²³ 현상이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소수의 신흥부유층이 형성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7·1조치에 따른 물가 급등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킴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었다.

자기가 (돈을) 모은 사람은…, 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땅이 한 700평정도 있었어요. 땅이야 국가 땅이지. 그런데 내가 거기다 먹고 산다 뿐이지.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땅이 1000평이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종자도 자기 농사지은 것 또 심고, 비료도 못주고 이렇게 하면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잘 살게 되죠. 그리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은…, 나도 가을철에는 좀 여유 돈이 있으면 (농산물을 사서) 모아뒀다가 다음해 5월쯤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값이 거의 2배 뒀단 말이에요. 살 때는 내가 100원에 샀는데, 다음해 되어서 팔 때에는 200원이 된단 말이에요.¹²⁴

한 새터민에 따르면 7·1조치와 함께 화폐개혁 소문이 돌았으며 이때

¹²² -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 p. 186.

¹²³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 258.

¹²⁴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에 돈 있는 사람들이 물품 사재기를 하여 후에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남겼다고도 한다.

이 경제관리체제가 나오면서 그 때에 돈이 또 500원짜리도 나오고 예전에는 100원까지 딱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500원짜리도 나오고 1000원짜리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화폐 교환 하는 줄 알았지 그때는, …그 때 당시에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게 했어요. 어느 날짜를 정해주었거든요. 7월 달이면 7월 30일까지 이 돈을 쓰고 그 이후부터는 못 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기간에 중단점이 생겼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막 물건을 사 들인 거예요. 사들여 갖고, 물건으로 사 놓으면 돈이라는 게 물건도 돈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별로 크게 고민 안하고, 후에 팔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경제관리체제 해서 돈 가격이 오르고… 그래 올려놓고 돈 있는 사람은 그 기간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화폐개혁을 한다 뭐 어쩐다 한다니까,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 하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사 놓는다거나… 돈 있는 사람이 상품을 사서 다시 판매했을 때에는 이익을 많이 봤지요.¹²⁵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7·1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가구당 한 달 총 수입이 8,000~12,000원이 돼야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가계를 꾸릴 수 있었다.¹²⁶ 새터민들에 따르면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간부들은 중국의 잘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데, 이들로부터 식량을 꾸어먹지 않은 노동자가 없을 정도이며 이들은 변압기도 설치하고 산다고 한다.¹²⁷ 또한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파, 녹음기, 녹화기, 선풍기, 냉동기 등을 갖추고 살며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을 두고 생활한다. 평양에 사는 일부 부유층은 중국 연길을 오가며 식품, 생필품 등을 다량으로 매입하여 장기간 소비하기도 한다.¹²⁸ 한 부유층

¹²⁵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¹²⁶ -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 p. 206.

¹²⁷ - 중국체류 탈북남성 C00(무역회사, 남)과의 인터뷰, 2007년 5월 20일.

은 700달러 주고 일제 중고 피아노를 구입하여 자녀를 피아노 과외(5만원)시키는가 하면, 대학교원한테 영어 과외(5만원)도 시키고 50달러 주고 컴퓨터를 구입하여 컴퓨터 교육도 시킨다.¹²⁹ 그런가 하면 서민들은 중고 자전거를 사기도 어려운데 잘 사는 사람들은 일본산 자전거를 15만~3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구입하기도 한다.¹³⁰ 1만~2만 달러가 넘는 수십 평짜리 집들을 서슴없이 구입하는 부자들도 있으며 이런 부자들은 쌀밥에 고깃국도 싫증내는 생활을 한다.¹³¹ 그러나 이와 같은 부유층은 소수일 뿐 북한주민들의 대다수는 극심하게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시장에 나가면 주로 극빈층이 하는 손수레꾼, 짐 운반꾼 등 샅별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또한 소토지를 농사짓는 집에 가서 김매기나 경작을 도와주면서 점심 한 끼니 얻어먹고 저녁에 간단한 끼니 거리를 받아가는 이른바 ‘머슴질’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한다.¹³²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산다. 신발도 못 신고 세수도 못 하고 옷도 기워 입는다. 그들은 대체로 순박하고 억척스럽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거다.¹³³

마. 일탈행위의 증가

식량난의 악화로 인해 기존에 주민통제의 효율적 기제로 작용해 온 배급제가 붕괴되고 생계문제 해결을 단위가족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비사회주의적 행위 내지 사회적 일탈 행위가 증대

¹²⁸ - 중국체류 탈북여성 A00과의 인터뷰, 2007년 5월 12일.

¹²⁹ - 중국체류 탈북여성 P00과의 인터뷰, 2007년 5월 20일.

¹³⁰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p. 49.

¹³¹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90호 (2007).

¹³²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p. 52.

¹³³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되었음은 이미 알려진대로이다. 예를 들면 소속 직장 및 단체의 학습, 생활총화 등에 불참하는 조직이탈, 노동자의 직장이탈과 무단결근, 당·정 간부와 장마당·열차 단속원 등을 대상으로 한 뇌물수수, 관료의 직권 남용과 국가소유 물자유용 및 거래, 허위진단서 발급 및 개인의료영업 등 불법 의료행위, 주택의 암거래, 국경 밀무역, 농민들의 식량 전용과 국가수매 기피 등의 행위, 절도, 소매치기, 강도, 폭행, 자살 등이 그것이다.

새터민들에 따르면 7·1조치 이후에도 이와 같은 비사회주의적 행위 및 일탈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직 및 직장생활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으며 단속원들의 횡포, 당·정 간부의 부정·부패, 관료의 직권 남용도 여전하고 절도와 폭행, 자살 등의 일탈행위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7·1조치 이전과 비교할 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이제는 개인의 돈이나 물품을 훔치기보다는 은행이나 회사를 상대로 절도를 하거나 국가소유의 것을 훔치며 이전보다 그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그 전에는 개인이 개인 것 터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7·1조치 이후에는) 그런 게 아니고 은행을 터다거나 회사를 털고, 범위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그게 조치가 그렇게 되면서 어느 한 측면에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준을 한 단계 띄워줬기 때문에, 그때에는 조치 전에는 고만한 수평상태에서 나갔다면, 경제조치가 탁 바뀌면서 있는 사람은 장사를 더 광범하게 하고 없는 사람은 저락 상태에 들어가니까 없는 사람이 가만있어요? 거기에 더 크게 하려고 하지. 조치 이후에 북한 내에서 돈이 될 만한 장사를 한다는 게 별로 크게… 다 제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쌀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돈 크게 못 벌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판다고 해도 그거는 도둑질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동, 황동 그딴 거, 공장을 아예 파괴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선들 잘라가지고 중국에다 팔면 그게 돈이 되거든요.¹³⁴

I
II
III
IV
V
VI

¹³⁴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면, 내가 살기 어려우면 누구를 죽이고 돈 빼앗고 이러는 게 아니고, 차라리 동이나 알루미늄이다 그런 게 비싸다 그러면 공장가서 전기선 잘라다가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것 가지고 총살도 많이 했습니다. 한해 몇 명씩 그러고…. 오히려 국가 것을 도둑질해서 살지. …지금 9월인데,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남의 밭에 가서 옥수수 뜯어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밭에는 될수록 안깎니다. 국가 밭에 가지. 개인 밭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도 다 말한단 말이예요. 개인이 손해 보면 엄청 손해인데, 국가는 알리지 않은 손해란 말입니다.¹³⁵

7·1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 내지 일탈행위와 관련해 새터민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은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동정하는 편이라고 한다. “이래 죽고 저래 죽을 바에는, 뺏어먹더라도 오늘은 살지 않느냐, …못 먹는 시대에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 흠치지도 못하면 그야말로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라고 하며 생계형 범죄에 대해 관대함을 보이는 분위기라는 것이다.¹³⁶

그런데 어느 누가 직장에서 흠치다가 잡혔단다 그러면, 그 직장 머리 되는 사람들은 그 집에 가 봐요. 가보고 실제 먹을 것이 있나 없나, 없으면 사정 봐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요즘은 국가 한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서로 인간적으로 그러는 것 많아요. 실제 집에 가봤는데 가마 열어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쌀독을 여니 아무것도 없으면 또 그럼 봐 주지요. 그것도 사람 나름이고….¹³⁷

또한 가족 부양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비난보다는 동정하는 편이라고 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성매매 여성

¹³⁵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¹³⁶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67호 (2007).

¹³⁷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들이 대거 검거되어 형을 받았는데 대체로 가난한 집 딸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어머니와 토의한 끝에 성매매를 한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 이 사건에 대해 주위 사람들은 “일자리와 배급, 노임이 조금만 있었어도 이런 일을 누가 하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¹³⁸

2. 북한주민의 의식변화¹³⁹

가. 자본주의 체득과 수용

1) 자본주의 경제

북한에서 자본주의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자본을 매개로 하여 가장 교활하고 악랄하게 진행되는 착취사회, 곧 자본가계급이 국가주권과 기본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착취하는 사회제도”이며, “자본주의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산 썩고 멸망하는 사회”이다.¹⁴⁰ 또한 “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고 옹호하는 반동사상”인 “자본주의사상(부르조아사상)의 기초는 개인리기주의”이며, 자본주의사회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사이의 빈부의 차이가 날로 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¹⁴¹로서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는 썩어빠진 사회이며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황금만능의 사회”이다.¹⁴² 북한은 오랜 기간

¹³⁸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89호 (2007).

¹³⁹ -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는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새터민들의 관련 구술내용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쓰기 위해 분석 자료로 수집한 새터민들(2003년 이후 탈북자)의 구술내용들에서 빈도 높게 다루어진 주제들을 선정하여 관련 구술내용을 분석하였다.

¹⁴⁰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 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24.

¹⁴¹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 258.

¹⁴²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 대사전 2』, p. 24.

I
II
III
IV
V
VI

반복적인 사상교양·교육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본주의를 인식, 이해하도록 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제국주의, 착취계급 등 적대적이고 해악적인 개념과 동일하게 이해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한 새터민¹⁴³은 자본주의를 “개방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는 장사해서 이윤 남기는 것이나 사채놀이 같은 것은 자본주의라기보다는 단지 “이기주의 하는 것”이며 “당·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비사회주의”가 곧 자본주의라고 이해한다.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내지 의식에 있어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래 식량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부터이다. 어려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장사 등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을 해나감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변대학의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장기간 계획경제체제속에서 상품경제는 자본주의라는 관념하에 장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상이 나쁜 사람으로만 보던 인식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물론 지역에 따른 차이로 중국과 린접한 변강지역과 내지사람들의 관념에는 아직도 차이가 크지만 장사해야만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현재는 장사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다. 장사를 자주 하니 의력이 터서 장사비결도 늘었다고 한다. 현재 장마당에 가면 각종 식품, 음식들이 과거보다 질과 모양이 매우 제고 되었다고 한다.¹⁴⁴

¹⁴³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¹⁴⁴ 림금숙, “90년대이후 조선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참여의 변화,”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연변대학 여성문제연구중심, 1999);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98에서 재인용.

새터민들은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이 “그저 먹고 살기위해서 장사를 할 뿐” 장사와 같은 개인 상행위를 “자본주의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느라 자신들의 상행위를 사상·이념의 잣대로 평가할 만큼의 시간적·정신적 여유도 없다고 한다. 사실상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수용하기보다는 장사 등 개인 상행위를 통해 체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 장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본의 활용에 따른 이윤 확대를 도모하는 등 자본주의를 체득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달라져간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에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북한당국의 경제 자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니 대중들 스스로에 의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7·1조치는 국가가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받을 맞춰보자 하는 것으로 한 것이죠.¹⁴⁵

우리가 배울 때는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했지만, 자기 자본을 이렇게 해야만 내가 남보다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게 됐죠. 왜냐하면 장사를 해도 제 돈 가지고 제가 장사를 하니깐 그만큼 더 이윤도 많이 불고 돈도 많이 불어나니까 좋잖아요. 이 나라가 딱 그 상태로 정지 상태로 있어가지고, 장사도 안하고 국가에서 주는 대로만 먹고 사니까 맨 날에 지리지 못살고 이렇게 살아서 앞날이 없다는 거, ‘이렇게 자본주의 식으로 장사를 하니깐, 이게 자기한테 리윤이 많이 불어나니까 얼마나 좋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실지 못살게 되면서 나라에서는 안주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먹을 건 없고 돈도 없고 쓸 것도 없는데, 내가 벌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개척하는 게 이게 나쁜 길은 아니라는 걸 알았지요. …남의 힘과 그런 걸 빌리지 않아도, 자기 절로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으니깐 자본주의라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됐지요. 그걸 그렇게 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거…¹⁴⁶

¹⁴⁵ - 새터민 H012와의 인터뷰, 2005년 11월 2일.

I
II
III
IV
V
VI

한 새터민 여성도 “배급을 줄 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았으나 장마당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게 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으며, 그러다 보니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이 “자본주의”로 되어 가고 있었다고 한다.¹⁴⁷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속화된 것은 7·1조치를 계기로 해서이다. 7·1조치 이후 개인들의 상행위가 공식화되고 영역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자본주의 상품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간 것이다. 또한 주민들에게 현물로 주던 노동보수를 화폐로 전환함으로써 화폐경제의 요소가 도입되고 개인과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제반 요소들이 도입된 것¹⁴⁸과 함께 노력한 만큼의 금전적·물질적 보상이 따르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도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속화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국가경제시스템의 마비로 개인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경제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사유재산이나 이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적 영역의 시스템 자체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도록 변화함으로써 제도에 맞춰 경제 인식 자체를 수정하여 공적·사적으로 실리라는 문제를 자신의 생활과 결부하여 생각하게 되고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¹⁴⁹

새터민들에 따르면 7·1조치 이후 자본주의 교육도 비교적 활성화된 편이다. 7·1조치 이후에는 남한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하여 남한의 경제 교과서를 학습하거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금강산경제특구, 또는

¹⁴⁶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¹⁴⁷ - 새터민 K041(사무직, 여)과의 인터뷰, 2004년 4월 2일.

¹⁴⁸ -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94.

¹⁴⁹ -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 p. 211.

북한 관공서 및 기업 단위에서 자본주의 특강을 하였다고 한다.¹⁵⁰ 한편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데에는 중국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도 적지 않은 작용을 하였다. 한 새터민 여성은 1990년대 초부터 몇 해에 걸쳐 직장에서 만난 중국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개혁·개방의 성과와 자본주의의 장점 등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90년부터 8년간 근무하면서 사사려행자들 많이 봤어요.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중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거는 개혁 개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살게 되었다는 거... 그 사람들이 개인이 땅도 가지고 있고 축산을 해도 목장식으로 크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우리는 개인이 한두 마리씩 그저 적게 해서 그 고기를 팔아가고 그걸로 먹고 살고 이렇게 했지만, 중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크게 하니까, 그 별면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제 것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많은 신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장사를 해야 만이 잘 산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장사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고 지지리 못살았지만, 장사를 하니까 남한테 구걸도 안하고...’ 남의 힘과 그런 걸 빌리지 않아도, 자기 절로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으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됐지요. 그걸 그렇게 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거...¹⁵¹

2) 자본주의 문화

북한의 사전을 통해 보면 ‘자본주의 문화’¹⁵²는 “로동계급의 문화와 대립되는 반혁명적인 문화”이며 “자본주의 문화의 해독성은 ...사람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계급적각성을 무디게 하며 그들을 부패타락하고 속물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있고 “자본주의문화의 침습, 특히 자

¹⁵⁰ - 새터민 K024와의 인터뷰, 2003년 7월 1일.

¹⁵¹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¹⁵² - 백과사전 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 256.

본주의사상의 침투를 막지 못할 때에는 사회전체가 부패변질되고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수 없게” 되므로 자본주의문화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문화의 사소한 표현도 반대하여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1980년대 말 이래 국경지역으로부터 불어온 이른바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북한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심화되어가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의 사상적 이완과 가치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0년대 말 이래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서구관계 개선 및 부분적인 체제개방을 모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1995년 ‘평화를 위한 국제 체육 및 문화축전’ 등의 행사 유치를 통해 대외이미지 개선과 체제개방 의지 부각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서구 관계개선 및 체제개방의 과정에서 침투된 서구 사조 및 문물의 영향,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 사이에 사상적 동요가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점차 확산·심화시킨 것은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다.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한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방북이 잦아졌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서구 사조·문물과의 접촉 기회가 더 많아진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외부사조 및 문물의 침투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우려하여 1990년대 말 이른바 “모기장”론¹⁵³을 구체화하였다. 북한

¹⁵³ - ‘모기장’론은 1999년 6월 1일자 『로동신문』의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논설의 요지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는 세계제패전략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단단히 치고 “사회주의사상문화전선을 금성척벽으로 다져나가자”는 것이다. 요컨대 ‘모기

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도 “모기장 전략”이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구소련 해체 및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때를 같이 하여 등장한 “모기장 전략”은 자본주의 풍조가 침투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1990년대 말에 나온 “모기장”론은 부분적 체제개방 확대에 따른 북한 주민의 혁명성·이념성 약화를 우려하여 강조한 것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또한 “모기장”론은 북한 주민들이 부분적 체제개방 확대에 따른 외부사조·문물과의 접촉과정에서 겪을 수도 있는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예방책으로서의 의의도 엿보인다. 7·1조치 이후에도 북한주민들 사이에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단속 및 통제가 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 및 북·미관계개선의 가능성이 높아감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내외적 정세 변화가 북한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중시하여 주민통제 및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의 주민단속을 위한 ‘포고문’에서 잘 엿볼 수 있다. 한 예로 지난 7월 북한당국은 함경북도 회령과 온성, 무산 등지에서 포고문을 붙이고 보안원들을 내세워 인민 반별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인민보안성의 ‘포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소탕전이다. 전자다매체, 콤팩트방, 전자오락실, 노래방 등을 통한 반사회주의 사상 류포를 막기 위해 이런 시설 등을 일체 다 없애고 필요한 경우 국가출판물보급소에서만

장’문은 부분적 체제개방에 따라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들어올지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르조아 사상문화(제국주의사상문화)의 사소한 요소(모기)도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I
II
III
IV
V
VI

승인 판매를 허용한다. 돈벌이 목적으로 차려놓았던 봉사소 형식의 식당, 노래방, 전자오락실, 컴퓨터방을 모두 폐쇄한다. 포고가 나간 이후부터 위반자는 타 지방으로 이주시키거나 추방과 함께 모든 것을 무상몰수하며 연관단위는 직위 여하에 관계없이 엄벌에 처한다. …적들의 심리모략에 각성 없이 걸려들지 말라. 가정에서 흔히 보던 록화기 알판도 이젠 목란 비디오만 허용하며 그 외 다른 복사판을 보다 잡히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¹⁵⁴

또한 지난 9월 함경북도는 ‘비사회주의그루빠’ 검열 과정에서 군부대들과 중앙당 직속기관 회사, 시·군당이나 개인들이 설치한 직통전화를 모두 압수하거나 회수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교환수를 통해서만 전화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국내 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⁵⁵ 이 외에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는 손 전화기 검열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으며 평양을 비롯해 평성, 원산지역에서는 불법CD를 보거나 소유, 또는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내리기도 하였다.¹⁵⁶ 중국에 있는 한 탈북주민에 따르면 당구장 영업이 한 때 허용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단속이 심해져 비밀로 영업하고 있다고 한다.¹⁵⁷

7·1조치 이후 보다 더 강화된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대한 북한당국의 우려와 경계는 노동당 문예정책의 산물이라고 하는 북한 소설작품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2003년 발표 작품인 중편소설 『열매는 봄날에』에서는 ‘자유아시아방송(FRA)’을 운운하며 “미국식 《가치관》”과 “양키문화” 침투를 경계하는 한편, 일에 태만하고 사상적으로 해이해진 “반장”을 외부 사조·문물에 젖은 사람이라고 비판한다.

¹⁵⁴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80호 (2007).

¹⁵⁵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90호 (2007).

¹⁵⁶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위의 글.

¹⁵⁷ - 중국체류 탈북여성 A00과의 인터뷰, 2007년 5월 12일.

미제는 아시아나라들의 거둬되는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자유아 시아방송》을 개시했고 최근에는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조선말방송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 무슨 미국식 《가치관》과 썩어빠진 양키문화로 우리를 어찌 보자고 수작질할것이였다. 우리의 모기장은 빈틈이 없고 그 개나발을 들을 사람도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민을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발악은 극도에 이른것이였다.¹⁵⁸

사실 지금 송자동사람들은 자기 반장에게서 사상적으로 변질이 올수있는 시초의 징후들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선 위험한게 뭘가. 정치적무관심성이요. 신문을 보지 않고 정세를 알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신문이 매일 와두 대문에 그냥 꽂혀 있는 날이 많대요. 그 다음 풀짐, 거름짐을 지기 싫어 하구 …그리구 소왕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깔보구 외국상품에도 맛을 들이기 시작했던 말이요.¹⁵⁹

새터민들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문화와 관련한 소식 및 정보를 접하는 경로는 남한 라디오 방송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 중국 텔레비전 시청, 중국거주 친척·친지 등이며 특히 불법 영상녹화물(비디오 테이프·CD)을 보며 자본주의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실례로 평양에서 온 한 새터민 남성은 북한에서 영상녹화물을 어렵지 않게 구해 볼 수 있었으며 친구들과 돌려보고 내용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네. 남한노래도 듣고, 지금 OCN에서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다 봐요, 비디오테이프… 지금 우리 다 본 영화들 하더라구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북한에서 다 본 영화들 하네?’ …비디오 테이프가 친구들하고 돌아가고, 비디오 테이프가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거 잘못하다가 잘못되면 감옥가요. 비디오 테이프 드라마 거기서 많이 봐요.¹⁶⁰

¹⁵⁸ - 박웅진, 『얼매는 봄날에』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 pp. 76~77.

¹⁵⁹ - 박웅진, 위의 책, p. 102.

¹⁶⁰ - 새터민 C00(무역회사, 남)과의 인터뷰, 2006년 5월 21일.

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식 확산·심화

북한의 공식가치지향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유일한 삶의 목표는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며 오직 이들을 위해 사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은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확고부동한 생활신조로, 인생관”으로 하고 살아왔으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을 “하늘이 낸 위인”, “탁월한 영도자”, “민족과 인류의 운명” 등으로 찬양하며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을 비롯한 세계의 인민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대상이라고 주지시킨다.

새터민들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김일성은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편이다. 김일성은 곧잘 일반주민들 속에 들어가 매우 소탈하고 친근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의 감동과 충성심을 자아내는 등 “인민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았으며 사후에도 “위대한 수령”으로 평가받는 편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수령님 때에는 일을 하면 먹고 살 수는 있었다”고 회고하며 김일성의 통치력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김정일 위원장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을 일컬어 “김일성의 화신”이며 “사회주의 수호자”라고 찬양하며 김정일 위원장이 “쪽잠과 쫄면밥”을 먹으며 인민생활을 돌본다고 선전한다. 또한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고이즈미 전 일본 수상 등의 평양방문도 “탁월한 영도자” 김정일 위원장의 위대성에 대한 굴복이었다고 선전한다. 그런가 하면 식량사정이 아주 나빠도 김정일 위원장 생일에 소량이나마 식량을

배급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을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각인시킨다. 당국의 “사상 선전은 죽어도 살아도, 모든 일 모든 사업을 하여도 김정일 위원장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굶어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당에 대한 충실성,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충실성만이 살길이라고, 쓰러져도 작업장에 나와 쓰러져야 한다고 선전”한다.¹⁶¹ 새터민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반복적인 사상교양으로 인해 “순진한”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은 나라 살림과 주민생활이 어려워진 데 대해 김정일 위원장을 비난하지 않는다. 국제사회 동향과 국내외 정세를 모르고 지낸 북한주민들은 당국의 교양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난이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인 줄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 때 당시에는 얼마나 순진하고…. 그런, 그 별써, 그저 못살면 그저 못 사는가 했지, ‘누구 때문이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 생각을 안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그저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북한 사람들 마음이 다 그래요. 그 때 당시에는 눈 뜨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건 다 우리는 미국 때문인 줄 알았죠. 미국 때문에 경제적 봉쇄를 당한다고, 나라에서도 그렇게 강연제강을 그렇게 하고….¹⁶²

한 새터민 여성도 북한경제가 어려운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운이 좋지 않기 때문이며 김정일 위원장은 인민을 위해 힘들게 고생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나쁘다기보다는 ‘운이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군부대를 시찰하는 것이 많이 나온다. 너무나 사상교

¹⁶¹ - 중국체류 탈북남성 S00과의 인터뷰, 2006년 7월 5일.

¹⁶²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양이 많이 되어서 그걸 보고 감화돼서 ‘장군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 나이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배급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 가정을 먹이는 것도 힘든데 북한의 수만 수천 가구를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감정을 가지고 산다.¹⁶³

그러나 고난의 행군시기에 들어서면서 배급이 중단되고 대량아사가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원망과 반발감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식량난이 지속되고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7·1조치 이후 보다 더 심화되었다.

(경제난의) 처음엔 모두 교양도 받고 정의와 충성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때 남들이 상상도 못 하는 현실 아닌 현실을 체험한 뒤부터는 현실을 될수록 외면하고 싶어 하고 모두 냉정해졌다. …지금은 애국이니 충성이니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살 수 있고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집안 자식들이나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¹⁶⁴

평양 출신의 한 새터민은 북한주민들 사이에 ‘인권유린’이라는 말이 돌았으며,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속내를 드러내놓고 김정일 위원장과 나라 정책에 대한 불평을 하였다고도 한다. 경제난은 김정일 위원장의 봉쇄정책 때문이며 김정일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북한주민들을 미개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¹⁶⁵ 북한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

¹⁶³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¹⁶⁴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84호 (2007).

¹⁶⁵ - 새터민 C010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23일.



고 생활하였던 한 새터민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7·1조치 이후에도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데 대해 김정일 위원장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일부 간부들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인민생활의 어려움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아 김정일 위원장이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¹⁶⁶ 그러나 가족구성원 가운데 두 사람이 당원이었던 또 다른 새터민은 김정일 위원장과 당 내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일부 당원들과 나랏일에 관심이 있는 “머리가 좀 깨인” 사람들이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¹⁶⁷

북한주민들은 식량난 이래 중국을 왕래하며 북한이 못 사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점차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친척방문이나 장사를 하기 위해 중국을 오간 북한주민들은 중국을 오가며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써 북한이 못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독재로 인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¹⁶⁸ 한 새터민 여성도 탈북동기가 김정일 위원장이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 때문이 아니었으나 중국체류 중에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한 번 인간답게 살다보자는 마음으로 (북한을) 떠난 거지, 김정일 위원장이 정말 잘못해서 못 산다거나 제도가 나쁘다는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에 들어간 이후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비방을 듣게 되었고 차차 많이 알게 되면서 ‘어쨌든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거지아 이들이 중국에 넘어가면 아이들이 ‘너의 아버지는 김정일 위원장인데 신발 하나도 못 신겨 주느냐’라고 놀림을 당하여 기분이 나빠졌다.¹⁶⁹

¹⁶⁶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¹⁶⁷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¹⁶⁸ - 새터민 C010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23일.

¹⁶⁹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한편 7·1조치 이후 북한주민들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반발과 비난이 보다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과 반감도 더해졌다. 새터민들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체제가 잘못 되어서 우리가 못 사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국이 교양하는대로 “미국의 경제 봉쇄 때문에 못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상교양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7·1조치 이후에도 보위부 지도원들이 나와 “중국가지 말라, 조금만 기다리면 잘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의 사상교양을 했다고 한다.¹⁷⁰ 북한 당국이 최근에 실시한 주민 대상 강연도 유사한 내용이다.

1~3년이면 우리 인민들이 허리를 쭉 펴고 풍창거리며 살게 된다. 먹고 입는 걱정은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 남의 나라를 넘겨다보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내자.¹⁷¹

그러나 7·1조치가 시행되고 몇 해가 지나도 시행 초기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대책 없이 막연하게 “몇 년만 더 참으라”는 식의 설득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견딜 만큼 견뎌도 개변은 커녕 점점 살기가 막막한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런 선전을 하는가”라며 냉담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1조치 이후 생활이 더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은 당국의 말을 믿지 않고 스스로 자활·자립하기 위해 노력하며 배급 번호도 잇을 만큼 국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¹⁷²

한편 한 새터민 여성의 구술을 통해 보면 십 수 년 동안 극심한 식량난, 경제난을 겪으며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외세배격보다 외세의존 의식

¹⁷⁰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¹⁷¹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66호 (2007).

¹⁷²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이 점차 형성되어 가는 경향이며 전반적으로 비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이제는 북한주민들이 “외세를 미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외세 의존의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북한에는 쌀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모든 게, 경제적으로나 놓고 볼 때, 하나부터 열까지 일체 다 마비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만이, 이게 외세에 의존 되어야 만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 차원이 이제는 많이 틀려졌어요. 그전에 하고 틀려요”¹⁷³

최근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내세우며 김정일 위원장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은 핵무기보다도 식량과 의약품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십 수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소리는 치지만 갈수록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 나올 것 같다”¹⁷⁴라는 한 탈북여성의 말에는 김정일 위원장과 국가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짙게 배어있다.

다. 긍정적 대남 인식과 남한 문화 확산

1) 남한 사회와 주민

북한의 잡지, 신문 등 간행물에서 남한 실상 관련 내용들은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비난조의 글들이다. 남한 정권은 이민, 해외 입양 등의 미명 아래 수많은 동족을 해외에 팔아 돈벌이를 하는 만행

¹⁷³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¹⁷⁴ - 좋은 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제54호 (2007).

을 감행하고 있으며 남한의 경제·사회 및 주민 생활 실태는 극도의 비참한 상황이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남조선 인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을 그리워하며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한에 대해 사상 교양을 통해 미국의 강점하에 식민지로 아주 못 사는 곳이며 한국전쟁 때에도 그러했듯이 미국과 함께 다시 북침할 기회만을 노리는 ‘미국의 앞잡이’라고 주민들에게 각인시켜 왔다. 식량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남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은 “민족공조의 통일전선 논리로 합리화 시키고” 있으며,¹⁷⁵ 남한이 “장군님의 호통”에 굴복하여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민들을 교양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남한 사회와 주민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했던 것은 오래 전인 1980년 광주민주항쟁에 관한 북한의 방송 보도를 보면서부터였다.

80년도지요? 그때랑은 그게 뉴스로 보도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예민한 사람은 ‘옷 잘 입었네, 우리보다 낫네, 격자 옷들 다 거하게 입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 격자 옷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할 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90년대도 드문드문 가끔씩 나왔어요. 그럴 때 보면 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옷 잘 입었다는 것을…¹⁷⁶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남한 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인식 변화의 주요 계기는 식량난 이후 빈도가 높아진 북한주민들의 중국 왕래이다. 식량 구입을 위한 불법 도강이나 친척방문, 또는 외화벌이나 밀무역 등으로 중국을 왕래한 북한주민들은 남한 텔레비전 방송, 남한 가요 테이프와 영화CD, 중국내 친척·친지, 남한을 다녀온 조선족 등을 통해 남한 실상

¹⁷⁵ - 새터민 K024와의 인터뷰, 2003년 7월 1일.

¹⁷⁶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도 한다. 또한 남한에 입국한 가족·친척 등과의 전화 통화로 남한의 경제발전 실상을 알게 되면서 남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남한사회와 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어 갔다는 것이다. 실례로 한 새터민 여성은 2002년 중국 도문에 가서 남한 카세트 테이프와 가요CD, 남한 영화 다섯 편 등을 듣고 보았으며, 그때야 “남한이 저렇구나, 잘 사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⁷⁷ 또한 새터민들에 따르면 북한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남한 라디오방송, ‘미국의소리방송(VOA)’, ‘자유아시아방송(FRA)’ 등을 몰래 듣거나 뼈라를 보면서 남한에 대한 인식을 달리 했으며 중국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도 남한 사회와 주민생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였다.

북한도 선전용으로 만들어 많이 과장해서 내보낸다. (따라서) 저기(남한 드라마)서 절반만 사실이라고 해도 생활수준이 많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전에는 한국은 사람이 못 살 세상, 돈이 없으면 아예 못 사는 세상, 어쨌든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내보냈다. 교양에서도 미국 놈만 득실거리고 노예처럼 산다고 교육시켰다. 지금은 드라마를 보면 인간적인 것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많이 알게 됐다.¹⁷⁸

2001년도에 장사를 하려고 청진을 가려고, …우리 거기서 한 개 리를 벗어나서 거기 가서 차 타려고 갔는데 집에서 중국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는 친구가 (보고 있길래), …저녁 아홉시 반이면, 그때 저는 뭘 봤냐면 경찰특공대라는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 봤을 때, 아, 이 한국이 도로나 수송, 운수수단이나 경찰이 그 강도를 추적하는 거를, 그거 봤는데, 처음으로 그것 보다니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저렇게

¹⁷⁷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¹⁷⁸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발전 했나 영화니까 저렇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즉석으로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¹⁷⁹

2000년 남북정상회담도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식 변화에 주요 계기로 작용하였다. 남북경협, 이산가족 상봉, 관광교류 등 6·15남북공동선언이 이행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남한에 대해 점차 긍정적으로 인식, 평가하게 되었으며 7·1조치 이후에도 이와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식 변화는 북한 교육 및 방송에도 반영되고 있는 바, 최근 들어서는 교과서와 방송 내용에 있어 이전과 같이 남한 실상에 대한 왜곡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그 전에는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많았고 방송에서도 남한의 동포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내용이 많았다. 지금은 그런 교육을 안 한다. 교과서에 간혹 통일을 하자라는 목적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아이들 교육엔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 위에서 한국에 대해서 자랑하고 말해 주는 것은 없지만, 중국에 내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이 잘 산다더라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¹⁸⁰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남한에 대해 우호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인 편이며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남한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주민들이 잘 살기는 하지만 남한은 아직도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나라이며 미국과 일본때문에 부강한 나라이므로 북한이 전쟁을 해서라도 남한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새터민들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은 남한의 대북

¹⁷⁹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¹⁸⁰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쌀·비료지원 사실을 알고 있다. 러시아, 중국 등으로부터의 지원 사실은 노동신문에 간략하게나마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미국, 일본, 남한 등으로부터의 지원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으나¹⁸¹ 장마당 등지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적십자사’라고 쓰인 쌀·비료 마대들을 보고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¹⁸² 한 새터민 여성에 따르면 이전에는 남한 쌀 마대가 들어오면 마대는 못 나가게 했는데 지금은 그대로 나가며 시장에서 ‘한국 쌀’이라고 써놓고 판매할 정도이다.¹⁸³ 관련 자료를 통해 보면 함흥시장에서 남한 쌀은 ‘호남별 쌀’로 통한다. 남한 쌀은 북한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 쌀 판매 상인들은 ‘호남별 쌀’이라는 표지를 붙여두고 판매하는가 하면,¹⁸⁴ “장마당에서 좋은 쌀은 ‘호남별 쌀’이라고 해서 거짓말하고 판다”고 한다.¹⁸⁵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새터민들의 구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새터민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는 있으나 고마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¹⁸⁶ 당국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원규모 등을 정확하게 모르며, 지원 쌀을 국가에서 배급받은 적이 없어 비싼 값에 구입해 먹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김정일 위원장이 “호통을 쳐서” 남한이 쌀·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의 새터민들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쌀 지원에 대해 고마워한다고 전한다. 특히 양정사업소와 같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은 남한의

¹⁸¹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¹⁸² - 새터민 C010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23일.

¹⁸³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¹⁸⁴ - 함흥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한국산 쌀이 호남쌀이어서 ‘호남별 쌀’로 통함.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p. 33.

¹⁸⁵ - 중국체류 탈북여성 A00과의 인터뷰, 2007년 5월 12일.

¹⁸⁶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대북지원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어렵지 않게 지원쌀을 구해 먹는다고 한다.

한 민족이니까, 이렇게 해서 쌀도 보내주고…. 북한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는 고맙게, 북한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례로써는 중국에서도 쌀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면, 중국 사람들이 그 쌀집에 한 개에 쌀이 50kg라면 거기에서 한 1kg 내지 500g씩 모자라요. 모자라고, 50kg이 안 된다고…. 한국 지대 쌀은 40kg포장인데 40kg 포장해서 500g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해주었잖아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한 민족이니까 해줘도 정말 진심으로 해주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게 아니잖아요.¹⁸⁷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는 옷, 화장품, 가전제품 등 남한 상품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남한 상품이 좋다는 인식이 북한의 주요 시장에 퍼져 있어 남한산은 흥정하지 않고도 매매가 된다.¹⁸⁸ 남한 상품은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팔기는 힘들어 상표를 떼고 ‘아랫마을’, ‘아랫동네’라는 은어로 남한산임을 알린다. 그러나 중국사람으로부터 중고 옷을 받아 장사를 했던 한 새터민 여성에 따르면 남한 상표 부착 여부에 따라 옷 가격에 차이가 나므로 상표를 붙인 채 비싼 값에 팔기도 했다고 한다.

가만 가만 해야죠. 그건 상표 있고 없고에 그 가격이 차이 나거든요. 한국 상품이다 하면 벌써 메이커 하고, 여기도 메이커하고 그 뭐 이저 차이는 것처럼 거기서도 차이나요.¹⁸⁹

¹⁸⁷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¹⁸⁸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p. 58.

¹⁸⁹ - 새터민 여성,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최근 북한을 취재한 한 방송사에 따르면 북한의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남한산 가전제품의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

‘데꼬’라고 불리는 중간 상인들 중에 10만 불이 넘는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도 꽤 생겨났다. 그들 중 상당수는 삼성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국산은 싸구려이고 한국산은 고급제품으로 통한다.¹⁹⁰

2) 남한 문화

1980년대 말 북한주민들 사이에 남한 대중가요와 디스코 음악이 유행한 이래 최근 들어서는 불법으로 만들어진 남한 드라마와 영화CD,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이 주민들 사이에서 드물지 않게 유통되고 있다. “남조선 록화 테이프와 불법으로 규정된 테이프를 엄하게 단속할 데 대하여”라는 중앙당의 지시가 전국에 내려지고,¹⁹¹ 불법CD 단속을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소탕전”¹⁹²이라 하여 중앙당 차원에서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담은 불법CD, 비디오 테이프 등이 주민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7·1조치 이후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로 많은 돈을 모은 신흥 부유층과 기득권을 누리는 권력층(간부층)에서 남한 드라마와 영화 등

190- 공용철, “KBS 스페셜-2007 현지리포, ‘시장, 북한을 바꾸다,’” 『민족화해』 제28호 (2007).

191-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76호 (2007).

192-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최근에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남한 영화 보기가 유행하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처벌받은 가족들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추방되었고 포고문이 나온 후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역적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전국 각지에 현재 109호 상무가 조직되어 단속 사업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90호 (2007).

I
II
III
IV
V
VI

을 즐긴다고 한다. 이들은 중국에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남한 영상물CD를 구입하는데 최근에는 이들의 수요에 따라 함경북도 두만강 국경변 시장에서 남한 드라마CD, 녹음기, 녹화기(비디오), 옷, 신발, 시계 등과 같은 남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⁹³

북한에서도 ‘이브의 모든 것’, ‘아름다운 날들’, ‘가을동화’ 등 남한 드라마를 많이 보았다. 예전에는 한 두 사람이 몰래몰래 보았지만 차츰차츰 퍼져나가 재미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안 보고는 버티기 힘들 정도였다. TV드라마의 내용은 북한은 사상적인 내용이고 남한은 생활 드라마다. 연변의 중국 채널로 나오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15분 정도 방송한다. 북한당국은 황색바람이 들어온다고 단속하지만 이제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보고 나와서 내용을 서로 이야기한다. 나중엔 중앙당 검열이 붙고 TV를 회수하고 했지만 그래도 다들 몰래 몰래 본다.¹⁹⁴

생활의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비디오를 촬영하고 가정의 대소사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도 유행이 됐다. 한국 드라마와 가요가 생활 깊숙이 침투해서 간부들도 자동차에 한국노래 테이프를 가지고 다닌다. 취재중에 만난 북한 여성들 중 한국 드라마를 아예 안 본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¹⁹⁵

남한 드라마나 영화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도 좋아하는다. 이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를 부르거나 서울 말씨를 따라하며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을 모방하고 흉내 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한다.¹⁹⁶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머리카락에

¹⁹³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p. 145.

¹⁹⁴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 1. 22.

¹⁹⁵ - 공용철, “KBS 스페셜-2007 현지르포, ‘시장, 북한을 바꾸다.’”

¹⁹⁶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61호 (2007); 『오늘의 북한소식』 90호 (2007).

대한 단속을 많이 하므로 남한풍이 많이 유행하지는 않으나 중학교 졸업반 정도 되면 자기들끼리 몰래 남한풍을 따라해 보기도 한다.¹⁹⁷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남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여성들은 머리 모양과 옷차림에 관심을 갖으며 이러한 현상은 돈 있고 권력 있는 간부층을 중심으로 나타난다.¹⁹⁸ 단적인 예로 여권을 받아서 중국을 오가는 북한여성들 가운데는 중국 도착 직후 맨 먼저 남한사람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러 머릿손질부터 하는 여성들도 있다.¹⁹⁹ 이들은 “미용병원”에서 눈가의 잔주름 제거, 눈매 교정수술 등을 하며 북한으로 돌아갈 때는 연결에서 남한제 부식을 다량 매입하여 가져가기도 한다.

새터민들에 따르면 경제난 이래 북한주민들이 남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는 특히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친척의 도움을 받기 위해, 또는 밀거래를 하기 위해 중국을 오간 북한주민들은 입소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남한 텔레비전 방송, 잡지 등을 통해서 남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한다. 또한 남한을 다녀온 조선족들을 통해서 방송이나 잡지들에서 본 남한문화가 ‘선전’을 위해 만들어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다. 북한주민들의 남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하고 주민들 사이에 남한 문화의 유입이 더 가속화된 계기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다. 공동선언 이래 경험 및 관광 교류 등 남북한간 인적교류의 규모가 확대되고 빈도가 높아감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남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 내지 호감도를 더해 가고 있다. 관련 연구결과에서도 남한 관광객들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언행, 옷차림, 생필품, 소비행태 등을 보면

¹⁹⁷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¹⁹⁸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90호 (2007).

¹⁹⁹ - 중국 체류 탈북여성 A00과의 인터뷰, 2007년 5월 12일.

서 풍요로운 생활양식을 동경하는 한편, 남북간 생활수준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⁰⁰

라. 부정적 대중인식과 대미의식 변화

1) 중국

북한주민들은 중국이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이며 북한주민들이 생활용품의 상당부분을 중국제품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²⁰¹

중국이 조선보다 조금 더 발달되었다. 조선사람들은 양말에서 머리끝까지 중국 것을 다 걸치고 살았다. 장마당에 나오는 것 모두 중국 것이다.²⁰²

또한 북한주민들에게 중국은 개방을 해서 경제발전을 이룬 모범사례로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7·1조치 발표 당시에 일부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북한도 중국처럼 개혁·개방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한다.²⁰³ 그러나 새터민들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다. 북한주민들은 중국의 대북지원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중국의 지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없지는 않으나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원 역시 “장군님의 위대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달리 고마움을 느끼지는 않는다.²⁰⁴ 북한주민들은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 진정

²⁰⁰ -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 pp. 311~312.

²⁰¹ - 평양 통일시장에는 “중국상품에 화학약을 넣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주의문이 붙어 있으나 여전히 중국 상품이 판을 치고 있으며 선봉시장은 거의 100%가 중국 상품이라고 한다. 중국 체류 탈북남성 K00과의 인터뷰, 2007년 4월 16일.

²⁰² - 중국체류 탈북여성 A00과의 인터뷰, 2007년 5월 12일.

²⁰³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한 속내는 감추고 경제적인 이득만을 취하려 할 뿐이며, 이와 같은 의도는 중국의 대북지원 규모라든가 북한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의 질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중국도 장사를 많이 하고 그 장사의 목적으로 인해서 북한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하지 실질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북한을, 진심으로 북한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어떤 북한 사람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나 우리 북한에서 중국의 지원을 바랬을 때 중국에서도 크게 이익 나게 뭐… 현재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까지 우리가 아니라고 봉쇄해놓으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못해요. 하나부터, 기름에서부터, 머리 기름이라든가 털 쓰고 사는 걸 일체 몽땅 중국 걸로 하니까 나쁜 걸 알면서도, … 중국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게… 국내산은 상품이 나오는 게 없고 순 중국 상품인데, …조선(북한)에 나가는 상품은 또 달라요. 중국 내에서 북한에 나가는 상품은 그 공장 자체가 다르거든요. …안 좋고, …런닝구 티셔츠 이런 단복이라던가, 이런 거도 정말 최하의 질, 제일 나쁜 거 그런 걸로 해서 만들어서 내 보내거든요. 제가 공업품 장사 하는데 어찌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사람이 인정하니까.²⁰⁵

2) 미국

북한의 백과사전에 미국은 “략탈과 살륙, 무력간섭과 전복음모, 침략과 전쟁으로 일관된 범죄의 력사”²⁰⁶를 가진 나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북한은 각종 간행물들을 통해 미국 사회의 부패와 혼란상, 비참한 생활상 등을 밝히는 한편 한국전쟁 당시 “미제”의 만행, 남한·일본과의 결탁, 최근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처사 등을 비난한다.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통해서서는 미국이 한국전쟁을 일으켰고 남북 분단과

²⁰⁴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²⁰⁵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²⁰⁶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9』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p. 602~603.

이산가족 발생의 원인도 “미제”에 있으므로 미국의 대북침략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하며 북한주민들의 대미 적개심을 고취시킨다. 북한은 특히 지난 2001년 출범한 미국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2002년 10월말 이래 북핵문제가 심화되면서 북·미 대결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주민들에 대해 반미사상교양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회생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 추진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해 “철천지 원수” 미국에 대한 투쟁을 역설하며 반미감정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미국은 매우 부정적으로 각인되어져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미국은 인류 최대의 적이며 끊임없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미제 승냥이”이고 남북 “분열의 원흉”이다. 북한주민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지속적인 식량난, 경제난이 “미제의 경제봉쇄와 반공화국 고립압살정책” 때문이며 북한이 사회주의를 지키기 어렵게 된 것도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건 다 우리는 미국 때문인 줄 알았죠. 미국 때문에 경제적 봉쇄를 당한다고. 국가에서도 나라에서도 그렇게 강연제강을 그렇게 하고, …그 모든 북한이 제재를 받는 게 미국의 지휘봉 하에, 이게 세계가 움직인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세기 때문에 미국이 쓰지 말라 조종을 미국이 한다고….²⁰⁷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안 되는 것도 미국이 남한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를 원하며 북한군대는 사상이 투철한 무력이므로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²⁰⁷-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전쟁을 해야 끝장이 난다. 너무나무 힘들게 사니까, 미국하고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교양을 받기를 우리 땅의 절반은 미국이 차지하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니까 미국하고 한 번은 전쟁을 해서 죽을 사람을 죽고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위원장 모시고 하는 무력 시위하는 걸 보면 북한군대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다고는 생각 안 한다. …미국의 힘이나 그런 거는 생각지 않는다. 예전에 북한에 있을 때 6.25전쟁을 소재로 만든 영화를 봤는데 북한에서 볼 때는 과장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 특히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사상면에서는 북한을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²⁰⁸

북한 사람들은 저걸 저렇게 핵을 다루거나 무슨 전쟁을, 전쟁을 하라 해요. 왜 그러나 하면 그렇게 지지리 못 살고 이렇기 때문에, 지지리 계속 눌러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²⁰⁹

북한주민들은 미국의 대북지원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북한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미국에서 영양제 가루가 왔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지원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도 미국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불쾌감을 느낀다. 미국이 지원을 하기는 해도 미사일이나 핵문제 등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주었다, 안주었다”를 반복하며 북한을 업신여긴다는 것이다.²¹⁰ 그러나 7·1조치 이후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미인식 변화는 남한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 등 청취, 중국을 오가며 친척·친지들로부터 미국에 대한 정보 구득 등이 주요 계기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북한은 영어교육의 비중을 크게 높였으며 일부 특권층과 부유층들 사이에는 고액영어과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들려오고 있

²⁰⁸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²⁰⁹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²¹⁰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I
II
III
IV
V
VI

다.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로부터는 평양 시내와 근교에서 영어 글씨가 새겨진 옷을 입은 북한 주민을 목격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흔치 않은 현상이기는 하나 이러한 소식들에서도 북한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는 북한은 최근 북핵문제가 점차 해결국면을 보임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반미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상정하여 주민들 사이에 대미인식 변화가 점차 확산되어 갈 수도 있음을 우려한 조치라고 하겠다.

마. 개인주의·물질주의 심화

1980년대 말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는 1990년대 이래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점차 확산, 심화되어 왔으며 제한적이거나 체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가속화되었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지속되고 부분적·제한적으로 체제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이 정치·사상을 우선으로 하는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인 것으로부터 돈·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인 것으로 바뀌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에는 자기에 대한 생각 안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고 다 할 것은 하나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했지. 근데 그 이후에 당장 자기 먹을 것이 없고 자기 살 것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 국가가 계속 좋았다면 아마 여기 올 사람도 한명도 없고 그렇죠.²¹¹

²¹¹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새터민들에 따르면 7·1조치는 북한주민들 사이에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인 가치의식이 보다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국가에 기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아 의존적 의식을 강화시켰다고 한다. 7·1조치 이후 배급제가 폐지되면서 당·국가에 충성만 하면 생활이 보장된다는 일반적 인식이 자신이 책임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는데,²¹²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국가 의존적 의식²¹³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자아 의존적 의식이 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제도)에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해서,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겪어보면서, …이제는 아니다, 내가 별어서 내가 살아야겠다, 한마디로 장사를 해야 되겠다. 뭇가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내 운명은,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²¹⁴

이 경제관리 체제가 바뀌면서 사람이 생활이 탁 바뀌면서 삶에 대한 자기 애착성은 더 강해졌다고 그러죠. 그 전에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다, 이렇게 하면 공사장이라던가 탄광이라던가 농장이라던가 ‘당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달려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틀려먹어…. 완전히 다 바뀌었지요. 길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탁 샀지만 안에 내적으로 들어가서는 자본화로 다 물들었어요.²¹⁵

새터민들은 7·1조치 이후 북한주민들 사이에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살겠다는 사상”인²¹⁶ “개인 리기주의”가 이전보다 더 팽배해

²¹² - 새터민 P005(함남 출신, 남)와의 인터뷰, 2004년 1월 9일.

²¹³ -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일반적 사회의식의 하나는 지배적인 국가의존적 사고방식이다. 서재진, 『7·1조치와 북한』, p. 106.

²¹⁴ - 새터민 P005와의 인터뷰, 2004년 1월 9일.

²¹⁵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²¹⁶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 258.

있으며 이에 따라 민심도 악화되는 추세라고 한다. “남을 속여서라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에 가서 어떻게든 잡히지만 않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²¹⁷ 이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향은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편안하게 잘 지내자, 잘 먹자, 이런 생각”만 하며,²¹⁸ 특히 젊은 남성들은 군대 복무를 기피하는 등 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도 한다.

네. 총각들이 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전보다 군대 나가겠다는 열의가 식은 것 같아요. 이 전에는 88년도, 80년대까지는 군대 못 나가면 아예 사람이 못되는 것처럼 자각하고 서로 군대나갈라고 그러고, 군대 나가서 출신 발판을 닦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군대를 회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²¹⁹

7·1조치 이후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개인주의가 더 심화되기는 하였으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이며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군대와 건설현장에 대한 물질·금전적 지원에도 나선다고 한다.

조치 이후에 개인주의가 더 많죠. 더 그건 당연히 많죠, …그러면서도 북한사람이 그 (집단주의)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심적으로는 지내 매멸차게 내거만 내거라고 딱 이렇게는 안 해요. …어느 한사람이 아프다거나 그렇게 크게 사고를 당했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집단에서 그래도 그나마 다 모여서, 그래도 그런 집에 썰이면 쌀 모아서 가져가고…. (인민반에서 소집해서) 그렇게 다 그걸 해서 하면, 사람들

²¹⁷ - 새터민 C010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23일.

²¹⁸ - 새터민 H009(기농공, 남)와의 인터뷰, 2004년 2월 21일.

²¹⁹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이 소리 없이 다해요. 소리 없이 다하고 다 도와주고, 그렇게 지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은 안 하죠. …(나만 먹으려고 하지 않고) 지원물자도 많이 보내고…. 군대들이라던가, 그러지 않으면 어느 큰 공사장이라던가, 그런 거 할 때에도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그걸 거기에서 몇 프로를 거기다 바치는 거….²²⁰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너무 한심하니까, 내가 계속 먹여줄 수는 없으니까 외면하는 것은 있어도, 뭐 그래도 술이랑 있으면 같이 마시고 생일날이면 오라, 가자 그러기도 하고, 서로 인간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없어요. …(이웃이 굶어죽을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한 끼는, 한 두 끼 정도는 줄 수 있죠. 또는 몇 키로는 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것 주고 그것 먹은 다음에도 계속 그러면 못주죠. 그런데 그거 먹고 산에 가서 풀이라도 뜯고 그러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또 견딘단 말이에요.²²¹

한 새터민에 따르면 7·1조치 이후 북한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식량이다. 시간만 있으면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으며 먹을 것이 마련되면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²²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에서의 ‘시간’의 중요성은 결과적으로 직장생활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근원으로 작용한다. 7·1조치 이전과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생활비 조달이 여의찮은 북한주민들은 직장 근무보다는 장사 등 개인 일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기에 바쁘며, 이로써 7·1조치 이후에도 조직 및 직장생활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살던 데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나를 제일 부러워했던 말이에요. 나

²²⁰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²²¹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²²²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는 우리 소장하고 비서하고 말해서 한 달 동안 회사 일 안 나가도 되니까. 거기에서는 이 사람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문건만 해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그것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살기위한...²²³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시간과 식량의 중요성은 곧 돈의 중요성 내지 필요성을 말한다. 시간을 내어야 돈을 모을 수 있고 돈을 모아야 식량을 구해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식량난 이래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돈이며 7·1조치 이후로는 그 정도가 보다 더 높아졌다.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재화가 국유, 또는 공유로 되어 있고 모든 생산과 분배는 국가주도의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난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주민들의 사유재산 및 돈의 가치에 대한 의식은 희박한 편이었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사유재산 및 돈의 가치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사유재산과 돈 소유의 중요성,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는 텃밭이 허용되고 개인 간 매매를 통한 집과 가전제품 등의 구입 및 소유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며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으로 구성되는 가격의 이중구조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장마당에는 식량을 비롯해 다양한 생필품들이 구비되어 있으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로써 돈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돈에 대한 인식 내지 의식은 7·1조치 이후 보다 더 강화되는 추세이다. 7·1조치에 따라 사실상 배급제가 폐지되고 임금노동제가 도입됨으로써 매달 받는 노동에 대한 금전적 대가가 명실상부하게 ‘생활비’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7·1조치

²²³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이후의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7·1조치 이후 주민들 사이에 돈의 중요성 내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해감에 따라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돈의 위력도 더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가진 학부모는 학교 선생님에게 생활비를 주기도 하는데 일부 선생님들은 돈을 준 집의 아이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²²⁴ 농촌동원, 사회노동을 못 가도 돈으로 쉽게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대학졸업장도 구할 수 있으며,²²⁵ 불가능하다는 직업(직장) 이동, 직장이탈, 무단결근도 어렵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주민들 사이에 “뉴턴의 제4법칙으로서 ‘고이면 굴러 간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²²⁶ 한 새터민에 따르면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돈만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탈북이 가능해도 중국으로 가려하지 않는다고도 한다.²²⁷

북한주민들은 자기 능력으로 돈을 모은 신흥부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편이나 일반주민들의 뇌물을 받아서 부자가 된 간부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몸을 놀려서 버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간부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미워하죠. 이 사람들은 한번, 나가서 호미질 안하고 삼 한번 안 들어도 잘사니까. …평생노동자인데, (간부들한테) 해를 입히기는…, 그렇게 못하죠.²²⁸

²²⁴ - 새터민 C010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23일.

²²⁵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²²⁶ - 새터민 K035(당간부, 여)와의 인터뷰, 2004년 9월 17일.

²²⁷ - 새터민 L019(전문사회단체일꾼, 남)와의 인터뷰, 2004년 9월 20일.

²²⁸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I
II
III
IV
V
VI

7·1조치 이후 돈의 가치가 더 높아감에 따라 간부 못지않게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돈주’들이다. 일종의 물주 노릇을 하는 사람들인 돈주는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돈주라는 말은 1995년부터 나왔으며, 이들은 법 기관을 끼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²²⁹ “예전에는 백두산 줄기가 잘 살았는데 1995년부터는 돈 많은 사람이 잘 살고 있다”라는 말도 1995년부터 돈주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고 있다.²³⁰ 돈주들은 거의 90%이상이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이며 나머지는 되거리장사를 크게 하는 장사꾼들이거나 해외에 친척이 있어 지원을 받는 연고자들이다.²³¹ 또한 북송교포, 화교들 가운데 돈주가 많으며 돈주는 주로 고리대금융, 사채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동네엔 밀수하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저축을 하지 않는다. 북한에는 은행에 적금을 들거나 은행에 입금을 하면 돈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해서 이자를 받아먹는다. 강타기(밀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현금을 가지고 있지 저축하고 이런 건 없다.²³²

북한의 청소년들도 대학진학을 원하며 대학졸업자를 선망하고, 대학 정규과정을 마쳐야 가질 수 있는 정신노동의 직업을 선호한다. 부모들 역시 자녀가 대학에 가서 예비간부로 잘 양성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권력층·부유층 사이에 권력과 돈의 힘으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고, 대학졸업장을 취득하는 부정사례가 적지 않은 데에서

²²⁹ - 중국체류 탈북여성 A00과의 인터뷰, 2007년 5월 12일.

²³⁰ - 새터민 K041과의 인터뷰, 2004년 4월 2일.

²³¹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p. 55.

²³²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도 잘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새터민들에 따르면 경제난 이후로는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가질 수가 없으며 선호하는 직업, 직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이제는 “장사만 잘 하면 된다”는 의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실례로 한 새터민의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국토간부학교를 나와서 국토설계사가 되었으나 먹고 살기 위해 집에서 사탕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²³³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생업으로서의 직업의 의의가 약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특정한 직업들을 선호한다. 북한주민들은 경제난 이래 선호해온 직업을 7·1조치 이후에도 선호한다. 배급이 중단된 7·1조치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배급을 받으며 가장 잘 사는 국가보위부원과 인민보안원, 법 기관을 끼고 돈을 많이 모으는 무역국 일꾼,²³⁴ 공장에 필요한 물자나 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출퇴근 없이 개인장사를 하는 자재 인수원²³⁵ 등이 그것이며, 시설을 갖추어 기관 명의로 올려놓고 일부 수입을 챙기는 식당, 목욕탕 등의 자영업과 대학에 가기 쉽고 취직도 잘되는 예술 부문에의 종사도 선호한다. 외화벌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7·1조치 이후에도 가장 돈 잘버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모두가 선호한다.

무역기관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타는 사람들... 무역 다니잖아요, 북한에는 외화벌이라는 기업소가 있어요. 외화벌이사업소... 그럼 거기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낙지라던가, 고사리라던가 해삼, 더덕, 이 품종이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평민들이 그걸 다 수집해가지고 가공하고 자기 산에 가서 캐고 이렇게 해서 그걸 외화벌이에게 다 팔거든요. 그럼 외화벌이에서 그걸 사요. 사면 그걸 기

²³³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²³⁴ - 새터민 C010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23일.

²³⁵ - 새터민 H006(기능공, 남)과의 인터뷰, 2003년 7월 4일.

관에서 사가지고, 그것도 나라장사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가서 팔아가지고 쌀 사가지고 또 외화벌이에다가 그 쌀을 여요. 그러면 그 외화벌이에서 그 쌀 또 팔고... 그러니까 개인이 장사를 한다고 하지만 국가도 그런 큰 되거리 장사, 되거리 식으로 그런 장사 하는 사람들이 돈 잘 벌고 먹을 게 많고 어쨌든 그런 능력이, 범위가 크게 하니까, 당연히 거기 사람들을 최고로 좋아하고, 여자나 남자나 그걸 최고라 해요.²³⁶

북한주민들의 직업선호 경향에 있어 특기할만한 것은 의사와 교원과 관련해서이다. 북한에서도 의사와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다. 의사나 교원은 지식 및 교양을 키워나가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에 있어 절대 필수적인 전문 분야이며 무엇보다도 “막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주민들은 의사나 교원 직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의사나 교원은 대체적으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부수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기도 어려운 분야이고 신분에 따른 당·국가적 통제도 심하기 때문에 자아실현을 위한 전문직으로서는 선행의 대상이나 생업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보다 확산되어 갔다. 이와 관련해 전직의사 새터민 남성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북한은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참 힘들어요. 졸업을 해서 취업은 뭐 그냥 쉽게 돼요. 어차피 국가에서 다 배정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의사들 생활이라는 게 정말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가지고 오히려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직장인들은 자기네 회사에서 생기는 생산하는 물품을 부정축재 한다던지, 뭐 밖으로 빼돌려서 팔아먹기라도 하던지, 아니면 시간이라도 남아가지고 직장에 안 돌아가면 그냥 나가서 장사라도 해요. 근데 의사들이라는 것은, ...좀 엘리트 계층에 속

²³⁶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하다보니깐 그냥 국가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통제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봤자 약도 없어요. 의사들은 환자들 오면 치료를 해주는데, 북한은 무상치료제잖아요. 그리고 의사들 월급은 국가에서 다 내줘요. 그런데 그 월급이라는 게 보잘것없고, …죽도 제대로 못 먹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물론 의대 들어갈 때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았고, 선망하는 직업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보면 선배의사들도 의사 때려치우고 일반 그냥 직장으로, 장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먹고 살 걱정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거면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직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²³⁷

북한에는 장사 자체가 자본주의의 온상이라고 해서 반대했어요. 그러나 식량사정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도 교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 이미지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내용하고 본인들 생활하고 틀리니까 당에서 교원들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더 힘들지요.²³⁸

그러나 새터민들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일부 의사와 교원들의 생활 형편은 오히려 나아졌으며 이에 따라 7·1조치 이후로는 생업으로서의 의사나 교원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가고 있다고 한다. 새터민들에 따르면 일부 의사와 교원들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나름대로의 방법과 수완을 동원하여 가족의 생계유지는 물론 부의 축적을 꾀한다. 의사들은 허위진단서 발급 및 개인의료영업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하거나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치부를 하며 특히 평양 등 대도시의 의사들은 생활수준이 높다.

지방의 의사들하고 평양시에 있는 의사들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시하고 지방하고는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북한에

²³⁷ - 새터민 C00(의사/수산물종합상점, 남)과의 인터뷰, 2006년 6월 3일.

²³⁸ -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p. 116에서 재인용.



서는 모든 것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살아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평양 시내의 의사들은 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많이 지내고, 또 진료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의 몫이 크고, 지방에 사는 의사들은 뭐 그런 사람들 무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를 하고 이렇게 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료를 하면은 당국자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슬쩍 해주는 인사가 뭐냐면 쌀 같은 거 2,000Kg을 슬쩍 주는 거예요.²³⁹

교원들은 불법과외와 대학 부정입학 등의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유한 생활을 하기도 한다.

그때는, 미공급 시초에는 대학 선생님들, 교수님들 정말 제일 바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대요.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 배운 대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배운 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신발이라도 하나 더, 내가 신는 거 말고 다른 여벌이 하나 더 있다, 그럼 그걸 장마당에 가서 팔아서 다른 식량을 사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유통할 줄을 몰랐대요. …지금은 오히려 조금 단계가 더 높아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누가 대학에 붙냐, 안붙냐, 비록 점수는 낮지만은 너는 나한테 돈 얼마를 고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대학에 붙여주겠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대학에 붙게 되어 있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자기 집에 능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대학에 못가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도 그런 시점으로 많이 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의사라던가 교수,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이 그 전에 하곤 틀려요. 오히려 더 좋아졌죠.²⁴⁰

한편 선호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경제난 이래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수입원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은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업’ 활동이다. 특히 여성들은 가족부양을 위해 장사 다음으로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업 활동에 힘을 쏟았다.²⁴¹ 그러나 경제난이 지속되

²³⁹ - 새터민 P00(의사, 남북)과의 인터뷰, 2006년 5월 20일.

²⁴⁰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²⁴¹ -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고 7·1조치 이후에도 공장·기업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생활 형편이 더 어려워짐에 따라 남자들도 가내편의봉사업²⁴²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리 해도, 토대나 가정환경으로 봐도 간부 못 될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좋아하더라구요. 편의, 편의협동, 편의봉사 같은 데, 돈만 내는 것, 그것은 남자들도 하니까요. 신발 수리도 하고, 자전거도 수리하고, 차도 수리하고, 이런 사람들, 뭘 해도 자기 계획된 돈만 내고, 자기는 계속 집이면 집에, 길바닥이면 길바닥에 어디고 앉아서 수리해서 돈 버는 이런 직업 좋아하고...²⁴³

위에서와 같이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이래 북한주민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직장) 내지 현금이나 물품 등의 부수입이 있는 직업(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당면한 생계유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부를 축적하기를 원하며 이와 같은 경향은 7·1조치 이후 보다 더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와 같은 경향은 군 입대와 입당 실패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식량난이 심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다음으로 군 입대를 지망했으며 이는 제대 후, 대학 진학이나 입당에 있어 일반인보다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군인들 사이에서도 영양실조, 또는 아사 사례가 드물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들 사이에 군 입대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

pp. 82~84 참조.

²⁴² - 가내편의봉사업은 “가정부인들과 년로자들, 사회보장자들이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면서 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조직운영하는 개인부업경리의 한 형태”를 말하며 “폐기폐설물, 유희자재, 농토산물로 세소일용품과 부식물들을 만들어 공급하는 가공편의업, 일용필수품을 수리해 주는 수리수선편의사업, 미용, 빨래를 해주는 것과 같은 위생편의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진촬영도 가내편의봉사업에 해당한다.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p. 62.

²⁴³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되었으며 부모들도 자녀의 입대를 바라지 않는다.²⁴⁴ 또한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당원이 되기보다는 식량을 구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돈을 많이 모아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식량난,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들은 당원 신분에 대해 더 이상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이러한 의식은 7·1조치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당원이 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도 한다. 식량난 이후로는 “인민을 위해서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실제 행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²⁴⁵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남과 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입당하고 좋은 직위 있어서 이걸 제일 좋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당에 입당해야 되겠다는 그 정신이 그전보다 많이 부족하죠. 그게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 자체가 자기 자식을 군대에 내보내다거나 어떤 공사장에 보낸다거나 이런 걸 많이 안하려고 하죠.²⁴⁶

그러나 종래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노동당원이 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신임을 보장받는 것이며 신분상승을 뜻하는 것이므로 당원이 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도 영예롭고 감격적인 큰 경사였다. 따라서 당원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으며 사는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 당원에 대한 인식 내지 의식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당원으로 살았던 한 새터민은 북한주민들의 당원에 대한 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자기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과 “희망”이 없는 사람

²⁴⁴ - 군대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북한당국은 2003년 3월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복무기간을 남자는 13년에서 10년, 여자는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전민군사복무제를 채택하였다. 서재진,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p. 111.

²⁴⁵ - 새터민 C010과의 인터뷰, 2004년 6월 23일.

²⁴⁶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들의 의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출신성분과 사회적 배경이 좋아 당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당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좋지 않은 출신성분이라는 기본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당원 신분을 선망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발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당원이 되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기어코 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을 주나, 쌀을 주나 이런 생각이 차있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포기하는 인생은 없으니까 누구나 해보려고 하니깐 다 그런 것을 추구는 하죠.²⁴⁷

광산노동자였던 한 중국 체류 탈북여성도 당증은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북한에서는 입당을 목표로 하여 살았다고 하며, “자식이 학교에 가면 부모가 당원인가 쓴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입당하고, 또 북한에서는 입당하는 것을 가장 큰 공지로 생각한다”²⁴⁸고 말한다.

바. 개방에 대한 기대

2001년 초 김정일 위원장은 이른바 ‘신사고’ 발언을 통해 “이제는 2000년대에 들어선 것만큼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힘으로써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리고 2002년 북한은 7·1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관련국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으며, 당시 일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²⁴⁷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²⁴⁸ - 중국체류 탈북여성 P00과의 인터뷰, 2007년 5월 20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도 북한 당국은 “조선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절대 개방은 하지 않는다”고 하며 “모든 것은 우리 국정에 맞게 하되 절대로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나 적대국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²⁴⁹ 새터민들에 따르면 7·1조치 이후에도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음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개방 욕구가 점차 커가고 있으며 개방이 되면 중국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한다. 그러나 새터민들의 일부는 7·1조치 이후 보다 확산되고 있는 개방에 대한 욕구 및 기대는 “조금 책이나 보는 사람들, 개방하여 잘 살고 있는 중국을 아는 사람들, 일부 인텔리들” 사이에서나 있을 뿐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일반 주민들은 개방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며 관심도 없다고 한다.²⁵⁰ 또한 당 간부들은 개방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북한에서 당원이었으며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했던 한 새터민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이 개방을 원하는 이유는 “외부의 잘 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며 개방이 되면 중국과의 왕래가 자유로울 것이라고 기대할 뿐 미국, 일본, 남한, 러시아 등을 오가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다. 또한 그는 ‘라진·선봉경제 무역지대’, ‘개성공단’, ‘금강산경제특구’ 등을 개방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특히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도 남한사람들의 방문에 의한 폐쇄적인 관광 사업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게 뭐 개방이예요? 그것은 개방이 아니고 하나의 방문단이나 같지요. 나진선봉은 망해서 없는 거고, 금강산이나 이런데도, 그런 데에는 가지도 못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의 금강산 관광은) 그저 견학, 구경 왔구나 생각했어요. 개방이라는 자체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²⁴⁹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76호 (2007).

²⁵⁰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만나고 말하고 이런 것이 개방이지, 둘이 만나서도 말 못하고 이런 것은 개방이 아니지요. 개방 했다고 해도 개방이 아니죠. (금강산 관광은) 그 계 문을 열어 놨지만 아마 평민들하고 말 못할 겁니다. 그건 개방이 아니죠. 내가 나가고 너네 와서 구경 한번 하고 가라, 그런 것은 개방이 아니죠. 얘기하고 그런 것이 개방이지.²⁵¹

북한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개방’은 “터놓는 것. 자유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던 것을 열어놓는 것”²⁵²이다. 그러나 새터민들이 말하는 개방의 뜻은 조금씩 다르다. 어떤 새터민은 외부인들이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만이 아니라 북한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말하는 것까지를 개방이라고 하며, 개방은 곧 자본주의라고 말한다.²⁵³ 그런가 하면 개방을 장사, 직업선택의 자유 등으로 인식하는 새터민도 있다.²⁵⁴ 또한 일부 새터민들은 7·1조치를 개방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⁵⁵ “(북한)내부적으로는 자체의 장마당을 통해서 (상품이) 더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었는데, 저희들끼리 장사하니 안 되겠다. 그래서 취한 조치가 7·1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7·1조치가 개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자본주의를 하지 않는다. 김정일 위원장은 붉은기를 들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사회주의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개방을 한다는 것은 중국과의 장사 거래를 위해서 문을 조금 열고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온 말이지, 자본주의처럼 개방을 한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²⁵⁶

²⁵¹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²⁵²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 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461.

²⁵³ - 새터민 L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1일.

²⁵⁴ - 새터민 H006과의 인터뷰, 2003년 7월 4일.

²⁵⁵ - 새터민 K039(대학교수, 남)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6일.

²⁵⁶ - 새터민 S012와의 인터뷰, 2005년 1월 22일.

위와 같은 새터민들의 개방에 대한 인식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주민들은 개방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용어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주민들의 개혁·개방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와 개혁·개방 용어의 혼용 실태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개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개방이라는 그 자체를 농민들한테는 우선 첫째, 땅을, 우리는 협동화식으로 해서 땅을 다 집단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개혁을 한다면, 개방을 한다면, 땅도 일 개인당 평수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몇 프로를 농사지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전에는 개혁 전에는 집단적으로 협동화식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경제 관리 조치가 개편되면서 '너네 가족이면 가족이 나와서 그 땅을 한 정보면 한 정보 그렇게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너네 800kg만 내라, 그러면 그 800kg을 가지고 나라에다 바치고 그 나머지는 수확이, 거기에서 이득이 더 떨어지는 거는 너가 먹어라' 이런 식으로, 새 경제관리 체제가 다시 개편 되면서 그런 방법도 다 나왔거든요. 개방을, 개방의 뜻이란 서로 자유 왕래하고 통제되지 않은 그런 그 조직화되지 않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한다던가, 아니면, 또 공장기업소라던가 회사 회사 간에도 그 어디에든 구속이 됨이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개방이라고...²⁵⁷

²⁵⁷ - 새터민 H00과의 인터뷰, 2007년 9월 13일.

V

교육정책과 교육현실의 변화



1. 공교육 약화와 교육의 사적 영역 확대

가. 학교교육의 파행적 운영과 복구

1990년대 북한 사회를 휩쓴 경제난은 교육 부문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자연재해와 수년에 걸쳐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의 영향으로 학교교육의 물리적 구성요소인 교육 시설과 기자재가 파괴되었고, 인적 구성요소인 교사와 학생 중의 상당수가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수업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교권 하락 등의 문제도 파생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최악에 달했던 고난의 행군기를 지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당국 차원에서 공교육 정상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 십년간 지속된 교육적 공백과 퇴보를 단기간에 회복하기에는 경제난이 남긴 상흔이 너무 깊다.

경제난이 가장 심화되었던 시기의 북한의 학교 실태는 일부 문헌 자료²⁵⁸에도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거니와, 새터민의 증언을 통해 이 시기 북한 교육의 변화 양상을 더욱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경제난 이후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가장 큰 지장을 초래했던 것은 학생 출석률 감소이다. 출석률 감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90년대 전반부터 시작되어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장 저조했다. 학생들은 먹지 못하여 학교에서 공부할 힘이 없어 학교에 못 나오거나, 부모의 장사나 채취활동을 돕느라 결석을 했다. 경제난 이후 학생 출석률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새터민들의 구술에 의하면 경제난이 가장 심각했던 90년대 중반 경에는 초·중등학

²⁵⁸ 예를 들어 2001년 5월 3일자, 『교원신문』에서는 평양구서중학교에서 학생 출석률을 높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몇해전 봄, 일부 학급들에서 결석생이 생기기 시작하여 원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식량사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결석의 원인”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교의 출석률이 70%를 넘지 못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30%에도 미치지 못한 곳도 있었다고 한다. 한 새터민(H012)²⁵⁹은 90년대말 함경북도 산간 지역에서는 출석률이 50%도 되지 않았고, 장기 결석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졸업증을 주고 공장에 배치를 했다고 말한다. 농촌의 리나 산간 마을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를 거의 안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안북도 노동자구 지역의 학교 교사였던 다른 새터민(K041)²⁶⁰은 93년부터 학급의 1/3 정도가 결석하는 대량 결석사태가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최근에도 출석률이 경제난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구된 것은 아니다. 2004년 UNICEF가 북한의 학교 실태에 대해 조사 관찰한 바에 의하면 장기결석이 증가하고 있고 계절에 따라 60~80%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²⁶¹

대학의 경우에도 출석률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헤산시 한 대학에서는 95년부터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도 사이에 정원 20여명인 학과에 실제 다니는 학생은 네다섯 명 정도에 불과했다가 2004년에 정원의 80% 정도로 복구되었다고 한다.(D001)²⁶² 중앙대학²⁶³인 함흥의 한 대학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기숙사생에게 도토리밥, 통강냉이, 대북지원 물품으로 받은 라면 국수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었다.(K040)²⁶⁴ 그나마 중앙대학은 좀 나은 형편

²⁵⁹ - 새터민 H012(2001년까지 평양대학 교수)와의 인터뷰, 2005년 11월.

²⁶⁰ - 새터민 K041(1969년부터 2003년까지 평안북도 소학교 교사)과의 인터뷰, 2007년 1월.

²⁶¹ - UNICEF(2006).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p. 57.

²⁶² - 새터민 D001(2004년까지 양강도 대학 교수)과의 인터뷰, 2007년 8월.

²⁶³ -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대학의 3개 종합대학을 비롯하여 각 부문별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10여개 정도의 대학을 중앙대학 또는 중심대학이라 부른다.

²⁶⁴ - 새터민 K040(1995년부터 2000년까지 함경남도 대학교 재학)과의 인터뷰, 2007년

이었으며, 기숙사생의 식량을 확보할 수 없어 기숙사생들이 벼뿌리를 캐먹기도 하고, 96년, 97년경에는 아예 휴교를 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학교들도 많았다.(집담회,²⁶⁵ K040) 대학생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 강의를 빠지는 경우 교수에게 약간의 ‘뇌물’을 바치고 출석을 인정받기도 하였다.(K040) 2000년대 초반까지도 대학에서 밀수와 밀매 등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한 해에 몇 명씩 발생하였다고 한다.(D001)

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이 중지되자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은 교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경제난 시기 공장 과 기업소는 가동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장을 떠나 장사 등의 생계 유지를 위한 방편을 모색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배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쳐야만 했던 교사들은 국가의 배급을 대신할 생계 수단을 찾기 어려웠다. 배급중단이 장기화되어 생계를 위한 교사들의 학교 이탈을 막기 어려워지자,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을 몇 개조로 나누어 한두 주일씩 식량을 구하라고 휴가를 보내고 남은 교사들이 수업을 맡는 미봉책을 사용하여 수업을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나갔다. 교사들에게 번갈아가면서 “닷새씩 시간을 주고” 학교에 남은 교사들이 “시간을 받은” 교사들을 대신해서 “만가동 수업을 하는” 방식을 통해 학교수업과 생계를 병행하도록 하였다.(K041) 자연히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었고 수업의 질도 보장하기 어려워졌다. 『고등교육』에서는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수가 늘어나고 지어 일부 교원들 속에서는 교단을 뜨려는 편향까지 나타났었다”고 당시의 실상을 기술하고 있다.²⁶⁶ 그

9월.

²⁶⁵ - 북한교육 관련 새터민 집담회, 2007년 7월 집담회 실시.

²⁶⁶ - 조현, “교육강령집행에서 얻은 경험,” 『고등교육』, 제4호 (2006), p. 31.

I

II

III

IV

V

VI

글에서는 “교원들이 생활적으로 안착되어 일할수 있게 사업을 보다 혁명적으로 벌려나가는”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업지를 개간하고 거기에 강냉이와 감자, 콩과 당콩을 심어 식량도 보충해주고 무와 고추와 같은 남새를 심어 부식물로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새터민의 증언에 의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청년동맹이 중심이 되어 교사들의 식량을 마련하거나 운동장을 갈아서 밭을 만들기도 하였다.(J011)²⁶⁷

공장의 생산품이나 기계 부속을 빼돌려 팔기도 했던 생산노동 분야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교사들은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내다 팔 수 있는 어떠한 물건도 확보할 수 없었다. 배급이 중지된 상태에서 교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학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었다. 여유있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식량난이 고조되면서부터는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에게 “노골적으로 옥수수 한 배낭, 장화와 같은 생필품 등을 가져오라고 요구”(K040)하거나, 대학에서 고급 담배나 술 등을 받고 학생들의 낙제를 면하게 해주는 ‘암거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시기 평안북도의 한 소학교²⁶⁸에서 교사생활을 했던 한 새터민(K041)은 자신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때에 우리 학교 교원들이 어케 하는가? 때 끼 딱 학부형네 집에, 자기네 끓일게 없으면 간단 말입니다. 다는 아니야요. 지금은 어찌나 교권이 없는지. 이렇게 하니까니 우리 부교장 선생님은 그냥 교원

²⁶⁷ - 새터민 J011(1991년부터 1996년까지 함경남도 중학교 재학)과의 인터뷰, 2003년 11월.

²⁶⁸ - 북한은 2003년에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개칭하였다. 이 글에서는 연도에 상관없이 소학교, 중학교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모임에서 매년 “야, 너희 절대로 이제 학부형 집에 가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고저 가는 선생은 고정됐지만요. 생활력이 없는 선생들은 또 학부형 신세를 어떻게 하나 질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카게 되면 인민학교 아이들한테 그렇습니다. 오늘 누구 생일날입니다, 영희 학생은 집에 텔레비, 녹음기, 녹화기 다 있으면서도 날마다 잘 살겠는데, 다른 선생님도 몰라요? 이런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어머니, 우리 담임선생님이 내 생일날을 알고 있소” 그래가지고 “좀 갖다주자” 어떤 선생들은 아이들 생일을 몽땅 다 외웠더라고. 고저 암만 못 먹어도 선생님 똬은 준단 말입니다. “학생들 생일날에 안가면 학부형이 부르지 않는가?” 물어보더라고 저보고 나는 인민학교 교원 20년 나마 해도 나는 간 적 없다고 그러니까 “야 선생이 한심하구나, 그거 왜 못 가는가?” 자기는 우리 반 아이들 생일날 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초청한다는 거지. 자기가 등치고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잖습니까? 아이들 생일날마다 가서 대접받고 오는 거드만요. 그런 선생이 몇 명 있더라구요. 뒤에서 욕하지, 아무케도.

이러한 상황은 전체적으로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극심한 경제난은 어느 정도 복구되어 학생과 교사의 출석률, 출근율은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배급체제는 경제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해서, 교사들의 경우 양호한 지역이 한 달에 보름치 정도의 배급을 받는 실정이라고 한다.(K041)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교사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는 기풍을 확립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재정적 투자는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교원 출신의 한 새터민(K041)은 현재 교사들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원들은 무조건 주자” 이런 구호는 있어요. 교원은 우선 봉대하고, 아무데 가도 교원은 우선 봉대해야 해요. 교원에 대한 긍지감은 가져요. 근데, 뭐 주는 게 있습니까? 뭐 배급 주는데 가고 줄을 섰는데도 가면 교원 우선 봉대, 교원 매대, 교원에 대한 우대는 해줘요. 그러나 뭐 내주는 거 없으니까.

I
II
III
IV
V
VI

경제난은 전체 학령인구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1993년 인구 천명당 20.0명이던 출생률은 2002년에 16.22명으로 감소하였다.²⁶⁹ 인구성장률도 1995년 1.5%에서 2000년에는 1.0%, 2002년에는 0.7%로 감소하고 있다.²⁷⁰ 경제난 이후 출생인구의 감소로 인해 2000년대 들어 취학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 1996~1998년생들이 취학한 2000년대 중반에 소학교 학급 수가 반 정도로 감소해서 교원도 그만둔다는 사람들을 많이 내보냈다고 한다.(K041) 고난의 행군기에 비해 경제적 사정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북한의 출생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분간 학령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률 감소는 부분적으로 공교육의 약화에도 기인한다.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별도의 큰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교과서와 학용품, 각종 명목의 잡부금 등 학교 교육에 드는 사부담 공교육비가 큰 것이 출산 기피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²⁷¹

나. 국가지원 감소와 사부담 공교육비 증가

경제난으로 인해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고난의 행군기를 경유한 후에 공교육의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²⁶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연구소, 『2002년 재생산건강조사』, p. 1.

²⁷⁰ -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p. 12.

²⁷¹ -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새터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학부형들이 그래 아이들을 낳지 않을라 그러니까. 하나 밖에 안 낳라 그래요. 세 명 나오면 한 달에 육백 원씩 주는데. 말하자면, 그 돈이야 신발 한 켤레 값도 못되는데, 육백 원이고 강냉이 두 키로 밖에 못 사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 북한은 텔레비를 쥔 눈앞에 분단 말입니다. 텔레비를 쥔 하늘같이 크게 보는데, 야, 야, 난 텔레비 하나 쥐도, 거 몇 개 쥐도 아이 안 낳겠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기르기가 힘들어서”(K041)

이것이 곧바로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교과서, 교복, 학용품 등 공부를 하기 위해 학생 개인이 소모하는 비용으로부터 학교의 책걸상과 시설의 개보수, 교육 기자재 확보 등과 같이 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에 이르기까지,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였던 공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금은 학부모가 떠안게 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UNICEF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전체 예산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계속해서 10~12% 정도에 머물러왔다. 이는 전체 예산대비 비율의 면에서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액의 감소를 고려하면 훼손된 공교육 체계를 복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다.²⁷²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어려움은 교과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80년대까지는 모든 초·중등학생들에게 교과서가 무상 공급된 것은 물론이고, 학습장도 매년 삼십권 이상 국정가격으로 공급되었고, 기타 학용품과 교복도 공급되었다. 90년대 이후에는 교과서가 한 반에 대여섯권 밖에는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C013)²⁷³ 이러한 사정은 지금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보관소를 만들어 학년말에 교과서를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다음 학기 초에 재활용하고 있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학생들은 시장에서 교과서와 학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교과서를 구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다른 학생의 교과서를 빌려서 손으로 옮겨 적는 방법을 동원한다. 지금 북한의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가장 그림다”고 교사 출신 새터민은

²⁷² -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p. 55.

²⁷³ - 새터민 C013(1984년부터 1996년까지 함경북도 소학교 교사)과의 인터뷰, 2005년 5월.

I
II
III
IV
V
VI

한탄하고 있다.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 사정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여타 기자재나 시설의 열악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경제난 이후에는 책상이나 의자가 파손되면 학생 스스로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을 수리하거나 구입해오도록 하고 있다.(C013) 수업이나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도 교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교사는 학부모에게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 이외의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대학에서도 실험실습비용, 설비기자재 구입비, 도서 구입비 등이 대폭 감소되어 수업시간에 사용할 과도용 종이도 없어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종이를 구해오라고 부탁한다.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가만히 학교에 앉아가지고 현재 갖춰진 설비나 수단들 가지고 교육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K039)²⁷⁴

공교육에 투자하는 국가적 지원을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는 어려운 여건에서 북한 당국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교육열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무너진 공교육 인프라를 복구하려 하고 있다. 2003년 6월 교육성은 ‘중앙학교꾸리기지휘부’와 각 도·시·군에 ‘학교꾸리기 지휘부’를 조직하고 각급 학교별로 ‘본보기학교’를 지정하였다. 이전에도 낡고 부족한 교구비품과 생필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3월과 10월을 ‘학교지원 월간’으로 설정하여 인근 기관, 단체, 지역 주민에게 새학년도 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해왔지만 경제난 속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에 학교 지원사업을 보다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학교꾸리기 지휘부’를 조직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교사와 실험실습실 개축 및 보수, 교구비품 수리, 건물 도색, 운동장정리, 도로 포장, 화단 조성

²⁷⁴ - 새터민K039(2003년까지 함경남도 대학교수)와의 인터뷰, 2007년 8월.

등 다양한 학교시설 개보수와 교육여건 개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6년 10월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모범교육군 칭호쟁취운동’을 발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돈이 있는 자는 돈으로,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학교를 건립하고 학교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식은 북한에서 해방 이후 지속적인 교육기회의 확대를 조직해냈던 기본 방식이다. 경제난이 가져온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방식이 주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 시설의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드는 비용은 ‘힘 있는 학부모’가 부담하거나 학생들에게 ‘공동분배’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공적 교육 투자를 대체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군다나 자식의 교육을 위해 개인적인 투자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이 향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교육열을 국가가 조직적으로 수렴하여 공교육의 확대를 집단적으로 지원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이러한 방식은 북한 사회에 ‘돈’과 ‘개인’에 대한 사고가 확산된 지금은 그 시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은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의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교에서 내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 차라리 공납금 내는 것이 더욱 낫겠다. 매일 한개씩 뭘 내라. 뭘 오늘은 파지를 내라, 내일은 철을 내라, 그 다음날은 동을 내라, 그리고 무슨 토끼 가죽을 내라. 근데 그것을 그날 딱딱 내라. 내일 또 가져오라. 그리고 또 다음날 뭘 가져오라. 어느 하루도 뭘 내지 않은 날이 없어요. 80년대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90년대부터 들어와서는 아예 없으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구요.(H012)

I

II

III

IV

V

VI

(주민들이) 애들 월사금 내고 다른 건 안 내라면 좋겠다, 이런단 말입니다. 뭐 돈도 내라 그러지, 뭐 학교 헛가루 칠할라면, 무슨 도색할려면, 락카 돈 내야 되지. 또 토끼가죽도 뭐 일 년에 일고여덟 마리씩 내야 되지. 그 내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니. 빈 파비닐 내라, 파동 내라, 파우리 내라, 파병 내라, 고저 수십 가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원들은 사업 일지에 주룩 순서대로 누가 내는가 다 적어 놓습니다. 적어놓았다가 학부 형회 때 다 발표합니다. 칠판에다가 경제과업 수행한 거 잘한 거 있으면 써놓고, 공부 잘한 거 적어놓고, 그거 총화 짓는다 말입니다. 성적 올리는 것도 골이 아파 죽겠는데, 이 내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도 못 내면 계속 비판 받는다 말입니다, 교원 모임회 때.(K041)

이러한 실정은 대학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은 “일단 대학에 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주머니 꽤나 있어야 온다”고 한다.(집담회) ‘세 부담’이라고 부르는 잡부금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²⁷⁵ ‘기본 세 부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국가적 건설사업, 군대지원사업, 대학구내 환경개선사업, 농촌지원, 생일잔치, 시험볼 때 교사에게 주는 사례금 등이 있다. 경제난 이전에도 이중 일부 항목이 지출되었지만 경제난 이후에는 더욱 액수가 커지고, 벽의 회칠, 창문틀, 기숙사 온돌 시설 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용으로 대학에서 모금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2003년경에 대학간 학교꾸리기 경쟁이 시작되면서 “우리 대학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자”는 구호 아래 “학교는 학교별로, 호실은 호실별로, 강좌는 강좌별로, 교실은 교실별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재나 예산을 별도로 할당해주는 경우

²⁷⁵ - 잡부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학과 시기에 따라 다르다. 전반적으로 중앙 대학은 국가의 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잡부금 부담이 적다.(K040) 일반적인 대학의 경우, 2004년 경에는 학생 한 사람당 월 5천~6천원 정도 들었다거나, 일년에 십여만원 들었다고 말하고 있으며,(집담회) 2006년경에는 한달에 3만원 정도 들었다는 증언(K041)도 있다.

가 드물기 때문에 대학 자체에서 시설 보수나 환경개선용 자재를 구해 놓고 교직원 임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한다.(D001)

무상의무교육은 교육의 대상인 국민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신념체계를 지닌 특정한 인간형으로 주조한다는 실질적인 기능 이외에도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더 나아가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산출한다. 북한에서 경제난 이전 시기에도 교육의 재원을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나 집단이 지원했지만, 그것이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사적으로 지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수합되어 사용됨으로써 사적인 성격은 사라지고 공공성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²⁷⁶ 그러나 경제난 이후 국가의 교육 재정 약화와 일반 공교육 부문에 대한 교육 투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사부담 공교육비가 증가되었고, 이는 해방 이후 효과적으로 지속되어 온 무상교육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년대 말에 중학교를 다녔던 한 새터민(H007)²⁷⁷은 무상교육과 교복 지급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매 해마다 무료 교육에다가, 무료 교육을 우리가 받는데다가, 매 해마다 교복을 말이에요, 학생 교복을 무료로, 국가가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주니까, 돈 일푼 안 받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해마다 4월 15일, 2월 16일에는 그 선물, 다 똑같은. ... 인민학교부터 고등중학교, 십년 동안 매년마다 교복을 새로 딱딱 주니까요. 그 새 교복 받을 때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 그러니까 충성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죠.

²⁷⁶ - 이항규, “해방 후 50년간 남북한 교육기회의 확대 과정과 특징,” 『한국교육사고 연구노트』 제14호 (2000), p. 23.

²⁷⁷ - 새터민 H007(1986년부터 1991년까지 함경남도 중학교 재학)과의 인터뷰, 2003년 11월.

I
II
III
IV
V
VI

반면 지금은 “신발이고 학습장이고 모두 하나에서 백까지 다 개인이 다 판매하고, 국가에서는 하나도 주는 거 없으니깐, 다 자기 자력갱생해야 되니까”, “국가가 우리를 보살펴준다는 생각도 좀 덜하다”(K041)고 한다. 이제는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무상봉사, 학부형들이 자원봉사”(H012)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 사교육의 등장

90년대 중반 이후 사부담 공교육비가 증가한 것과 함께 사교육의 등장이라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개인지도’ 형태의 사교육은 90년대 이전에도 예체능 분야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다양한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뚜렷한 양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사교육이 눈에 띄게 증가한 데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이 모두 작용하였다. 수요 측면의 요인은 제1중학교의 확대이다. 1995년부터 영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가 대거 증설되었는데, 특히 1999년에는 전국 시·군·구역마다 제1중학교를 1개교씩 추가 신설하는 조치에 따라 제1중학교가 200여개로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등교육체계 전반을 평양제1중학교, 도제1중학교, 시·군·구역제1중학교, 일반중학교 순의 서열화된 체계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학교 등급에 따른 국가적 지원과 학생들의 학력, 대학 진학 가능성에 큰 편차가 발생하였다. 구역제1중학교가 광범위하게 설립된 2000년대 초반에는 제1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고서 실력을 통해 대학에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출신성분, 사회적 연줄망, 개인의 시장적응능력 등에 따라 경제적 계층의 분화가 나타났다.²⁷⁸ 한 새터민(D001)의 말을 빌면 “빈부격차가 좀 생기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90년대 중반에는 오히려 대학 진학보다는 장사를 통한 축재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났으나, 2000년대 초반의 몇 가지 정책이 대학 진학의 유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 중 하나는 간부정책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3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후비간부 양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직장장도 하기 힘들어한다”며, “이제는 사회생활전반에서 사람들의 학력을 중시해야 한다”고 간부사업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원칙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²⁷⁹ 이러한 방침에 따라 실제로 2000년대에는 당간부가 되려면 당원, 군경력 뿐만 아니라 대학졸업장이 필수적인 항목이 되었다고 한다.(D001)

사교육의 확산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정책은 ‘전민복무제’와 대학생 중 제대군인의 비중 확대 조치이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모든 남자들을 군에 입대시키는 ‘전민군사복무제’를 도입하였고, 대학 입학생 중 제대군인의 비율을 높여, 제1중학교 졸업생의 경우에만 대학에 바로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한때 대학입학생 중 직통생의 비중이 10%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 들기 위해서 제1중학교 입학시험, 대학 입학시험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학부모들이 개인교사를 구해 입시준비를 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²⁷⁸ - 이에 관해서는 조정아,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6) 참조.

²⁷⁹ - 김정일. “새 세기,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김정일선집 1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p. 116.

I
II
III
IV
V
VI

개인교수 과목도 예체능 위주에서 입시과목인 수학, 과학, 외국어, 국어 교과로 확대되었다.

공급 측면에서는 경제난 이후 교사들이 교직을 통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개인지도 생계유지의 방편으로 삼았다는 점이 사교육 확산의 요인이 된다. 주로 대학 교수, 중학교 교사, 과학원 연구사, 김책공대, 이과대 등 중앙대학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일과 후에 두세 시간 정도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친다. 이공계통 대학의 경우, 교원 중 절반 정도가 교직과 개인지도 병행한다고 한다.(D001) 사교육 형태는 학생들이 강사 집으로 와서 배우기도 하고, 강사가 학생 집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일정 기간 입주 형태로 개인지도 하기도 한다. 전직 교사 중에 20~30명씩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그룹을 짜서 전문적으로 개인지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H014)²⁸⁰ 이제는 유능한 교원들에게는 “교수로서의 활동보다는 저녁에 돌아와 가지고 애들 앉혀놓고 가르쳐서 거기서 부수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그게 하나의 삶의 지혜”(K039)라고 말할 정도로 개인지도가 일반화되었다. 교원이 별도로 돈을 받고 개인지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혹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교원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하며,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거나 “높이 보고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다.(K041, H014, D001)

사교육이 어느 정도 성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자식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과외교육을 어느 정도씩 하며”,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애가 한국처럼 놀 시간이 없다”는 것이 새터민들의

²⁸⁰ - 새터민 H014(1988년부터 1993년까지 함경북도 도제1중학교 재학, 1997년부터 1998년, 함경북도 중학교 교원)와의 인터뷰 2007년 8월.

공통된 증언이다.(집담회, K041) 새터민들은 2003년도에 대도시에서 개인지도를 받는 학생이 20~30% 정도였다고 증언한다.(K039, H014) 2006년도에 도시 지역에서 한 학급에 서너명 정도 사교육을 받았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보다 더 적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K041) 이러한 증언을 종합해보면 사교육 정도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며, 대도시의 경우 20%내외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사교육에 드는 비용은 2004~2006년경에 한 달에 오천원 정도,(K041, D001) 또는 쌀 10~15kg(K039)의 시장가격 정도이다. 종종 학부모가 권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당을 시켜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집담회) 90년대에는 개인지도의 대가로 식량이나 옷 등 생활필수품을 지급하였고 “생각해서 주면 받고” 그랬는데,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는 “배웠으면 일정하게 물질적으로 자극을 줘야 되는 것이 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대부분 돈으로 지급을 하고, 얼마를 준다는 것이 “시내에서부터 촌에까지 전달”이 다 되었다고 한다.(K041)

사교육 확산 초기에는 개인지도가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완전히 “노골화”되었고 그다지 통제를 하지도 않는다.(K041, 집담회) 교원의 경우에 돈 받고 개인지도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 당위원회로부터 비판을 받지만,(K041, H014) “지내 과하면 안되고”, “대충 눈치껏 하는” 정도면 괜찮다고 한다.(K039) 학생의 입장에서는 최근에는 누구한테 개인지도를 받는지를 자랑삼아 이야기하고,(K039)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것을 부러워한다고 한다.(H014)

아직까지는 북한에 사교육이 보편화되었다거나, 공교육을 대체하고 있다거나, 북한 교육의 한 축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남한의 학원 같은 제도화된 사교육 기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해방 후 줄곧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 영역이었던 교육의 작은 일부만이 사적

I
II
III
IV
V
VI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교육의 출현은 단순히 양적인 비중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전 시기에 북한에서는 “학부형은 고저 학교를 잘 보내주는 게 임무지, 아이들 실력을 학교가 무조건 책임 진다”고 생각했다고 한다.(K041) “학교교육으로 모든 게 잘 되기를” 기대하고,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C013) 교사들은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를 하고, 대학에 갈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학생들도 집단별로 모여서 개별지도를 했다.(H008²⁸¹, K041) “학생을 가르치는 게 임무기 때문에 밤이래도 야를 집에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공부가 뒤떨어지는 학생은 퇴근을 늦추면서 “그저 앉혀서 배워주고 또 배워주고” 했다는 것이다.(K041) 즉 교육은 국가가 국민을 키워내는 공적인 일이고, 그러한 국가의 의지를 대행하는 사람이 교사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사교육의 등장과 확산은 교육이 부분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몫이라면 투자의 대가로 거두게 되는 이득도 국가나 사회공동체의 것이 아닌 개인의 몫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의 등장과 확산은 향후 북한 교육의 변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2. 발전교육론의 부상과 ‘수재교육’

가. 북한판 발전교육론: ‘교육에서의 실리주의’

2000년대 들어 교육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북한판 발전교육론이 본

²⁸¹ - 새터민 H008(1989년까지 황해남도 중학교 교사)과의 인터뷰, 2003년 8월.

격화되었다. 최근 북한의 교육 관련 담론을 분석하면 ‘교육에서의 실리주의’가 지칭하는 방향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교육, 특히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단기간에 이 분야의 인재를 대거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²⁸² 발굴과 양성에 중심을 둔 교육체계의 개편을 의미한다. 셋째, ‘성적본위, 실력본위’ 교육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부터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들어 경제난 극복과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교육, 컴퓨터 교육에 대한 강조는 국가적 차원의 생존전략인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와 맥을 같이한다. 과학기술은 사상, 총대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여겨지고 있다.²⁸³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국력의 척도가 되고, 국력경쟁이 곧 과학기술경쟁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과 국방건설도 과학기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인재의 효율적 양성이 과학기술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산업시대의 발전상을 반영하여 교육을 개선하고 과학기술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로 강성대국 건설의 “관건적고리”가 된다고 본다.²⁸⁴ 이와 함께 첨단과학분야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기초과학 교육과 외국어 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평양제1중학교와 도제1중학교에서는 정치사상교과 및 기초과학기술 교과를 제외한 일부 교과목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²⁸² - 북한에서 ‘수재’, ‘수재교육’이라는 용어는 ‘영재’, ‘영재교육’에 해당하는 용어인데, 이 글에서는 용어의 맥락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수재’, ‘수재교육’으로 표기한다.

²⁸³ - 1999년, 2000년 신년사설

²⁸⁴ - 장성철, “과학기술교육내용을 개선하는것은 정보산업시대의 근본담보”, 『교원선진수첩』, 제8호 (2005), pp. 47~48.

인재 양성에 있어 기초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7월 4일에 평양제1중학교의 교육 강령을 “실리주의적원칙에서 대담하게 정리하는 대책”을 세워주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27개 교과를 정리하여 “정보산업시대의 인재를 양성 하는데 맞게 중심을 살리는 방향”에 입각하여 필수적인 교과만 가르치고 일부 교과는 교육과정에서 제외한 것이다.²⁸⁵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교과 조정의 사례는 평양제1중학교와 도제1중학교의 수학수재반과 생물학수재반의 경우이다. 2001년 3월에 이들 제1중학교에서는 수학과 생물학 분야의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수학수재반과 생물학수재반을 구성하여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최근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IT, BT 분야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수학수재반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 김정숙 혁명력사, 혁명활동 과목과 국어, 문학, 컴퓨터, 수학, 물리 과목만을, 생물학수재반에서는 여기에 생물, 화학을 더하여 가르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기존 교과목 중에서 제외된 과목은 사회주의도덕, 현행 당정책 등 정치사상교과와 역사, 지리, 한문 등의 인문과학교과, 체육, 음악, 미술, 제도, 실습 등의 예체능, 기술관련 교과이다. 외국어교과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1중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어교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외국어교과는 정식 교과로 가르치거나 별도의 소조 학습을 통해 교육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치 이후에 교과별 시간 배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정치사상교과의 교육시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교과의 수업시간은 주로 수학, 물리 등 기초과학교과로 배정되

²⁸⁵ - 김영인, “선군시대에 수재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신 현명한 령도(2)”, 『교원선전수첩』, 제2호 (2004), p. 30.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일부 수재교육기관에 국한된 조치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교육내용을 두루 학습하도록 하기보다는 과학기술교육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해당 분야의 기초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는 ‘실리주의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의 또 다른 의미는 평균주의가 아닌 선택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주로 중등 및 고등교육 수준에서 수재교육의 활성화와 연관된 조치로 표현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8년 11월에는 각 시·군마다 제1중학교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면서 교육사업에서 실리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⁸⁶ 이 조치의 핵심은 이전 시기까지 부분적으로 운영되어왔던 중등 수준에서의 수재교육체계를 전면화하여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제1중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후비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질적으로 키워내는 우월한 교육체계, 정보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의 특성과 발전추세에 맞는 현대적 과학기술 인재양성체계”²⁸⁷를 확립하려는 조치, 즉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조치였다. 재능있는 인재를 조기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수재교육의 강화를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의 기본 전략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성적과 실력을 위주로 교수활동과 평가, 교육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에

²⁸⁶ - 김락·최경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대학교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온 위대한 령도(1),” 『교원선전수첩』, 제1호 (2003), p. 17

²⁸⁷ - 사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혁명의 요구에 맞게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지,” 『교육신문』, 2007년 2월 1일.

두고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할 수 없고, 교육을 받았지만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쪽정어”를 양성할 뿐이기 때문에, 학생선발에서부터 성적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실력본위의 원칙’을 지켜야 선군 시대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²⁸⁸

실리주의적 교육 정책은 교육 일선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도 반영되고 있다. 교사 출신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우수한 학생을 수준별로 선발하여 별도의 분리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학급 내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도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교육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 교원 출신 한 새터민(D001)의 증언에 의하면 2000년도 초반에 대학교육은 “선두주자 기준해서 나가라”는 지침이 교육성에서 하달되었다고 한다.²⁸⁹ “뒤처지는 사람 따라붙고 안 따라붙고 (상관없이), 졸업생 백 명 중에 (수재) 두 명만 채워 넣으면, 그 두 명이 백 명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교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학급의 평균성적과 함께 최고 실력을 갖춘 학생을 얼마나 양성했는지를 평가의 주요 척도로 보고 있다고 한다.²⁹⁰ 실험을 할 경우에도 실험기자재가

²⁸⁸ - “교육을 실력본위로 하는것은 혁명인재육성의 근본방도,” 『교육신문』, 2005년 2월 10일.

²⁸⁹ - 이 지침을 문서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여러 명의 교사 출신 새터민들이 2000년도 이후 학생지도의 방향이 열등한 학생들의 수준이나 평균학력을 끌어올리는 것에서, 상위층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변화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²⁹⁰ - 문헌자료를 통해 교원평가 기준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2006년 10월 26일자 『교육신문』에 “교수평가표준의 내용에는 지난 시기의 전통적인 교원중심의 교수에 대한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에 모를 박고 교원을 평가하는 항목이 중요하게 포함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들어 학생들의 학습성취도가 교원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통히 하지도 못하는” 학생에게는 “몇 시간 나가있으라”고 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몇 명만 남겨 실험을 진행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중등학교에서도 90년대 중반부터는 군에서 학교별 경쟁과 비판회를 실시할 때 평가의 기준이 대학 입학생 수가 되었다고 한다. 대학 입학생을 별로 배출하지 못한 중학교의 교장과 부교장은 “건달군”이라고 “비판과 망신”을 당한다고 한다.(K041) 90년대 중반까지 중학교를 다녔던 한 새터민(H014)은 자신이 학교를 다닐 때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앉히고 앞의 두 줄에 앉은 학생들만 신경써서 교육을 해서 “저학급은 특별하다. 애들이 이렇게 딱 계선을 놓으니까 못하는 애들을 더 못하고 잘하는 애들은 더 잘 한다”고 다른 교사들의 비판을 받았는데, 그 교사가 나중에 군제1중학교 교사로 발탁되어 간 사례를 들면서 중등학교 교육에도 경쟁이 도입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자원이 극히 부족한 현재 북한의 교육 현장에서 실리주의 교육, 실력본위의 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일부 학생들에 대한 자원 집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발전을 위한 교육: 컴퓨터·IT 교육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교육내용은 컴퓨터와 IT부문의 교육이다. 특히 학교교육체계를 통한 컴퓨터교육은 과학기술

신문 기사에는 이전 시기에는 교원들의 지식정도와 학술적 자질을 위주로 교원을 평가하였지만, 현재는 “학생의 인식과 능력발전을 기본으로 평가하는데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졌다”고 기술되어 있다.

I
II
III
IV
V
VI

인재 양성 차원에서 90년대 초반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정규 교과로 편입되었고,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컴퓨터수재 양성을 위한 조기교육체제가 구축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2001년 1월 28일 김정일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컴퓨터수재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통하여 컴퓨터수재 양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후 북한의 컴퓨터교육은 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연결되는 컴퓨터수재 양성교육을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 연설문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세계적인 경제와 군사력 경쟁의 승패는 “누가 컴퓨터수재를 많이 가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 컴퓨터수재양성사업이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였다.²⁹¹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는 20대 후반이 되면 나이가 많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학에서 전문적인 컴퓨터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는다고 지적하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 제1중학교, 금성 제2중학교를 컴퓨터수재양성기지로 만들어 컴퓨터 수재 양성을 위한 조기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수학경연, 컴퓨터경연 등을 통해 전국의 모든 중학생 중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금성제1중학교, 금성제2중학교 수재반에 입학시키고, ‘피라미드식’으로 공부를 시키면서 실력을 평가하여 기준 미만인 학생들은 탈락시키고 우수한 학생들을 편입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컴퓨터교육을 제1중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체제에서 컴퓨터 부문 영재교육기관을 특화시킨 것이다. 북한이 기존의 영재교육기

²⁹¹ - 김정일, “컴퓨터수재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1), p. 97.

관인 평양 제1중학교가 아닌 예체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금성 제1·2중학교에 컴퓨터수재반을 설치한 것은 컴퓨터와 교재, 교수인력 등이 모든 제1중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인력개발체제의 특성상 특정한 산업 부문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의 수를 계획하여 일정한 규모로 양성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사회 정보화와 개방화보다는 ‘제한적인 정보화’ 정책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⁹²

1990년대 이후 컴퓨터를 비롯한 IT분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은 그리 좋지 않다. 컴퓨터 보유대수는 대략 50만대가 채 안 된다. 100명당 2대가 조금 못되는 비율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²⁹³ 제1중학교 등의 수재학교는 국가에서 컴퓨터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컴퓨터교육의 물질적 기초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는 대부분 학생들의 ‘외화벌이’나 학부모의 지원에 의해서 마련된다.²⁹⁴ 그러다보니 교육여건과 수준에 있어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컴퓨터수재양성기관인 금성 제1, 제2중학교의 컴퓨터 보유대수는 최소 1,300여대 이상인데 비해, 일반 제1중학교는 몇 십대 수준, 일반 중학교는 몇 대가 있거나 없거나 한 정도의 수준이다.²⁹⁵ 컴퓨터가 있어도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교사가 없어서 컴퓨터를 “모셔 놓거나”,(K041, K040) 고장난다고 만지지

²⁹² 송경준, “북한의 IT교육 현황과 특징,”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5년, p. 13.

²⁹³ 송경준, 위의 글, p. 8.

²⁹⁴ 90년대 전반기에 군부대 인근지역의 중학교를 다녀 졸업한 한 새터민(J011)은 군부대가 외화벌이를 통해 컴퓨터를 50대 정도 지원해 주어 학생들이 타자와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법을 배웠다고 증언하고 있다.

²⁹⁵ 송경준, “북한의 IT교육 현황과 특징,” p. 44, 새터민 증언.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H014)²⁹⁶ 대학의 경우는 중앙대학은 물론이고 각 지방의 웅만한 공업대학은 컴퓨터 수십대를 갖춘 컴퓨터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대학을 제외하고는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컴퓨터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중앙대학의 경우에도 경제난 이후에는 국가에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K040)

컴퓨터 교육 내용의 수준도 학교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중학교 3학년 이전 단계에서는 컴퓨터 관련된 기본 개념과 작동법, 키보드 연습 등을 다루고 고학년에서는 컴퓨터 운영 체제와 각종 사무용 프로그램 및 인터넷 활용 방법, 기초 프로그램 작성법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²⁹⁷ 그러나 기자재나 교사를 갖추지 못한 학교에서는 종이자판에 타자치는 연습을 하고, 방정식 해법 프로그램 정도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H014) 학생들은 기본적인 컴퓨터 문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컴퓨터 수재양성기관에서는 “컴퓨터회로와 주변장치”, “C와 C++언어 프로그래밍작성법”, “윈도우 조작체계”, “컴퓨터수학”,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자료기지원리프로그램 Visual”, “D-Base와 Access”, “리눅스 프로그래밍 작성법”, “인공지능언어 Lisp와 Prolog”, “자연언어처리와 인공지능”, “컴퓨터통신과 네트워크” 등의 교과를 통해 IT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이론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1996년에 평양 프로그램 강습소, 1997년에 김책공대 컴퓨터정보센터, 1999년에는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이 설립되었

²⁹⁶ - 새터민(H012)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²⁹⁷ - 『교원신문』, 2001년 2월 1일.

으며, 2001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학과가 설치되었다. 또한 2000년에 평양과 함흥에 컴퓨터기술대학을 신설한 것을 비롯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러 대학에서 컴퓨터공학부, 정보공학과, 정보처리학과 등 IT 관련 학과가 신설되었다. 2003년 현재 전국적으로 77개 대학에서 정보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다.²⁹⁸

IT 분야의 고등교육은 중앙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IT최고전문가 양성과 컴퓨터기술대학 및 일반대학에서 이루어지는 IT실무기술자 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IT최고전문가 양성기관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조선컴퓨터센터가 대표적이고, IT실무기술자 양성기관으로는 평양과 함흥의 컴퓨터기술대학과 평양인쇄공업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라진해운대학 등이 있다.²⁹⁹ 컴퓨터기술대학의 학생들은 제1중학교 졸업생을 비롯하여 군대를 거치지 않은 직통생들로 구성된다. 특히 제1중학교 3학년 을 마친 학생들 중에 컴퓨터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중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이 대학 예비학부에서 3년간 교육한 후 본학부에 진학하도록 하고 있다.

IT분야의 대학교육에서는 ‘속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 분야의 인재 양성을 여타 분야와 동일한 속도로 진행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학과목 성적에서 우수하고 프로그램작성능력이 높은 컴퓨터수재들에게 단기적으로 정보기술개발을 위한 지식을 주어 전공기술에 대응”하도록 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³⁰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컴퓨터

²⁹⁸ 『조선중앙년감』, 2004년.

²⁹⁹ 송경준, “북한의 IT교육 현황과 특징,” pp. 15~34.

³⁰⁰ 김명수, “컴퓨터수재교육의 특징과 요구,” 『고등교육』 제6호 (2006), pp. 48~49.

기술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일반 대학에 비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짧게 운영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통한 IT 전문인력 양성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특히 당과 행정기관 간부들의 컴퓨터 문해능력 획득도 중요시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연설문에서 “지난날에는 우리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문맹이었다면 오늘에는 컴퓨터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문맹자”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조국을 위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컴퓨터를 배워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지적하였다.³⁰¹ 또, 컴퓨터를 배우는 데 간부들이 앞장서서 컴퓨터 학습을 하고 컴퓨터를 사업에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2001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도 컴퓨터기술이 빨리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간부들이 컴퓨터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컴퓨터 부문의 인재 양성과 간부들의 컴퓨터학습을 강조하였다.³⁰²

이러한 지침에 따라 기업소에서도 컴퓨터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모르면 “자리 내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간부들이 컴퓨터를 배우려고 “밤잠을 안 잔다”고 한다. 그렇지만 각 기업소마다 컴퓨터 전공자가 드물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 간부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 “위신이 높다”고 한다.(K041) 그러나 중앙의 큰 기업소를 제외하면 실제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지방의 공장에서는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심심풀이로 자료를 검색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D001) 컴퓨터와 IT 부문의 교육을 강조하는

³⁰¹ - 김정일, “컴퓨터수재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p. 101.

³⁰² - 김정일, “새 세기,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p. 114.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당간부를 하려면 공과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IT분야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공 분야가 되었다고 한다.(D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IT분야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IT분야의 교육을 통해 “최첨단정보기술지식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능숙히 활용할수 있는 정보기술인재”³⁰³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최신 이론과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외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물론 인터넷도 외국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간의 인트라넷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IT분야의 기술서적은 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통해 들어오는데, 학생들은 인민학습당에나 가야만 원서를 볼 수 있고, 그나마 지방의 도서관에서는 원서를 조금밖에 소장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대학생들은 교수가 교과서 보충자료로 제시하는 외국의 자료를 손으로 옮겨 적어가며 공부를 하고 있다.(D001, K039) 또한 대학의 실험실습설비나 생산 현장의 설비가 낙후되어 있어 이론과의 괴리가 크고, 대학,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시장의 수요와 이윤창출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발전과의 연계성이 적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선진국으로의 산업시찰이나 단기유학을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을 열어야만 하는” 북한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³⁰³- 김명수, “컴퓨터수재교육의 특징과 요구,” p. 48.

I
II
III
IV
V
VI

다. 평등주의 교육에서 수재 양성 중심의 교육체제로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공교육 체계는 IT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의 수재를 선발하고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체계로 재구성되었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수재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을 받는 사람을 천성적으로 월등한자와 열등한자로 갈라놓음으로써 본질에서 근로인민의 자녀들의 열등성을 묻거짓고 합리화하며 교육의 차별을 기초지으려는 반동적 견해”³⁰⁴라고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가 1984년에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평양제1중학교가 설립되고, 이듬해 각 도 소재지에 총 12개의 제1중학교가 설립되면서 중등교육 수준에서 수재교육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5년 7월에 제1중학교 졸업생은 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몇 개 중앙대학에만 진학하기 때문에 부문별 주요 대학에 실력있는 학생들이 진학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제1중학교를 증설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9월 1일부터 평양모란봉제1중학교가 평양시 단위의 수재학교로 전환되고, 1996년 4월 1일에 평안남도 순천제1중학교, 평안북도 압록강제1중학교, 함경남도 성천강제1중학교, 함경북도 고말산제1중학교 등이 신설되어 제1중학교 수는 총 26개교에 이르게 된다. 이어 1998년에는 제1중학교를 전국의 모든 시, 군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1999년 3월에는 전국 시·군·구역마다 제1중학교를 1개교씩 추가 신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³⁰⁵ 현재 제1중학교는 전국의 시·군·구역을 통틀어 200여개가 설립되어 있다.

³⁰⁴ -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75), pp. 87~88.

³⁰⁵ - 교원신문사,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대학교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령도(1),” 『교원선전수집 1』, 제1호 (2003), pp. 17~18.

1990년대 후반의 제1중학교 확대 조치는 80년대 중반의 평양제1중학교, 도제1중학교 설립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전국적인 수재만을 선별하여 교육을 하였던 제1중학교 제도 도입기와는 달리, 시·군·구역제1중학교 → 도제1중학교 → 평양제1중학교의 세 단계로 다층화된 선발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모든 중등학생들을 능력별로 세분화하여 선발하고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즉 소수의 수재를 선발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전체 중등교육체계의 등급화, 서열화라는 점에 무게가 두어진 조치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각 단계의 제1중학교 선발과정을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제1중학교 입학생은 소학교 4학년 때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소학교에서는 3학년 때부터 제1중학교에 입학할만한 학생들로 소조를 구성하여 방학 때나 방과 후에 남아 별도로 입시준비를 시킨다고 한다.³⁰⁶ 4학년 초에 학교별 시험부터 시작해서 구역, 시, 도로 올라가면서 몇 차례 시험을 보는데,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일정 비율을 탈락시킨다. 마지막에 도제1중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수학, 자연, 국어 과목의 필기시험을 2~3번씩 보고, 혁명력사, 암기력 등을 시험하는 면접시험도 본다. 지능시험이라고 해서 지능검사와 유사한 시험도 치른다고 한다.(H014) 또한 제1중학교 내의 경쟁을 통해 매년 일정 비율의 학생을 중도탈락시키고 일반 중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편입시험을 치러 정원의 일부를 중학교 4학년 편입생으로 받는다. 도제1중학교 학생 중 편입시험 합격자는 평양제1중학교에, 시·군·구역제1중학교 학생 중

³⁰⁶ - 제1중학교 입시준비에 활용되는 학습교재로는 “꿀꿀이 문제집”, “1500 문제집” 등 출제유형을 분석해놓은 문제집이 있다고 하고, 일본이나 소련 등에서 나온 수학 문제집도 종종 활용된다고 한다.(H014)

I
II
III
IV
V
VI

편입시험 합격자는 도제1중학교에, 일반중학교 학생 중 편입시험 합격자는 시·군·구역제1중학교에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 따라 지능계발 시기가 다른 것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고, 제1중학교에서 학생들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시·군·구역제1중학교 확대 조치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교육정책상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조치였다. 각 도에서 한개씩의 제1중학교를 설립한 것은 학교 수로 보면 “새밭의 피”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제1중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거나, 자신의 진로와는 별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구역제1중학교의 설립은 “구역에서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공부 잘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구분을 가시화하였다.(H012, H014)

2000년대에는 서열화된 제1중학교 체계를 구성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중등 및 고등교육 수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재교육을 강화하였다. 2001년에는 평양제1중학교와 도제1중학교에 수학수재반과 생물학수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수재반에 대해서는 수학과 자연과학 교과외 비중을 높이고, 여타 교과외 비중을 줄이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하였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뛰어난 교원, 연구사들을 수재반의 겸직교사로 임명하여 최신과학기술에 관한 강의를 정규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전 시기에도 일반중학교와 제1중학교에서 소조의 형태로 학업우수자에 대한 집단적 지도를 해왔지만, 소조는 일반적으로 방과 후 시간에 운영되는 것으로 일반 학생들과 교육과정 자체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었다. 평양제1중학교와 도제1중학교에 수재반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소수집단을 선발하여 이들을 위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였다.

수재반 설치와 함께 제1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도 강화하였

다. 방과 후 과외활동 시간에 교실에서 집단적으로 복습을 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소질과 재능을 고려하여 개별학습지도와 실험실습, 학과목소조 등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소질과 개성을 무시하고 “이것저것 평균주의적으로, 평면적으로” 하는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³⁰⁷ 실제로 개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개별 학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수재로 분류되는 우수 학생들에 대한 정책은 능력에 따른 세분화와 개별교육 강화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에는 평양제1중학교와 도제1중학교에서 수재판별에 의한 학생선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³⁰⁸ 즉 일률적으로 입학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에서 각 학교에 나가 수재판별기준에 의거해서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예비선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입학시험을 보도록 하고, 특별하게 머리가 좋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험 점수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³⁰⁹ 현재 평양제1중

307- 『교원신문』, 2004년 1월 15일.

308- 2000년대 중반 이후 교육 관련 신문과 정기간행물에는 수재의 특성과 판별법에 관한 글이 많이 실리고 있다. 이 글들에서 수재 선발의 지표로 꼽고 있는 것은 관찰력, 이해력, 주의집중력, 상상력, 기억력, 분석능력, 비교능력, 종합능력, 추상일반화능력, 추리판단능력 등의 창조적인 사고력과 응용능력, 기발한 착상력과 독창적인 결합능력, 정보처리능력, 수학 등 기초과학지식, 외국어, 논리적 사고 및 표현능력 등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지식구조, 인내력, 투지력, 탐구력, 열성, 조직력, 교류협동능력, 성격 등 개성적 측면 등이다(『교원신문』, 2004년 1월 15일; 장관호(2006), “세계교육발전추세 - 대학교육단계에서 수재선발지표와 내용,” 『고등교육』 제6호(2006).

수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관찰법과 지능조사법을 배합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지능조사법은 기억력, 관찰력, 언어적지능, 수학적지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언어적지능과 수학적지능의 종합점수가 1:1이 되도록 구성하는데,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의 학생을 수재형의 학생이라고 보고 있다(최청의, “수재형의 학생들을 옳게 찾기 위한 몇가지 방법,” 『교원신문』, 2003년 8월 14일).

309- 김영인, “선군시대에 수재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신 현명한 령도(2),” p. 31.

I
II
III
IV
V
VI

학교는 “중앙에서 내려와 학생을 뽑아간다”는 새터민들의 증언에 미루어볼 때 ‘수재판별법’에 의거한 선발 방법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수재교육에 대한 연구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평양제1중학교에는 수재교육연구실을 만들어 수재교육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수재교육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재판별법, 각국의 수재교육 동향 등에 관한 연구 결과가 『고등교육』 등의 정기간행물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2월 22일자 『교육신문』과 2006년 『고등교육』 제4호에서는 평양 제1중학교 수재교육연구실 소속 연구자가 중국, 일본 등의 수재교육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주로 대학 입학 연령제한 철폐, 대학 내의 수재교육 학급 조직, 대학 부설 수재교육기관 등에 관해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³¹⁰

2002년에는 문학수재 양성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중등교육단계에서 문학 부문의 수재를 양성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한 두개 학급 규모로 선발하여 각 도 외국어학원 문학반에 입학하도록 하고, 문학반의 졸업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의 어문학부에 진학하도록 하였다.³¹¹

중등교육 체계를 능력 중심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대학 내에서도 수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수재교육의 성과는 대학교육 단계에서 완성되며, 중등교육단계에서 수재교육을 잘 하여도 “대학에서 그것을 계승하지 못하면 큰 은을 내지 못하게”³¹² 되기 때문에 대학의

³¹⁰ - 함은희, “다른 나라 대학들에서 수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등교육』, 제4호 (2006), p. 60.

³¹¹ - 김영인, “선군시대에 수재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신 현명한 령도(2),” p. 29.

수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그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돐에 즈음해서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학에서도 대상별 특성에 맞게 수재교육을 발전시켜 20대, 30대 학사, 박사를 양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³¹³ 이에 따라 주요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서 수재반이 조직·운영되게 된다. 2001년에 김일성종합대학의 컴퓨터과학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체신학부, 평양의학대학 등에 수재반이 설치되었고, 2002년에 각 도의 외국어학원과 평양건설건재대학에도 수재반을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2002년 11월에는 김책공업대학의 첫 수재반 졸업식이 열렸다고 한다. 수재반은 기초교육 단계에서는 교과목을 세분화하지 않고 공통기초과목을 위주로 교육하고, 전공교육 단계에서 전문적인 교과목을 교육하도록 하고 선택교과도 설치하도록 하였다. 교육 기간도 대학의 실정에 맞게 단축 조정하고 학부 졸업 후 바로 박사원에 진학하여 연속적으로 학사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³¹⁴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02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4개 대학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대학 졸업생들이 박사원과정을 연속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³¹⁵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한의 주요 이공계대학에서 수재반이 운영되고 있고, 일부 선택교과제도 운영되고 있다. 수재반의 교육기간은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에서 일반반보다 한학기 정도 짧거나 일반반과 같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각 학생별로 개인의 지식 수준, 재능, 학습목표 등을 반영한 개별교육과

312 - 김경철, “우리 식의 수재교육체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명도”, 『교원선전수첩』 제1호 (2006), p. 29.

313 - 김정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 『과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p. 266.

314 - 김영인, “선군시대에 수재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신 현명한 명도(1)”, 『교원선전수첩』, 제1호 (2004), p. 18.

315 - 『조선중앙년감』, 2003년, p. 194.

I
II
III
IV
V
VI

정안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³¹⁶

수재교육의 강화와 세분화된 능력별 교육체계의 형성은 해방 후 북한 교육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던 평등주의적 교육 기조와는 상반되는 정책이다. 또한 수월성보다는 사회적 평등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지향점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수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을 재능있는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수재교육 관련 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강조점이 눈에 띈다. 첫째, 북한의 수재교육은 개인만의 발전이 아닌 ‘집단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수재는 나라의 재부’라는 표현의 반복적 사용³¹⁷은 수재의 발굴과 집중적 육성정책이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 발전이라는 집단적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수재교육의 혜택은 소수의 수재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수재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천부적 재능을 절대적으로 보는데 반해서, 사회주의 교육에서는 수재들을 조기 발견하여 그들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모든 부문에서 모든 사람의 재능을 최대한 성장시킬 수 있게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다.³¹⁸ 모든 사람이 “다 차별없이 자기의 희망과 소질을 꽃 피울수 있게 되고”³¹⁹,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예술인, 체육인들이

³¹⁶ - 『교육신문』, 2007년 8월 16일.

³¹⁷ - 『교원신문』, 2002년 5월 16일; 『교육신문』, 2005년 7월 14일; 『교육신문』, 2006년 8월 31일.

³¹⁸ - “우리 당의 인재중시방침을 교육사업에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교원신문』, 2002년 5월 16일.

다 수재로 되는”³²⁰ 이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재교육이 발전하면 일반 학교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³²¹

그러나 시·군·구역제1중학교가 설립되어 중등교육 체계가 수준별로 재편된 것에 대한 북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보통교육 전반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1중학교의 광범위한 설립은 그나마 제한적인 교육적 자원이 제1중학교를 중심으로 집중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평양제1중학교나 금성제1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도제1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도별 경쟁 때문에 시설과 교육환경 면에서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³²² 교사도 각 도에서 우수한 교사들을 차출해서 배치한다. 학년이 보통 두 세개 정도의 학급으로 구성되는 구역제1중학교도 일반중학교보다 시설과 교사의 자질 면에서 우수하다. 2000년도 초반에는 한때 대학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제1중학교에만 배정되었고, 일반 중학교 졸업생들은 전문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지금은 일반 중학교에서도 대학입학 추천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 중학교 출신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다” 제1중학교에 입학하려 하고,(H012) 입학할 못했을 경우에는 편입시험을 통해서라도 제1중학교에 들어간다고 한다.(K041)

제1중학교가 대거 설립된 이후에 일반중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반 중학교의 학력 수준과 교사,

³¹⁹ - 『교육신문』, 2007년 1월 25일.

³²⁰ - 『교육신문』, 2006년 8월 31일.

³²¹ - 『교육신문』, 2005년 11월 10일.

³²² - 도제1중학교 출신 새터민(H014)의 증언에 의하면 보통 학년당 2~3개 학급 규모인 도제1중학교의 기숙사 시설은 웬만한 중앙대학보다 좋다고 한다.

I
II
III
IV
V
VI

학생들의 의욕이 떨어졌다고 한다. 교사 출신 새터민들은 일반 중학교의 교육 수준이 “말이 아니다”라고 한다. 일반학교 학생들은 “갈라 났으니까 심술이 나서 공부를 더 안하려고 하고”,(H012) “교원들도 배워주기 싫고, 학생들도 배우려는 의욕이 없고, 금지감도 없다”는 것이다.(K041) 일반중학교는 농촌동원이다, 건설동원이다 해서 동원의 대상이나 되고 “그저 막 다녀버리기 때문에 막중학교라고 부르고 있다”고도 한다.(D001)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일반 중학교가 아닌 제1중학교에 진학하려 하기 때문에 제1중학교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좀 풍부하게 사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 제1중에 보내려 하고”, 이는 사교육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평양제1중학교와 도제1중학교는 진정한 수재교육 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구역제1중학교는 “뺨있는 사람들만 가고, 깡통도 다 가는”,(D001)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원에 의해 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구역제1중학교 설립이 교육적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새터민의 증언은 구역제1중학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데에서는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걸 차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구역일고가 생겨나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몰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론이 나빠지고. ... 뭐 수재라는 것이 무슨 부모의 지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역1고는 부모의 지원이라든가, 열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좌우되는 거예요. ... 도에 하나 있을 때에는 수재교육이라는 것의 명분이 있었는데, 구역에 하나 있으니까 무슨 수재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게 교육의 차별을 두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거든요. 공부 좀 하고 괜찮게 사는 애들은 1고등학교로 가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남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자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무슨 교육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두냐? 무슨 제1고가 수재냐? 자꾸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처음에 없앤다, 이런 말이 돌았어요. 구역1고는 간부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잘 살아보자고 만든 체계가 이런 것이니까, 그게 앞으로 없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1고나 중앙1고는 엄연히 존재하겠지요. 일반학교들은 점점 떨어지니까.(H012)

중등교육체계 전체를 학업성취도에 따라 위계화하는데 대해서는 이와 같은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하지만, 수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층화된 선발제도의 도입으로 학생들간의 경쟁심이 생기고 그러한 경쟁심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K041)고 보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수재교육에 관한 담론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의 북한 실정에서 한 명의 똑똑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백 명의 평균적 수준의 학생을 양성하는 것보다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에서 대학 교원을 했던 한 새터민(D001)은 대학의 수재교육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 평균주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두각이 나타내는 인재들이 없었죠. 그러다가 지금 그나마 두뇌를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가지고. 몰알, 몰맹이 백 키우기보다도 똑똑한 거 하나 키우는 것이 낫다. 저희 교원들을 그렇게 생각하죠. 저 받아들이 못하는 대상을 놓고 그러다나면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이게 제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갈 수 있는 자는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이 하나가 뒷자리를 다 벌여 먹일 수 있는 거니까.

I
II
III
IV
V
VI

3. 교육의 ‘현대화’와 비리의 확대

가.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의 ‘현대화’

교육에서 ‘실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효과를 최대화하여야하고, 교육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에 2000년대 이후 교육 방법 및 시험 방법 개선과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기자재 활용, 대학 교육과정 조정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전반에 걸쳐 교육방법 개선의 기준으로 ‘지능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2004년 1월 1일 북한의 교육상 김용진은 『교육신문』에 게재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자”라는 글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능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5년 1월 27일 『교육신문』 사설에서는 “새 세대들에 대한 지능교육, 과학기술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여기에 현시대의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후비를 체계적으로 키워내며 나라의 전반적 과학자, 기술자대렬을 질량적으로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는 기본담보가 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지능교육에 주력하여 정보산업시대에 필요한 지능 수준과 창조적 능력이 높은 인재를 육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능교육은 “제반 인식능력과 응용능력을 키워주는 과정”³²³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 습득 뿐만 아니라 사고력을 비롯한 지적능력과 지식탐구방법의 향상을 포함한다.³²⁴ 지능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 자신이 머리를 써서 교수내용을 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³²⁵ 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사고력, 관찰력,

³²³ - 남진우 외, 『사회주의교육학』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142.

³²⁴ - 『교육신문』, “당의 지능교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2005년 1월 27일.

I
II
III
IV
V
VI

기억력, 상상력 등 지적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능교육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³²⁶

지능교육은 현재 주로 교육방법 개선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학습 방법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내지 주입식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에서도 “지식을 뒤주 안에 넣어주는 지식전수위주의 들이먹이는 교육방법, 배운 것을 그대로 외워바치는 기억위주의 암기식학습방법”³²⁷이라고 기존의 관성적인 교육방법을 스스로 비판하고 있다. ‘지식을 뒤주 안에 넣어주는 교육’은 교사가 특정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의미하는 반면, 지능교육은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지능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고활동의 조직자,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³²⁸

2006년 4월 27일자 『교육신문』에서는 지능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과학 수업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지능교육은 순수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과제와 문제점 제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의 설정과 해결방법 구상, 가설에 근거한 추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실천활동의 조직, 자료의 분석과 결론의 도출, 결론의 음미, 정식화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빛의 본질에 관한 학습에서 교원은 “빛이 입자인가

³²⁵ - 최청의, “지능교수와 깨우쳐주는 교수방법”, 『교육신문』, 2006년 4월 20일.

³²⁶ - 강동춘, “지능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후비를 키워내기 위한 중요한 요구”, 『교원신문』, 2004년 2월 5일.

³²⁷ - 리영복,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실력있는 혁명인 재육성의 중요담보”, 『교육신문』, 2005년 1월 27일.

³²⁸ - 조영철·김철, “지능교수방법을 적극 탐구해나가자”, 『교육신문』, 2005년 7월 28일.

파동인가”라는 탐구 과제를 제기하고, 입자설과 또는 파동설의 가설을 설정한다. 이 가설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사고하고 탐구하면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과 조작 활동을 하도록 한다. 실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입자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순점을 발견하도록 하여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탐구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분석 종합능력, 비교대비능력, 추상일반화능력, 구체화능력, 판단력 등 사고력의 구체적 요소들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³²⁹ 이는 절차적으로 과학자들의 추론과정을 밟아가는 것으로 일종의 탐구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방법, 특히 시험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학교의 시험 방법은 단답식 서술형이 주를 이루며, 대학교육의 경우에도 주로 책의 장, 절 제목을 주제로 내고 그것에 관해 서술하는 식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서 시험을 본다고 한다.(K039, D001) 2007년 2월 1일자 『교육신문』 사설에서는 시험방법의 개선이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기존의 시험은 “외워 바치는 식”의 시험이었는데, 그러한 시험 방법 하에서는 학생들이 평소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기간에만 “돌격식”으로 공부를 하여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외우기 때문에 “힘은 곱절이나 들지만 시험을 친 다음에 남는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리적인 인식과 응용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기술

³²⁹- 리영환, “지능교육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교육신문』, 2006년 4월 27일.

하고 있다.³³⁰

2007년 6월 4일자 『교육신문』에는 시험 출제방식을 개선한 해주 제2 사범대학의 모범사례가 실려있다. 이 대학의 교육심리학강좌에서는 답을 그대로 외워서 서술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이론의 원리 인식과 응용에 관한 문제, 도식작성문제 등을 도입하고, 문제출제 유형도 주관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도표에 기입하기, 빈칸에 써넣기, 짝짓기 등으로 다양화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6년에 출판된 『고등교육』지에 실린 글에서는 시험 출제방식에 관한 세계적 추세는 계산문제보다는 이론 분석에 관한 문제, 단순한 지식보다는 지식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시험의 난이도와 신뢰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³³¹ 이렇게 시험방법의 개선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 사례가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다양한 시험방법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³³²

교육방법의 개선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교육의 ‘현대화’라고 불리는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교육매체의 개발과 활용이다. 특히 대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육의 ‘현대화’는 전자도서, 동화상자로 등 전자매체의 활용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한 모의실험이나 설계 등 CMI(Computer Managed Instruction)와 CAI(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컴퓨터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³³⁰ - 『교육신문』, 2007년 2월 1일.

³³¹ - 강일, “세계교육발전추세 - 시험내용개선 움직임”, 『고등교육』, 제6호 (2006), p. 37.

³³² - 2004년까지 대학교원으로 활동했던 새터민과 2006년까지 초등학교 교원으로 활동했던 새터민 등에 대한 몇 건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학교현장에서 시험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새터민의 증언은 지역별, 시기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교육 등을 포괄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교원 대상의 신문과 정기간행물에는 “코스모스”, “전자공학 1.0”, “리상” 등 북한이 자체 개발하였다는 교육지원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 프로그램들을 널리 활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³³³ 또한 2007년 1월에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원격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실시간강의와 비실시간강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공장대학과 연결하여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³³⁴

대학교육에서는 학과통합, 수업연한 단축, 학점제 도입, 선택과목 도입 등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개혁개방기 중국에서 대학 통폐합과 종합화, 학과 통합, 학생수 증원을 통한 규모효율 개선 등이 추진된 바 있는데, 현재 북한의 대학에서도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이러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학과를 통합하여 학과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수업연한을 5~6년에서 4~4.5년 정도로 단축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2년에는 기존에 6년제로 운영되던 리과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는 등 대학 교육기간을 전반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4개 대학에서 대학 졸업생들을 박사원에 바로 진학하도록 한 것도 전반적인 수업연한 단축 조치의 일환이다. 2002년에는 정보기술부문의 전문대학, 대학의 정보기술전문학과도 여러 개의 학과와 학과목을 통합하거나 신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³³⁵

333 - 김진균, “실습교육에 동화상자료를 받아들여”, 『고등교육』 제3호 (2006), p. 33; “교육지원프로그램 <전자공학> 1.0을 리용하면: 강계공업대학”, 『고등교육』 제3호 (2006), p. 53; 리조양·김영철, “교수의 중심요소선택과 시간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고등교육』 제6호 (2006), p. 40; 『교육신문』, 2007년 1월 25일; 『교육신문』, 2007년 2월 1일.

334 - 『교육신문』, 2007년 1월 25일.

335 - 『조선중앙년감』, 2003년.

또한 최근에 김책종합공업대학, 리과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 이 공계열의 주요 대학에 학점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다만 학년제를 완전히 학점제로 전환하지는 못하였고 학년 승급과 유급, 선수과목과 후속과목 등을 학년제와 유사하게 통제하면서 학점제를 시행하는 학년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다.³³⁶

선택교과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도입하였는데 선택과목의 수는 두 세개로, 시간비중으로는 전체 교육과정의 5% 미만에 불과하다. 즉 아직까지는 선택교과제가 도입되는 초기 단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교육과정의 특성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수인력과 교실, 기자재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실질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나. 관행의 확대: 입시비리와 시험부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의 발전을 선도할 대학졸업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교육적 과제의 해결은 입시비리와 시험부정 등의 사회적 관행의 확대로 인해 난관에 봉착한다.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안면관계에 기초한 사적 연결망과 같은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블라트(blat)’라고도 하는 사회

³³⁶ -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 2006년 제3호에는 학점제와 선택교과제에 관한 글이 실려 눈길을 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세계 각국이 ‘능력교육’ 추세에 맞게 대학원에서 시간제가 아닌 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학점제가 능력에 따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목적의식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만든다고 그 장점을 지적하고 있다. 선택교과제 또한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학습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윤철, “최근 여러 나라 박사원교수관리제에서 주목되는 문제”, 『고등교육』 제3호 (2006), p. 58.

I
II
III
IV
V
VI

주의 사회의 비공식 네트워크는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자본의 일종인데,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는 기업활동을 위해 국가재산의 소유권에 접근하거나, 시장정보와 관료적 의사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개인의 사적인 재산 증식을 위해 동원되었다. ‘자유 시장’이라는 환경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비금전적 상호관계에 금전이 개입되면서 블라트가 부패로 변질된 것이다.³³⁷ 북한에서는 90년대 이후 안면관계에 기초한 비공식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주로 생계 해결을 위한 다양한 편의 확보와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 이후 대학 입시와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블라트의 관행이 작용하면서 대학 선발과 교육과정 이수가 능력이 아닌 ‘안면관계’와 ‘뇌물’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2004년 7월 15일자 『교원신문』에 실린 기사³³⁸를 통해 부정입학과 시험부정의 관행이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제하에 실린 이 사설에서는 대학 교원들이 “교수사업에서 교정의 룰리를 티끌만치라도 어긴다면 그 후과는 당과 국가앞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막대한 저해를 주는 엄청난 죄로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고지식하고 청렴결백하며 량심적인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설은 “교정의 룰리를 어기며”

³³⁷- Klavs Sedlenieks, “Cash in an Envelope: Corruption and Tax Avoidance as an Economic Strategy in Contemporary Riga,” Karl-Olov Arnstberg & Thomas Borea, eds. *Everyday Economy in Russia, Poland and Latvia* (Stockholm: Sodertorns hogskola, 2003), pp. 40~41.

³³⁸-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자”, 『교육신문』, 2004년 7월 15일.

“공명정대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행동한” 교원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강한 논조의 서술 방식으로 보아 이러한 행위가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큰 문제점이 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새터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비양심적인 행위는 안면관계와 뇌물에 의한 입시비리와 시험부정임을 알 수 있다. 90년대 말 이후 수능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대거 부정입학함으로써 인해 대학교육과 졸업생의 질적 수준이 크게 하락하였다. 경제난 이전 시기에도 안면관계에 의한 부정입학은 존재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1986년 12월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대학생모집사업에서 직권과 정실안면관계가 작용하여 간부자녀들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실력이 낮아도 대학에 갈수 있다”고 입시비리를 비판한 바 있다.³³⁹

경제난은 “만성적인 사회주의 병리”인 안면관계에 의한 부정입학을 생계형 비리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경제난 시기에 국가적 지원이 중단되자 대학당국은 자체적으로 학교 유지와 교원의 식량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했는데, 부정입학을 통한 자재와 식량 확보도 그 한가지 방도가 되었다. 지방 대학들은 “석탄 한 차”, “도료 몇 통”과 같은 조건으로 자격 미달의 입학생을 받아들였다.(K040) 한 중앙대학에서는 대학 당위원회에서 입학 정원 250명 중 열 명 정도를 지원금을 받고 입학시켜 학교 유지 비용에 충당하는 “당적 해결 방안”을 결정·집행하였다고 한다.(집담회)

2000년대 들어서는 입시비리의 규모가 커지고, 금전적 거래의 성격

³³⁹- 김정일,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과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9), p. 170.

I
II
III
IV
V
VI

이 명확해졌다. 90년대 이전에는 부정입학은 주로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것이었고 물질적 보상은 부수적인 것이었다. 고작해야 “좋은 술 몇 병, 좋은 시계 한 두개” 정도가 거래의 대가로 지불되었다. 지금은 안면관계도 작용하지만, 주로 현금의 형태로 지불되는 뇌물이 거래의 핵심이다. 대학의 급과 학과에 따라 거래가격도 일정하게 정해져있다고 한다. 지역과 학교, 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가격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중앙대학의 인기학과는 수십만원, 지방공업대학의 인기학과는 십여만원, 지방대학 일반학과는 수만원 정도의 선인 것으로 추정된다.³⁴⁰ 지방대학이나 단과대학들은 “컴퓨터를 한 대만 바치면 학생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도 한다.(집담회)

부정입학이 서로의 인간관계에 기반하여 편의를 교환하는 전통적인 블라트가 아니라 일종의 부패 행위로 변질되었다는 점은 이제는 부탁의 의미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 제공을 입학 여부와 연동시키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고여도 못 붙을 적에는 그 돈만 바치고 무효가 되었지만”, 이제는 일단 돈을 받고 결과적으로 그 학생이 합격이 되면 “고대로 잡수시는 것이고”, 불합격되면 “고대로 돈만 떨어준다”는 것이다.(K041, D001)

경제난 이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소수에 불과하였다면,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참말로 공부 잘한 아이들”을 제

³⁴⁰ - 새터민들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거래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2004년 양강도의 공업대학 IT 관련 학과는 10만원, 다른 학과는 1만 5천원~1만 7천원 정도, 지방 의과대학은 10만원이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액수가 올라감(D001), 2000년 평양의 의학전문학교는 5천원(7·1조치 이후 기준으로 10만원), 의과대학은 1만원(7·1조치 이후 기준으로 20만원)(집담회), 2006년 평양의 의과대학은 50만원, 약대는 30만원(K041) 등이다.

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건 적건 “돈을 찢어주고” 입학한다고 한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지역과 대학의 급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 잡아도 30% 이상으로 추정된다.(K040, 집담회) 지방 대학의 교원 출신 새터민은 2004년을 기준으로 주요 중앙대학은 60%, 지방대학은 70~80% 정도의 학생이 크건 작건간에 안면관계나 뇌물을 통해 입학한다고 말하고 있다.(D001)

부정입학은 주로 학장이나 간부가 가지고 있는 ‘예비 폰트’를 활용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년도 가을에 교육성에서 대학별로 입학정원을 배분하는데, 이때 주요 학과는 정원을 결정하여 제시하고, 일반적인 학과는 대학에서 조정하게끔 한다. 주요 학과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먹을 알”, 즉 입시를 통한 거래의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이때 교육성 간부들과 대학 간에도 일종의 흥정이 작용하여 모집정원의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여 “뒤에서 받아낸 예비 숫자”는 입시 거래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시험의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도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한 지역 내 대학의 교원들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입학시험 감독과 채점시에 “미리 연락을 받는다” 시험 중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는 방식, 시험지에 표시를 해서 채점 시에 이를 고려하는 방식, 일단 합격시키고 시험지를 조작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렇게 부정행위에 의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는 쉽지 않다. 부정입학생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로 입학한 학생이라도 군제대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력이 매우 떨어진다.³⁴¹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용품이나 식량 등을 제공하고 과제물 작성이나 졸업논문 작성

I
II
III
IV
V
VI

에 도움을 받는다. “자격증만 따고 나가는 ‘날라리’하는 학생들” 중에는 교원에게 뇌물을 주고 졸업논문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경제난 이전에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학 교원들도 “하도 (먹고살기) 바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 중에는 “교수들한테 뇌물을 고이고 봐 달라, 이런 식으로 학업을 그냥 쪽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K040)

물론 진급과 졸업을 하기 위해 교원들에게 “뇌물을 고이는” 행위 역시 이전 시기에도 보편적으로 볼 수 있었던 행위이다. 이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뇌물이라기보다는 “선물”의 의미를 지니는 “술 한 병, 외제 담배 몇 갑” 정도를 제공하고 “시험에 대한 힌트를 얻거나 점수를 좀 올려 받는” 정도였다.(K040) 그런데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려면 과목당 얼마를 고여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퍼져있을 정도로 성적거래행위가 보편화되었다고 한다.(K041) 대학 교원 출신의 한 새터민(D001)은 2000년대 중반 지방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적거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강좌별로 생활수준이 틀려요. 여느 곳에서 자기 지식과 능력으로 돈 버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잘 받아먹는 강좌가 있지요. 바로 촌지 잘 받는 강좌가 있어요. 그건 김일성주의 강좌, 사회정치 과목들이에요, 혁명력사강좌, 김일성주의 강좌, 철학이라든가 정치경제학 같은 것은 사회정치 과목 중에선 조금 급이 낮고, 김일성주

341- 교원 출신 새터민들은 제대군인의 학력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말한다. 물론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대군인들은 수업시간에 “콘크리트 머리를 해가지고 말뚝처럼 앉아있다”는 것이다.(D001) 군대에서 십년동안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시험지에다가 총을 그려 놓는다”고도 한다.(K041) 2003년 8월 21일자 『교원신문』에서는 제대군인의 교육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학에서 예비교육을 통해 제대군인들이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엄격한 시험제도를 통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의강좌, 혁명역사강좌는 아주 그냥 배를 내밀죠. 3점은 졸업, 4점은 도급 간부 발령, 5점 만점이 중앙급 간부 발령 점수이기 때문에. 아무튼 촌지 받는 것으로 주말마다 교원총회 할 때 문제가 제기돼요. 그 사람들 노골적으로 현금을 마구 요구한다나 봐요. 강의 하루 빼주고 얼마씩 받고 이런 식으로, 빠달이라고 하는데.

성적을 올리기 위한 개인적인 뇌물 이외에도 학급 전체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드는 집단적인 ‘세부담’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대학에서는 학기말 시험 때 학급에서 돈을 걷어 담배 한다스나 쌀 몇 kg 정도를 마련해서 교원에게 출제 방향을 문의하러 간다고 한다. “선생님 한문제만 알려달라”고 하면, 어떤 교원은 선물로 가지고 간 것을 밖으로 던지기도 하고, 어떤 교원은 출제 방향을 대략 알려준다고 한다. 그러면 “밤새 온 학급이 달라붙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집담회).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러한 관행이 더욱 활성화되어 일부 학교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비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식으로 시험 준비를 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전 시기에 생필품으로 제공했던 선물은 이제는 시험을 본 후에 교원에게 한달 임금 정도의 돈으로 제공하는 집단적인 금전 거래로 바뀌었다고 한다.(D001) 8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한학기 지나면 벽에 시커먼 글씨로 퇴학생 명단을 붙여놓을” 정도로 대학의 성적 관리가 확실했지만, 성적을 둘러싼 거래가 활성화된 지금은 “공부 못해서 퇴학당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한다”고 한다.

입시부정과 성적거래가 만연하는 북한의 대학 실태 속에서는 배출된 졸업생의 질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주사도 제대로 놓을 줄 모르는 의대 졸업생이나 설계도면도 그릴 줄 모르는 공대 졸업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K041, D001)³⁴² 새터민들은 대학생들에

³⁴² - 한 새터민은 이런 졸업생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사람 비위 맞출

I
II
III
IV
V
VI

대한 사회적 평가가 “옛날같지 않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대학생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돈만 내면 대학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만연”해서 “흔하게 빠진 게 대학생”이라고 여긴다고 한다.(K040)

줄 알고 눈치 맞출 줄 알고”, “예절이 더 밝고 인상이 항상 좋다”고 한다. 이러한 관찰은 흥정과 안면관계가 전면화된 대학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VI

결론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부터 늘기 시작한 새터민 수는 연간 두 자리 숫자를 보이다가 1998년부터는 세 자릿수로 늘었고 2002년부터는 연간 1천 명을 넘어 2007년 2월, 누계 1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탈북동기와 인생경험이 각자 다르지만 북한생활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북한실상에 관해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1만 명 이상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만큼 새터민은 희소성을 잃게 되었다.

1만 명이 넘는 새터민의 존재는 북한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증언수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입견과 주관이 강하게 반영된 각기 다른 사람의 증언내용을 교차 비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점에 주목하여 통일연구원이 10여년 동안 수집한 것을 포함한 여러 새터민의 증언을 중심으로 북한의 변화실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새터민의 증언을 중심으로 북한의 각 분야에서 발견된 특징적인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뿐 아니라 어느 국가든 그 국가의 정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어떻게 권력이 행사되느냐인데 이는 통치이데올로기, 권력구조, 정치엘리트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통치이데올로기는 권력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권력구조는 권력행사의 장이며 정치엘리트는 권력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90년대 후반 이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보여왔다.

우선 북한은 목표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을 고수하는 가운데 선군사상을 실천이데올로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주의화하고 있다. 즉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더불어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정하고 선군사상의 일색화 운동을 전사회적으로 전개하고 있

I
II
III
IV
V
VI

을 뿐 아니라 김일성을 선군사상의 창시자, 김정일 위원장을 선군사상의 구현자로 구분해 오던 것을 2005년 초부터 선군사상과 선군정치 모두 김정일 위원장이 창시한 것으로 바꿈으로써 선군사상과 김정일 위원장의 일체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군정치·선군사상이 북한당국 의도대로 북한주민들에게 내면화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북한에서 정치학습 강사를 했던 새터민은 북한주민이 “정치학습과 그 내용에 대해 싫증을 낸다”고 증언하고 있다.

통치이데올로기에서 선군사상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실리사회주의’의 등장이다. ‘실리사회주의’는 2001년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문건이 발표되면서 정식화되어 북한체제의 개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리사회주의’는 경제분야에서는 7·1조치라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으로, 대외분야에서는 전통적 적대국가와의 관계정상화 추구로 구현되고 있다. ‘실리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위로부터의 주도적인 ‘개혁’을 합리화하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나아가 선군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선군실리사회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선군과 실리 모두 북한당국으로서는 체제유지에 효과적이고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권력구조면에서는 수령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수령’으로 불려지지 않고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절대시된 ‘수령’이 ‘혁명의 수뇌부’로 대체되었지만 ‘수령’과 ‘혁명의 수뇌부’는 동어이음에 불과하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머리인 ‘혁명의 수뇌부’라는 호칭을 통해 ‘수령’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고 혁명의 수뇌부·당·군대·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혁명과 건설의 주체라는 주장에서 수

령제의 유지를 쉽게 간취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령제는 당 기능과 권위의 하락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심장이고 당조직은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으로서 뇌수의 명령을 팔과 다리에 전달하는 인전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당은 제대로 기능하지만 지방당을 포함한 하급당으로 내려올수록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망가진 하급당과 지방당의 조직이 아직까지 완비되지 않았고 당조직의 부패로 중앙당의 지시와 명령이 말단 세포단위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중도에 흐지부지되기 때문이다. 당의 권위도 많이 추락했다. 주로 고난의 행군기에 당일꾼들이 보여준 부패한 모습과 인민생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한 북한주민들이 더 이상 당을 믿지 않게 된 데 따른 것인데, 당 권위의 약화는 선군정치가 강조되면서 군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도 원인이 있다.

권력구조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변화는 국방위원회의 강화이다. 최근 국방위원회가 하부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현재 국방위원회는 우리의 청와대 정책실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와 같이 중대한 국가대사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기구로 확대·개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교체 문제는 어떤 권력이나 제도로도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런 변화의 추동력이라는 점에서 어떤 체제이든 권력구조의 변화 분석에서 항상 주목받는 주제이다. 북한의 세대를 정치적·사회경제적 경험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혁명 1세대는 항일빨치산세대, 2세대는 전쟁 및 전후 복구세대, 3세대는 3대혁명 세대, 4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이다.

현재 북한 권력구조의 최상위층은 1, 2세대가 차지하고 있으나 중추적인 허리역할을 하는 세대는 3세대인데, 특히 대남사업부문에서는 혁

I
II
III
IV
V
VI

명 2세대에서 3세대로의 교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3세대들은 3대혁명의 주축세력이고 유일사상체제의 기초축성시기(70년대 초반)에 기여했으며, 사회주의체제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세대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의 시혜, 정교한 사회주의 교육제도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투철한 혁명의식과 체제에 대한 남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를 전망할 때에는 좀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다.

한편 7·1조치 이후의 북한 경제정책은 공급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만하게 운영되던 계획경제를 대폭 조정하고 하부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수요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다. 또한 이미 확산된 시장을 국영기업소 형식으로 개편함으로써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계획의 틀 내에서 관리하면서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계획 유지비용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생활비 자체가 물질적 유인이 되도록 개별적인 차원에서 노동의욕을 증대시키고 기업소 차원에서도 국가 납부금을 제외한 수입을 자체 배분하도록 하여 구성원들에게 부여하는 물질적 유인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려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이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하에 가격현실화, 유인체계 개편, 독립채산제의 강화, 물자교류시장의 효과적 활용, 종합시장 도입, 배급제 유지 등이 추진되고 있다. 가격현실화는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축소시켜 계획에서 시장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고, 지난 시기 경제적 실패 요인이 분배의 '평균주의'에 있다고 보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인체계를 바꾸었다. 또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소가 생산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가격제정도 국가적·전략적 의의가 있는 주요 물자들을 제외하고는 생산단위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여유노력을 적극 동원하여 수요가 있는 제품을 찾아 생산판매할 것을 장려하고 있고 기업소 차원에서 노동력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공급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재의 계획적 공급만으로는 물자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물자교류시장의 효과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고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했다. 각지에 개설된 종합시장은 하나의 단위조직으로 국영기업소로 체계화되어 운영되도록 했는데, 이에는 시장을 규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사용료와 소득의 일부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을 늘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리고 배급제도는 사회주의 분배제도의 근간으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어렵기 때문에 배급제를 유지하되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줄이는 방식으로 축소했다. 즉 배급제는 공식적으로 유지하되 수매가격을 높여 농업 생산자들에게 생산성 증대의 물적 유인을 제공하고 국정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주민들이 배급에 의존하는 비중을 낮추어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정한 것이다.

결국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가운데 공식적 제도의 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조직에 새로운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는 ‘실리’를 추구하되 계획경제의 근간은 유지하는 것이 7·1조치를 중심으로 한 2000년대 북한 경제정책의 핵심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산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개인들의 노동의욕이 높아지고 기관별 책임감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원자재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산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동농장의 경우는 비료 및 농업 자재 등이 부족하여 생산량이 계획량에 미치지 못하

I
II
III
IV
V
VI

고 있다. 더욱이 공장·기업소는 생산물 지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국가수납분을 금액으로 제출하고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협동농장의 경우는 여전히 농업 생산량이 계획달성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생산량마저 부족하여 성과급 자체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기업소의 경우도 원자재의 조달, 생산, 기업소의 운영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국가에 수납하는 몫을 제외한 수입을 자체 배분하도록 했는데, 그 이후 기업소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일정 수입을 기업소에 제출하고 다른 일로 생계비를 조달하는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분명히 기업소 단위의 자력갱생 유인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전체경제가 구체적인 생산물 지표 계획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획생산 체제에서 각 기업들이 '지표별 계획'과 상관없이 국가수납분과 생활비 보장을 위한 '벌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전체적인 생산정상화는 당분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동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공식적 제도변화와 북한주민들이 학습하고 체득한 경제활동 방식은 주민생활과 의식 전반을 바꾸어 놓았다. 우선 7·1조치 이후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는 크게 늘어났다. 7·1조치로 개인 상행위 등이 허용되자 일에 대한 자세가 한층 더 능동적으로 되고 이에 따라 사경제활동이 급증했다. 하지만 주민의 생활형편은 기대와는 달리 악화되었는데 임금인상으로 인한 통화량 급증과 공급물자 부족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급속한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된 때문이다.

7·1조치 이후 북한주민 생활에서 발견되는 뚜렷한 특징의 하나는 신흥부자의 등장과 그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인센티브제의 강화는 높은 임금을 받거나 시장에서

의 사경제활동으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낳은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도 줄어들어 더욱 빈곤해졌다. 이와 더불어 비사회주의적 행위 내지 일탈행위도 증가했다. 생활총화 불참, 무단결근, 뇌물수수, 직권남용과 물자유용, 불법 의료, 주택 암거래, 국경 밀무역, 절도, 폭행, 강도 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7·1조치 이전과 비교할 때 개인의 돈이나 물품을 훔치기보다는 은행이나 회사를 상대로 절도를 하거나 국가소유 물자를 훔치는 등 규모가 커진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주민생활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생활의 변화가 의식의 변화를 불러오고 의식의 변화는 다시 생활의 변화를 야기한다. 7·1조치 이후 개인들의 상행위가 공식화되고 영역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자본주의와 상품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자본주의문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당국이 반자본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로 중국을 왕래하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 외국가요 테이프와 영화CD 등이 반입되고 있고 외부 실상에 관한 정보들이 전파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적이었던 대남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의류, 화장품, 가전제품 등 남한 상품에 대한 선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최근 남한 상품이 좋다는 인식이 북한의 주요 시장에 널리 퍼져 남한산은 의례적으로 고가에 흥정없이 매매된다.

북한주민의 의식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가치의식의 변화이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지속되고 부분적·제한적으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의 가치의식도 정치·사상을 우선으로 하는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에서 돈·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돈이다. 7·1조치에 따라 사실상 배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매달 받는 노동에 대한 금전

I
II
III
IV
V
VI

적 대가가 명실상부하게 ‘생활비’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고 7·1조치 이후의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으로 인해 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의식의 변화는 교육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90년대 중반 경제난의 영향으로 교육 인프라 파괴와 수업 운영의 파행, 교권 하락 등의 문제를 겪었던 북한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난 시기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그 몫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었다. 고난의 행군기 이후 공교육 복구가 시작되었지만 이는 공교육 전반에 대한 균형잡힌 국가적 지원 강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2000년대 들어 경제난 타개와 국가발전을 위해 교육 부문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된 것은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라는 일종의 발전교육론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과학기술교육, 특히 IT분야 인재의 집중적 육성, 둘째,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의 발굴과 양성에 중점을 두는 교육 체계로의 개편, 셋째,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컴퓨터 부문에서 재능있는 인재를 조기에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수재교육 강화가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의 기본 전략으로 선택되었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컴퓨터수재 양성을 위한 조기교육체제가 구축되었다. 대학교육에서도 수재반을 설치하여 개별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연한을 단축하며, 대학과 박사원 교육 과정을 연계하는 등 20대, 30대 박사의 조기배출을 위한 속성교육이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후반에 중등수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를 200여개 이상 설립하고 중등교육체계를 평양제1중학교, 도제1중학교, 시·군·구역제1중학교, 일반중학교 순의 서열화된 구조로 구성함으로써 모든 중등학생들을 능력별로 세분화하여 선발하고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유능한 교사나 교육기자재와 같은 교육 자원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의 기회도 수재학교로 집중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 교육 투자가 과학기술분야의 수재교육을 중심으로 배분되는 한편, 공교육 전반에서는 교과서·학용품·책걸상 등의 교구 비품에서부터 학교 시설 유지비에 이르기까지,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였던 공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이와 함께 사교육 등장이라는 획기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이는 시장 확대가 가져온 경제적 계층분화와 제1중학교 및 대학진학의 수요 급증이라는 수요 측면의 요인과, 경제난 이후 교원들의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 맞물린 결과이다.

이와 같은 일반 공교육 부문에 대한 교육 투자의 감소와 평등주의적 교육정책의 실질적 폐기, 교육에서의 개인적 영역의 확대는 그동안 효과적으로 지속되어온 무상교육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수재교육기관이 아닌 일반학교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교육의 질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교육방법 및 시험방법 개선, 첨단과학기술매체의 활용과 같은 교육의 ‘현대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한편, 입시비리와 시험부정의 확대 등 사회주의적 관행에 의한 정책의 왜곡과 교육 수준의 전반적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 교육의 변화는 과학기술 분야의 수재양성을 통하여 ‘단변도약’을 이루려는 강한 정책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 난국 타개를 위해 인적자원 이외의 별다른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 부문의 유일한 전략일 수도 있다. 이 전략은 한편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

I
II
III
IV
V
VI

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의 불균등한 발전이 가져올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새터민의 증언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교육 분야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내용들은 증언한 새터민의 주관에 강하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결과들은 새터민이 보고 느낀 북한변화의 특징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완전히 객관적인 전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몇가지 특징적인 변화들은 북한변화와 관련 있는 다른 자료들에 의해 더 세밀히 검증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국내 문헌>

-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 서울: 높이깊이, 2005.
- 노스. 이병기 역. 『제도, 제도변화, 경제적 성과』.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96.
-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6.
-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서울: 선인, 2004.
- 조정아.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서울: 정토출판, 2006.
- 최수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최신림·이석기. 『북한의 산업관리체계와 기업관리제도』. 서울: 산업연구원, 1998.
- 최완규. 『북한도시의 위기와 변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북한 문헌>

- 김정일. 『과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남진우 외. 『사회주의교육학』.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박웅전. 『열매는 봄날에』.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_____. 『조선대백과사전 1』.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_____. 『조선대백과사전 9』.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사회과학출판사 편.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_____. 『조선대백과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_____. 『김정일선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연구소. 『2002년 재생산건강조사』.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연구소, 2003.

<외국 문헌>

- Li, Cheng. *China's Leaders: The New Generation*. Lanham, Md.: Roman & Littlefield, 2002.
-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2. 논문

<국내 문헌>

- 공용철. “KBS 스페셜-2007 현지르포, ‘시장, 북한을 바꾸다.’” 『격월간 웹진, 민족화해』. 제28호, 2007.
- 남성욱. “북한의 식량난과 인구변화추이, 1961~1998.”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 1999.
-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1999.
- 송경준. “북한의 IT교육 현황과 특징.”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2005.
- 이기동. “선군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이우영 외 『화해·협력과 평화변영, 그리고 통일』.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5.
- 이석기. “계획화 체계의 약화, 자발적 시장화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2호, 2005.
-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17권 2호, 2005.
- 이향규. “해방 후 50년간 남북한 교육기회의 확대 과정과 특징.” 『한국 교육사교 연구노트』. 제14호, 2000.
- 임근숙. “북한의 자영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 『통일경제』. 제80호, 2002.
- 정진화. “북한의 노동체제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 『동향과 전망』. 제62호, 2005.
-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

- 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 최봉대·구갑우. “북한 도시 농민시장 형성과정의 이행론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6권 2호, 2003.
- 최준택. “김정일의 리더십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7.
- 하재룡. “북한의 산업화와 노동정책.” 『노동문제논집』. 14권, 1997.

<북한 문헌>

- 강 일. “세계교육발전추세 - 시험내용개선 움직임.” 『고등교육』. 제6호, 2006.
- 교원신문사.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대학교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령도(1).” 『교원선전수첩 1』. 제1호, 2003.
- 김경철. “우리 식의 수재교육체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령도.” 『교원선전수첩』. 제1호, 2006.
- 김락·최경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대학교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온 위대한 령도(1).” 『교원선전수첩』. 제1호, 2003.
- 김명수. “컴퓨터수재교육의 특징과 요구.” 『고등교육』. 제6호, 2006.
- 김영인. “선군시대에 수재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신 현명한 령도(1).” 『교원선전수첩』. 제1호, 2004.
- _____. “선군시대에 수재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신 현명한 령도(2).” 『교원선전수첩』. 제2호, 2004.
- 김정길.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 『경제연구』. 1호, 2002.
- _____.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선집 13』.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김진균. “실습교육에 동화상자료를 받아들여.” 『고등교육』. 제3호, 2006.
- 리조양·김영철. “교수의 중심요소선택과 시간배정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고등교육』. 제3호, 2006.
-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6.
- 장관호. “세계교육발전추세 - 대학교육단계에서 수재선발지표와 내용.” 『고등교육』. 제6호, 2006.
- 장성철. “과학기술교육내용을 개선하는것은 정보산업시대의 근본담보.” 『교원선전수첩』. 제8호, 2005.
- 전윤철. “최근 여러 나라 박사원교수관리제에서 주목되는 문제.” 『고등교육』. 제3호, 2006.
- 조 현. “교육강령집행에서 얻은 경험.” 『고등교육』. 제4호, 2006.
- 한은희. “다른 나라 대학들에서 수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등교육』. 제4호, 2006.
- 한정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원칙적 문제.” 『경제연구』. 4호, 2002.

<외국 문헌>

Manheim, Karl. “Consciousness of Class and Consciousness of

Generation.” Manheim, Karl. ed. *Essays on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KP, 1952.

Sedlenieks, Klavs. “Cash in an Envelope: Corruption and Tax Avoidance as an Economic Strategy in Contemporary Riga,” Arnstberg, Karl-Olov & Borea, Thomas. eds. *Everyday Economy in Russia, Poland and Latvia*. Stockholm: Sodertorns hogskola, 2003.

Yahuda, Michael. “Political Generation in China.” *China Quarterly* 80, December 1979.

3. 기타

<국내>

『오늘의 북한소식』.

『KDI 북한경제리뷰』.

<북한>

『교원신문』.

『근로자』.

『로동신문』.

『조선신보』.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예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영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11)-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3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4	東北亞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변영: 평가와 전망		9,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훈,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열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남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rn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띠또레뜨지(표지)와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재생용지 이라이트지(본문)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KINU 연구총서 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통일연구원


9 788984 794177 93340
ISBN 978-89-8479-417-7